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

2026. 2.



국 회 국 토 교 통 위 원 회

목 차

1. 국정감사 개요 ····· 1

가. 감사의 목적 ····· 1
나. 감사기간 ····· 1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 2

2. 국정감사 실시경과 ····· 3

가. 실 시 경 과 ····· 3
나. 감사반의 편성 ····· 4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6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7

가. 국토교통부 ····· 7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53
다. 새만금개발청 ····· 54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 55
마. 한국도로공사 ····· 66
바. 한국철도공사 ····· 73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78
아. 한국공항공사 ····· 85
자. 한국부동산원 ····· 88
차. 주택도시보증공사 ····· 91
카. 한국교통안전공단 ····· 98
타. 국가철도공단 ····· 102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105
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106
거. 한국국토정보공사 ····· 107
너. 국토안전관리원 ····· 109

더. ㈜에스알 ····· 112
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113
머. 주택관리공단㈜ ····· 114
버. 코레일관광개발㈜ ····· 115
서. 코레일로지스㈜ ····· 116
어. 코레일네트웍스㈜ ····· 117
저. 코레일유통㈜ ····· 118
처. 코레일테크㈜ ····· 119
커. 항공안전기술원 ····· 120
터. 새만금개발공사 ····· 121
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122
허. 건설기술교육원 ····· 123
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124
노. 국립항공박물관 ····· 125
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126
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127
모. 경기도 ····· 128
보. 서울특별시 ····· 132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38

가. 국토교통부 ····· 138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82
다. 새만금개발청 ····· 183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 184
마. 한국도로공사 ····· 195
바. 한국철도공사 ····· 202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207
아. 한국공항공사 ····· 214
자. 한국부동산원 ····· 217
차. 주택도시보증공사 ····· 219
카. 한국교통안전공단 ····· 226

타. 국가철도공단 ····· 229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232
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233
거. 한국국토정보공사 ····· 234
너. 국토안전관리원 ····· 235
더. ㈜에스알 ····· 238
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239
머. 주택관리공단㈜ ····· 240
버. 코레일관광개발㈜ ····· 241
서. 코레일로지스㈜ ····· 242
어. 코레일네트웍스㈜ ····· 243
저. 코레일유통㈜ ····· 244
처. 코레일테크㈜ ····· 245
커. 항공안전기술원 ····· 246
터. 새만금개발공사 ····· 247
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248
허. 건설기술교육원 ····· 249
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250
노. 국립항공박물관 ····· 251
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252
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253
모. 경기도 ····· 254
보. 서울특별시 ····· 258

5. 증인 및 참고인 ····· 264
가. 기관증인 ····· 264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 290

※ 참고자료 ····· 301

1. 국정감사 개요

가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 ·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나 감 사 기 간

○ 기　　간 : 10월 13일(월) ~ 10월 29일(수)

○ 중앙감사(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10월 13일(월), 10월 14일(화), 10월 16일(목), 10월 21일(화),

10월 23일(목), 10월 27일(월), 10월 29일(수)

○ 지방감사(지방자치단체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 시정사항 파악)

10월 20일(월) (1일)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구 분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소관	o 국토교통부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새만금개발청 o 한국토지주택공사 o 한국도로공사 o 한국철도공사 o 인천국제공항공사 o 한국공항공사 o 한국부동산원 o 주택도시보증공사 o 한국교통안전공단 o 국가철도공단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한국국토정보공사 o 국토안전관리원 o ㈜에스알 o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o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o 주택관리공단(주) o 코레일관광개발(주) o 코레일로지스(주) o 코레일네트웍스(주) o 코레일유통(주) o 코레일테크(주) o 항공안전기술원 o 새만금개발공사 o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o 건설기술교육원 o 공간정보품질관리원 o 국립항공박물관 o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o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32)
지방자치 단체	o 경기도 o 서울특별시
	(2)
계	34

2. 국정감사 실시경과

가 실 시 경 과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 및 추가(변경)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0. 13.)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0. 16.)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0. 21.)

○ 국정감사 실시

: 10월 13일(월) ~ 10월 29일(수)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 2. 10.)

나 감사반의 편성

가. 감사는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하되 10.20.(월)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2개의 반(감사 1·2반)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나. 그 외 국감실시 중 분반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합동감사반>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 〃 민홍철 〃 〃 박용갑 〃 〃 손명수 〃 〃 송기헌 〃 〃 신영대 〃 〃 안태준 〃 〃 염태영 〃 〃 윤종군 〃 〃 이건태 〃 〃 전용기 〃 〃 정준호 〃 〃 천준호 〃 〃 한병도 〃 〃 한준호 〃	감사위원 : 권영진(국민의힘) 〃 김도읍 〃 〃 김은혜 〃 〃 김정재 〃 〃 김종양 〃 〃 김희정 〃 〃 배준영 〃 〃 엄태영 〃 〃 윤재옥 〃 〃 이종욱 〃 〃 정점식 〃 〃 황운하(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사무보조자	① 위원회 직원(21인)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행정실장 정종선 입법조사관 김미량 이재명 〃 권용훈 최은제 〃 김은표 문정원 〃 최영표 김유림 〃 류지호 이해언 〃 김해성 행정관 박정우 주무관 최윤희 박은영 정현주 강은숙 김정화	② 보좌관(30인) ③ 정책연구위원(4인) ④ 속기사(5인)

<지방감사반>

구분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감사 1반 (경기도)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7인) 문진석 민홍철 손명수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한준호 (국민의힘, 5인) 김도읍 김은혜 김종양 이종욱 정점식 (진보당, 1인) 황운하	수석전문위원 : 박재유 입법심의관 : 남궁인철 행정실장 : 정종선 입법조사관 : 이재명 최은제 김유림 행정관 : 박정우 속기주무관 : 김진주 김유정 김소희
감사 2반 (서울 특별시)	권영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9인) 복기왕 박용갑 송기헌 신영대 이건태 이연희 전용기 정준호 천준호 (국민의힘, 5인) 김정재 김희정 배준영 엄태영 윤재옥 (조국혁신당, 1인) 윤종오	전문위원 : 임종수 입법조사관 : 권용훈 김미량 김은표 이해언 김해성 속기주무관 : 박승연 강지혜 문하은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13.(월)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 산하기관장 출석)	
10.14.(화)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15.(수)	자 료 조 사		
10.16.(목) 10:00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17.(금)	자 료 조 사		
토・일	공 휴 일		
10.20.(월) 10:00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기도청(수원) 서울특별시청(서울)	
10.21.(화) 10:00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철도공사 회의실 (대전)	
10.22.(수)	자 료 조 사		
10.23.(목) 10:00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10.24.(금)	자 료 조 사		
토・일	공 휴 일		
10.27.(월)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인천)	
10.28.(화)	자 료 조 사		
10.29.(수)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종합감사 (확인감사)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 산하기관장 출석)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가 국토교통부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5. 10. 13.(월) 10:43 ~ 10. 14.(화) 00:1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윤덕 등 50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5. 10. 29.(수) 10:12 ~ 23:34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윤덕 등 4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기획조정실·운영지원과 】

○ 국토교통 R&D 사업 지원은 지방에 부족하고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AI 기반 재난 안전시스템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교통·도시 인프라에 적용하기 위한 추진전략 마련 필요

○ 싱크홀 예방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므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신설 및 공간정보진흥과 인사교류 중단 등 방안 검토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 재취업 실태를 파악하고 사후 재취업 심사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통합관리체계 마련 필요

○ 윤석열 정부 경호처 출신 인사들이 직무경험 연계성이 낮은 국토부 산하기관에 임명된 과정 조사 필요

【 국토도시실 】

○ 하급자에 소위 갑질을 하여 경고 조치를 받고도 새만금개발공사 상임이사로 승진한 A에 대하여 조치 필요

○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전략사업 지정 관련 재심의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

○ 연천·가평·옹진·강화군과 같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개선 검토 필요

○ 새만금 내 스마트그린산단을 RE100 산업단지로 지정 필요

○ 권역 간 연계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및 연계 사업 추진 필요

○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검토 필요

○ 서울특별시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능지 검토 필요

○ 용산공원 내 (구)해병대사령부 본관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역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용산공원 임시개방 부지 내 복토 유실, 식생 훼손 등 환경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리·보완 대책 마련 필요

○ 용산공원 홍보 영상물 상당수가 낮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으므로 홍보효과 제고 대책 마련 필요

○ 빈집 정비율이 5% 수준에 불과하므로 정비 실적이 저조한 원인 파악 필요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전주기(발생-철거-활용) 관리, 생활인프라·인구데이터 연계 지역 맞춤형 활용체계 구축, 국가승인통계화 추진현황 검토 필요

○ 빈집을 지역경제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추진 필요

○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간 중복성을 고려하여 두 사업을 연계·병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단열재 관련, 규격 미달의 패널이 정상으로 인증받아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기금 설치 등 방치건축물 정비 관련 책임 있는 점검 필요

○ 위반건축물을 양성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반건축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통사찰 내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지침 등 행정절차가 미비하고, 조항상의 문제로 양성화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절차 안내와 법령 개정 등을 추진 필요

○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와 입법 및 실행계획이 유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에 전통시장 내 근린생활시설, 주거 전용 근린생활시설 포함 필요

○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등이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필로티 공동주택 보완 사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 필요

○ 생활숙박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 산정과 기부채납 기준 등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기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미신고 생활숙박시설 분양자들에게 추가적인 협의 기간 제공 필요

○ 건축물 문틈 손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와 관련하여 시중에 KS 인증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관계 청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경질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열전도도 측정을 '장기열저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험성적서의 적합성 평가를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해체계획서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도로·댐·항만·플랜트와 같은 건축물 이외에 대한 해체계획서 및 해체감리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선 필요

○ 건축분쟁조정 관련 피신청인의 상당수가 조정 참여를 거부하여 각하율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합하면서, 하나의 인증기관이 두 제도의 인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집광·채광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형(패시브) 기술을 인증평가에 반영 필요

○ 녹색건축 인증제도 관련, 저탄소 인증을 취득한 레미콘 업체의 제품이 실제 건설현장에 공급될 때에는 인증 취득 시의 배합과 다른 배합으로 납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대통령실 불법 증축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점검 및 행정부의 법 위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건축안전모니터링 관련 자재의 적합률을 높이기 위해 부적합률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의 시료 채취량이 적고, 모니터링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반사항 해체에 대한 새로운 구조의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천장 등에 사용되는 건축재료를 불연재료로 적용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공장, 창고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환경 변화에 따라 재설정하고, 안전 선진국과 같이 불연 샌드위치 패널로 공장, 창고를 짓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허가권자 지정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고도화에 따라 공사감리자 요건이

법령 조건보다 강화되어 신진 건축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소수 업체 독점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단열재의 장기성능을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대미 관세협상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 필요

○ LX의 수익 구조에 대한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

○ 저심도 지하개발사업에 대한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의무화 및 지하정보 변동 사항 제출 의무 관리 등 제도개선 필요

○ 중요 공간정보의 소실 등에 대비하여 시스템 이중화 및 복구 훈련 등의 안전 대책 마련 필요

○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지반침하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완,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추후 실행계획 등 구체적인 종합대책 수립 필요

○ 토지적성평가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 및 자료관리권 약화 지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국가 안보 약화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 필요

○ 목표달성률이 39%인 지적재조사사업의 2030년 완공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연차별 예산 확보 방안 강구 필요

○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활용도 제고 및 지하시설물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 필요

○ 자연재해, 코로나, 국가시책 등의 사유로 최근 20년간 감면된 지적측량 수수료 연도별 총계와 전체 총합 보고 필요

○ 지하안전 전담부서 설립 필요

○ 지하시설물 탐사 정확도 제고와 지하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련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지하시설물 변동정보에 대한 갱신 의무 관리 강화 필요

【 주택토지실 】

○ 원도심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에 준하는 지원책 마련 필요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원·녹지의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이를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필요

○ 부산 남구 대연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2023년 국토교통부의 합동점검 이후 시정조치에 대한 항목별 개선 및 조치결과 보고 필요

○ 국민이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된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을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인허가 후 장기간 미착공 사업부터 정상화하는 '착공 우선 로드랩' 수립 필요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인허가 절차 합리화, 중복심의 통합,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규제 합리화 등 검토 필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기보다 문제점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적용 지역 한정, 부과 금액 조정 등 검토 필요

○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준하는 파격적인 정책 지원과 다양한 원도심 정비사업 모델 검토 필요

○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되,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여 매물 증가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필요

○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실효세율이 OECD 수준보다 낮은 보유세를 조속히 정상화 필요

○ 주택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을 복원하고, 부동산정책을 투기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의 관점에서 검토 필요

○ 정부가 주택공급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주고,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병행 필요

○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제 지원,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2025.9.7.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 거주 실수요 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공급 확대책 마련 및 현실적 목표치 설정 필요

○ 국무총리 산하의 부동산위원회, 국토교통부를 개편한 주택도시부, 주택공급 실행기관으로 LH를 개혁하는 기구를 두는 조직 개편 검토 필요

○ 주택 관련 금융, 재정, 건설 등을 전담하는 주택청 신설 검토 필요

○ 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방안 검토 필요

○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원가 보정, 품질 ·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 계수 보정, 중대재해 처벌 등 규제 적용상의 형평성 확보 및 책임 범위 명확화 등 검토 필요

○ 고강도 대출 규제와 신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가 상승 및 전세의 월세화 가속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주택시장 및 임대차에 대한 충분한 감독을 위하여 시도, 시 · 군 · 구의 임대차 관련 행정 인력 및 조직 확대 필요

○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 필요

○ 재개발 ·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필요

○ 2025.10.15.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상

복합이 규제에서 제외되고 행정구역에 따라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철회 필요

○ 금리·원가 등 여건상 민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공이 주택공급 부담을 완충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 필요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세대수 증가 제한 완화,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동의 비율 하향 및 조합설립 동의의 허가 동의 간주 신설 등 방안 검토 필요

○ 조합의 청산 지연 등 비합리적 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공공관리제도 의무화,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한 자료공개 의무 부과 등 검토 필요

○ 용적률 상향 시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엄격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이 적용되어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문제 개선 필요

○ 서울 지역 정비사업에서 1,0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심의 및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존 조합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진입장벽 강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새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 완화 및 조합사업의 불투명성과 과도한 지연, 시공 막바지 단계의 대규모 공사비 증액 요구 등 문제 해소를 위한 준법감시인 도입, 실적 보고 및 자료공개 구체화, 지방자치단체 감독 권한 강화 등 검토 필요

○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비리를 고발한 공무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인 지정 및 포상을 적극적 검토 필요

○ 신탁사기피해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 인정 요건 완화, 피해주택 매입 관련 디지털 플랫폼 통합, 실시간 지원 현황 공개 등 검토 필요

○ 신탁사기피해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의 법·제도 보완, 임대차계약 및 전세보증보험 체결 과정의 신탁 물건 확인 및

수탁자 동의 의무화 필요

○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상대로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요구하는 임대인에 대한 제재 마련 필요

○ 소액임차인 판단기준과 최우선변제금 규모의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과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차등이 있어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개선 요청 필요

○ 전세사기 대응 인력 충원, 피해주택 신속 매입, 최저보장금 선 지원, 전세사기 배드뱅크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의 실효성 강화 등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 필요

○ 부동산 임대차 등기 의무화 검토 필요

○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인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우대금리·비과세 요건 개선 및 서울 지역에서의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내 노후화된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필요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 조기 분양전환 도입 및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이후 일정 기간 지위 유지 필요

○ 신규택지·신도시 택지계획 중 상가용지 조성 시 소비 행태 변화 등 고려 및 상가 공실에 대한 활용방안 등 대책 마련 필요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및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난방연료에 대한 공평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법률 개정을 위해 적극적 역할 필요

○ 공공주택 내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

○ 1인당 적정 주거면적, 통근시간 등 수요자 중심 지표에 근거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장기 미임대 문제 해결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자생력 강화 및 다양한 소득계층을 아우르는 소셜믹스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 필요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주택공급 직접 시행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조직·인력 재편 필요

○ 관계부처 합동 사업인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방안 모색 필요

○ 3기 신도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및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필요

○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시 삼보폐광산 공원 후보지 포함 필요

○ 수선유지급여 항목에 에어컨을 포함하고, 에어컨이 없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에 에어컨을 우선 설치하는 등 주거약자에 대한 냉방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공공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

○ 범죄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제도의 경우 긴급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절차 단축 및 심사요건 완화 필요

○ 예산상 문제에 따른 청년, 신혼, 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모집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전환, 매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기준 마련 필요

○ 청년, 신혼부부 등 정책대출 대상자에 대한 주거사다리 유지를 위해 정책대출 축소 재검토 필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 필요

○ 공공주택 예산 중 공공분양주택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실제 수요에 기반하여 균형 있게 편성할 필요

○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 통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통계와 통합공공임대주택 통계에서 공무원임대주택 제외 필요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를 고려하지 않은 이주대책 및 입주대책 개선 필요

○ 양질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사회주택) 구체적인 공급계획 수립과 활성화 필요

○ 공공임대주택 공실 증가에 따른 재정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공급전략 수립, 리모델링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리 강화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전세임대 등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하향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 재조정 필요

○ 신혼희망타운이 일정 기간 미분양될 경우 무주택 및 신혼부부 등의 입주자격 제한을 완화할 필요

○ 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급 시 전용 59㎡ 이상으로 의무 배정하도록 규정 개정 필요

○ 최근 극단적 경쟁 구조,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청약 등으로 청약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현행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점수 등을 포함한 청약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필요

○ 주택도시기금의 장기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다양화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대한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필요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전문 운용 인력 확보 필요

○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개요건 완화 필요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공동주택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규약 표준화 등 대안 마련 필요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그 규모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방식의 규제 마련 필요

○ 주택공급대책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안정성 확보 필요

○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주택공급 기반 강화 등 정부 정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출산 장려 목적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수요 억제 중심의 대출 규제에 포함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 필요

○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로 인하여 주택시장 왜곡, 주택가격 폭등,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 양산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결과 등록이 명확히 처리되도록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규제 완화 정책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미친 영향 및 외국인의 탈법적 부동산 거래 심사·통제 장치 등 점검 필요

○ 국내 부동산 질서를 교란하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모색 필요

○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토지 취득 제한 및 실거주 요건 부여 등 부동산 취득 관련 상호주의 이행 필요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 반입·대출, 무자격 임대업 영위 등과 관련하여 내국인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저하 및 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세반영률 체계

구축 및 유형별 평가 다변화 등 중장기적 방안 마련 필요

○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보유세 정상화 등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

○ 부동산 중개시장 내 지역회·친목회식 공동중개 배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필요

○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H의 적정 인력 충원 필요

○ LH 개혁위원회의 균형 있는 구성 및 운영 필요

○ 9·7 대책(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입지 확보 등 여건 조성 필요

○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신속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LH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확충 필요

○ 고가차량 보유자의 공공임대주택 편법 입주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 공유 차량에 대해 지분 가액이 아닌 차량 전체가액을 자산으로 산정하도록 제도개선 및 고가차량 편법 보유 전수조사 실시 필요

○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불법 전대 및 숙박업 등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자에 대한 입주제한 기간 확대,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 9·7 대책의 주택 135만호 공급 목표 관련, LH의 유동성·부채 관리, 전문 인력 충원 및 LH 개혁위원회 재구성 등 적극적인 방안 검토 필요

○ 토지임대부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 가격 조절 등에 장점이 있는 제도로,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적정 임대료·수익 구조 설계 및 운용 기관인 LH의 구조 개혁 등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층간소음 저감 방식 중 경제성이 있는 건식 난방 기술의 현장 적용 지연 상황과 관련하여, LH에 대한 지휘·감독 필요

○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민간 공급 위축 상황에서 공공 주도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9·7 대책의 원활한 추진 방안 모색 필요

○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평형별 지원 구조 개편 및 기존 소형 평형 주택 리모델링 등의 방안 강구 필요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장기화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지구 지정 전 사업성 검토 강화 및 여건 변화 시 지구 지정 해제 요건 확대 등 제도 보완 필요

○ 장기간 14㎡로 유지되고 있는 「주거기본법」 상 최저주거기준과 관련하여,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실적인 기준 검토 필요

○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체감 및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 착공과 아울러 준공 실적에 대한 가중 평가 필요

○ LH 공공주택사업의 공가율 증가 및 공사기간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공공만능식 공급대책을 경계하고 민간의 속도와 동력이 결합된 공급 방안 검토 필요

○ 주거복지사업 중 수선유지급여의 수요 대비 예산 감소, 수리 실적 저하 및 대기기간 장기화 등과 관련하여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 주택도시기금이 공급자 금융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활용 등 적극적인 운영 필요

○ 사업승인 후 미착공 중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세밀한 원인 조사 실시 및 장기 미착공 지구에 대한 재구조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역대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담당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는바, 사명감을 기반으로 공공주택사업 추진 필요

○ 공공주택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LH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공신력 있는 국가통계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 의견 등과 관련하여,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존치 여부 등 검토 필요

○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우선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실질적인 공급 가능 여부 검토 필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신설 방안과 관련하여, 수사권 남용 및 기본권 침해 우려 등 방지 필요

○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신속한 정보 제공 기능 등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폐지 또는 기준 변경에 대해 신중한 결정 및 제도 보완 방안 검토 필요

○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후속조치 수립을 위하여 부동산 취득원인별 현황 추가 등 통계 개선 필요

○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의 대산-당진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 취득·보유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조사·수사 필요성 검토 필요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절차 준수 및 규제지역 세분화 필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거쳐야 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의 충실한 이행 필요

○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의 부합 여부, 광범위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시장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주택 정책 수립 필요

○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외국인의 상대적 수혜 여부 확인 필요

○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논의와 관련하여, 우방국 국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외교적 분쟁 유발 가능성 검토 필요

○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의 신속한 추진 대책 강구 필요

○ 퇴직자 취업심사 제한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 및 인재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

○ 부동산거래 신고조사와 관련하여, 의심 거래를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조치

결과 환류를 통한 실질적 조치 완료 필요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설 감독기구 마련 필요

○ 부정청약자 적발 후 신속한 사후조치 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체계 개선 필요

○ 공익사업 대토보상자의 실질적인 재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임대보증금 보증 기준 특례 적용 및 토지-건물 소유권 일원화 등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주택 시장에서의 혐중론을 경계하고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를 보장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균형 잡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제도 마련 필요

○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토지의 취득·양도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행령 마련 필요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주택 매수인과 매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의 국적과 외국인 등록번호, 매수 용도에 대해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내역 공개 시 매도자·매수자의 외국인 여부 공개 방안 검토 필요

【 건설정책국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동안전 대책이 건설업계를 위축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건설경기 위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

○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되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지하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중앙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건설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안전장비 지급에 차별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

○ 건설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

○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조사를 통한 공사비용 현실화 필요

○ 우즈베키스탄 ODA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면밀한 확인 및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한남동 관저 공사 하도급 계약의 건설산업정보망 미등록에 대해 법령에 따른 조치 필요

○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적 대처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건설업 등록 말소 등 입법적 정비 검토 필요

○ 건설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을 주는 방안 검토 필요

○ BIM 활성화를 위한 BIM 데이터 관리체계 추진 방안 마련 필요

○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제기로 제재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 검토와 범부처 차원의 개선 요청 필요

○ 건설안전을 위해서는 사업비, 공사기간, 입찰방식 등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노후화된 SOC 대개량을 위한 정부의 집중투자와 구조적 개선 추진 필요

○ 기반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고, 국민안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E등급 시설물 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재난관리기금의 이주지원 활용을 위한 조례 제·개정 지원 필요

○ 건설현장 안전 전담조직 설치·운영 방안의 적극적 검토 필요

○ 적정임금제의 실질적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필요

○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역 건설기업에 대한 우대 기준 검토 필요

○ 협력사 외에 종합건설사 임직원도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상호협력평가 중 교육 실적 관련 평가 체계 개선 필요

○ 건설현장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 개선 필요

○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통한 숙련공 의무배치 사업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필요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건설노동자 노후 보장을 위해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금액 현실화 필요

○ 복합 유지보수공사에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발주자 직접 지급 효과 및 공사 대금 체불 방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용 확대 필요

○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대한건설기계협회 위탁 운영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접수·처리하는 체제로 전환 필요

○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주가조작 관련 연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우크라이나 재건 6대 프로젝트의 성과가 부진한바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추가 사업 발굴 필요

○ 우리 기업의 해외 PM · CM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내부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필요

○ 건설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총괄할 단일 전담 조직 마련 필요

○ 항타기 전도 사고와 관련하여, 중요 부품의 파손 · 수리 시 정밀 수시검사, 무면허 · 무자격자의 조종에 대한 규제 강화, 현장상황에 따른 전도방지 대책 및 리더 수직도 등 수시점검, 세부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 명시 등 제도개선 필요

○ 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점검 및 현장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통합관리체계 명시 필요

○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비용 전가와 공기 강요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과정에서 건설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 감독 필요

○ 민간 사업장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비 집행이 적정했는지 서류를 검토한 후 준공 허가를 내도록 제도개선 검토 필요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착공된 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표준매뉴얼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건설행정 구조 혁신 및 발주자의 공법상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국무총리실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협력하는 대통령실 직속 ‘민관합동 건설행정 법 · 제도 혁신 추진단’을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 질의

○ 건설공사 현장 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래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지반탐사 차량 및 레이더 장비 확보 관련 현장의 건의사항 청취, 레이더 측정방식 표준 체계, 국산 차량형 장비 실증 · 성능평가 · 고도화 등 수입 대체 목표치 설정 및 달성 로드맵 등 지반침하 탐사장비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구조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에 대한 표준시방서 준수 의무화 필요

○ 굵은골재 중 부순골재의 최대치수를 20mm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협의 또는 조치 및 향후 계획 질의

○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여부 및 AI 기술 활용 현장 밀착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외국인근로자 통역 어플리케이션의 중소기업 활용 확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준비 현황 질의

○ FMS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아나티앳부산코브 신축 공사의 공사대금 장기 미지급과 관련하여 법률 위반 및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필요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소개소의 임금 대위변제 금지 이후 건설일용근로자 고용 및 임금 직접지금 실태 및 원활한 당일 임금 지급을 위한 해법으로 제기되는 임금 대위변제 제도화 주장에 대한 의견 · 대안 · 일정 질의

○ 건설기계 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불법 전대 규제 및 계약서 작성 등 제도적 개선방안 필요

○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등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NC야구장 사고발생에 따라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점검체계 마련 필요

○ 안전점검 기준 및 결과평가, 평가 결과의 행정처분이 미흡함에 따라 안전점검 절차 및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

○ 아차사고 신고 접수에 따른 계도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대한 법적 권한 확보를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국토안전관리원과 유관기관이 공조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폴란드 사무소 존치 여부에 대한 공사의 입장 확인 필요

○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제기로 제재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 검토와 범부처 차원의 개선 요청 필요

○ 파라과이 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필요

○ LH가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단체를 후원한 정황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경위 조사 필요

【 교통물류실 】

○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선 폐지가 우려되는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을 운수종사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하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시행령 개정을 통한 포상금 규모 확대 검토 필요

○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필요

○ 택시 통합사업구역에서 증차물량 배분으로 인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정방안 마련 필요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형태의 매장)은 인접 도로의 교통 정체, 보행 안전성 저해 등을 유발하므로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 필요

○ 캠핑인구 증가로 공영 · 민영주차장 등에서 차박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캠핑카 불법 개조 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 도입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 정비 필요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대형차량(버스, 화물) 등에 AI 기반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DMS) 보급 확대 필요

○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을 위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 간 합동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중국인 입국 급증 속 공항권 불법 유상운송(흑차)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개인택시 면허 취득 · 양도 후 법인택시 재취업에 따른 차익거래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주40시간 월급제 개선 등 택시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다른 지역 거주 장애인이 응급상황 발생 시 사전등록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선박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 필요

○ 시외버스 등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발달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조수석 탑승제한은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고, 조수석 탑승 제한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이 과도하고 광역 이동도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교통수단 운행률을 높이고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전원을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필요

○ 주차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KS인증과 연계하는 대책 필요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의무배치 및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 등 적극 조치 필요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문제로 노후·고장 기계식주차장이 철거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 필요

○ 교통유발부담금이 본래의 '교통량 관리' 기능을 상실한 채 단순 재원화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징수 부담금의 목적사업 집행 의무화 및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담금 체납 관리 및 지자체별 집행 용도 편차 개선 필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미사용면적 인정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 합리화 필요

○ 주요 공항 및 철도역사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코일존, 히어링루프 등의 설치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지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 필요

○ 인천국제공항 플랫폼 호출 택시의 승차방식 개선방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

○ 경기도 물류시설 증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검토 필요

○ 현행법 위반한 불공정계약 사례가 다수 존재, 택배업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 필요

○ 배달라이더 계약 시 약관 형태의 계약 등 불공정 계약 구조 검토 필요

○ 쿠팡CLS의 근로환경에 대한 점검 및 택배 종사자 보호 필요

○ 과도한 배달 미션제 금지 등 배달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서비스 평가 시행 및 인증심사 강화, 배달업 통계 체계 재정립 필요

○ 쿠팡CLS는 시장 점유율에 비해 점검 횟수가 적고, 지역별·업체별 점검 횟수 편차 발생 등 국토교통부의 택배사 현장점검 개선 필요

○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및 확인시스템 구축 등 배달종사자 안전강화 대책 마련 필요

○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파업 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투입 허용 등 대책 마련 필요

○ 배달업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필요, 구축 지연 시 계도 기간 부여 등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준비 필요

○ 택배사마다 송장 이름 표시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문제 개선 필요

○ 국제물류주선업 시장교란 개선을 위한 등록기준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업무의 전문기관·단체 위탁 필요

○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 관련하여 직영차량확대 수급조절제 개선 등 화물차 공급과 관련한 조치는 확인되지 않아 관련 내용 확인 필요

○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등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이행 필요

○ 택시, 버스, 화물차 운수종사자 인력 확충 방안 검토 필요

【 항공정책실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대통령실 직속 TF(기획재정부 포함) 구성 건의 및 이에 따른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 필요

○ 방위각시설 개선공사 지연에 대한 점검 필요

○ 현행 공항별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 소유권 및 운영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공항 에어사이드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주행 운행기반 조성 필요

○ 「항공보안법」 상 '항공보안사고'의 정의 명확화 필요

○ 항공 위해물품 반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 이용객의 책임의식 강화 방안 강구 필요

○ 공항별 관제사 인력 부족 등 관제사 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 필요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정상화 관련 신속한 로드맵 마련 필요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

○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공항 주변 조류서식지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용역에 해당 사항 반영 필요

○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이행 및 지방공항 로컬라이저 공사 계획 관련 로드맵 보고 필요

○ 일부 항공사에서 카운터에서 발권 시 수수료 부과, 디지털 소외계층 등을 고려한 기본 서비스 유료화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하여, 사업 기간 및 예산변동이 있을 때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 필요 여부 검토 필요

○ 가덕도신공항 관련 작년 국정감사 시 지적된 '측풍난류 현상'으로 인한 결항 및 안전 위험성과 활주로 설계에 사용된 기상 데이터오류에 대한

설명 필요

○ 동서 방향으로 설계된 가덕도신공항의 활주로는 남북 방향인 가덕도의 우세풍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 안전에 치명적인 측풍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류가 있는 기상청의 자료에 근거한 설계에 대해 후속 조치 이행 필요

○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고시에서의 관제탑 위치 변경 및 연결유도로 편입 부지 명칭 변경 관련 협의 경과 및 내용 제출 필요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의 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 횟수(TPDS) 및 기체손실 위험성 발생 예측연도 축소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인천공항의 장거리 국제선 독점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공항의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 확대 필요

○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및 검토 필요

○ 양 공사의 K-UAM 사업의 중복 투자에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검토 필요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공사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운수권 배분 시 지방공항 취항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노선 축소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 필요

○ 한국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문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양 공항공사의 통합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관련 사항 검토 필요

○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고시, 공항 접근도로 및 공항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정부 TF 구성을 통한 범

정부적 추진체계 마련 필요

○ 연예인 공항이용계획서 부실 또는 미제출, 동선 파악 불가, 출입국 혼잡 등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관리 대책 수립 필요

○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발권 시 동일 예약번호인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무안공항 폐쇄 기간 동안 광주-인천 간 임시 내항기 운항에 대해 검토 필요

○ 항공기 지연·결항 관련 승객의 권익 보호 방안, 통합 기준 및 표준 매뉴얼 마련 필요

○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조류충돌 예방강화를 위해 탐지장비인 레이더·열화상카메라, 퇴치장비인 레이저·음파발생기 등의 신속한 도입 필요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가 급증한 부분에 대한 KDI 재검증 등 적정성 검토 필요

○ 탑승권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항공보안법」의 법적 사각지대 보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 필요

○ 법무부와 협조하여 지문확인시스템 확대 도입 등 여권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확인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국내공항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의 도입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인천공항의 소음대책 예산 현실화, 야간보호지역 신설 및 소음대책 지역 지정기준 완화, 도서 지역 피해대책 반영 필요

○ 신공항 사업 추진 시 조류충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공항경제권 조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을 위해 관련 법률안 적극 검토 필요

○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안 반영 필요

○ 조종인력 양성 체계 개선 관련 국토교통부의 취업보장형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간담회 실시 및 적극 구제책 마련 필요

○ 울릉공항의 활주로 연장 등 안전 확보방안 마련 필요

○ 객실승무원 피로관리 등 안전방안 마련 필요

○ 항공편 정보 불법 거래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항공분야 전문성을 갖춘 분쟁조정기구 신설 필요

○ 국내선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페널티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국적사 정비 역량 강화, 해외 외주 정비 국내 유턴 지원 등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ICAO 기준에 맞게 항공훈련기관(ATO) 과정 이수자, 관련 대학 졸업자에게 2년 추가 실무경험을 요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국내 현실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RBS) 활성화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필요

○ 각 공항에 드론 탐지 레이더 장비를 구축하고 관제권 내 불법 드론비행 차단 방안 마련 필요

○ 공항 내 발생 범죄 및 보안 사건에 대한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공항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필요

○ 청주국제공항 주차시설 확충사업의 현실적인 규모와 속도감 있는 추진 등 조기준공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5년간 방치된 (구)김제공항부지에 대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대책 마련 필요

○ 울릉공항의 시계비행 운영 방침에 대해 재검토 필요

○ 감사원의 신공항 건설사업 수요 예측 오류, 안전성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EMAS 설치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행하고 관리·감독해야하는 공항 핵심 안전시설이므로 한국공항공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손실보상금 기준 등에 대해 검토 필요

○ 백령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조류 대체서식지 마련 등 조류충돌 대책 마련 필요

○ 항공사 승무원 액체류 반입규정 특권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이사회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 자회사 중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기업들의 이사회 실태를 조사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 마련 필요

○ 대한민국 항공 위상에 맞도록 ICAO 파트2 상향 진출을 위한 부처 차원의 전략 마련 필요

○ 보조배터리 위탁수하물 검색 기술개발 방안 및 적발된 보조배터리 폐기·재활용 방안을 포함한 통합관리 지침 마련 필요

○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 도입 등 조종사 피로관리 관련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항공관제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 필요

○ 항공관제 인력산정 기준 정립, 관제사 인력충원, TF 정상화 동시 추진 필요

○ 「항공안전법」 법령 개정을 통한 항공종사자 음주 처분기준 강화 필요

○ 항공 MRO단지 활성화 지원 방안 필요

○ 흑차, 불법 콜택시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TF 구성 필요

○ 양 공항공사가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수의계약 시 업체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관리감독 필요

○ APEC 기간 증원된 김해공항 CIQ 인력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 관세청과 협의 필요

○ 국내공항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

○ 장기 공석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조속히 임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필요

○ 양 공항공사가 공직자 윤리법을 준용한 내부취업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취업심사를 진행하도록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 필요

○ 양 공항공사의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 위탁 근거 마련 필요

○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이사회에 사외이사 선임 및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필요

○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하여 인천공항공사는 소음부담금, 시설관리자부담금 부담주체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제4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수립 시 인천공항공사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관리 담당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과 한국항공협회에 대한 감사 필요

○ 항공일자리센터 예산을 활용하여 한국항공협회 일부 직원이 규정에 없는 과도한 수당을 받은 사안에 대해 감사 필요

○ 공공분야 드론 활용에 대한 안전 기준 확립 필요

○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공항 주변지역 내 실질적인 농업시설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필요

○ 민군 겸용공항 주민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형평성 확보 필요

○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위해요인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기내 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한 보조배터리 격리보관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항공사에 대한 점검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감독 필요

○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국제선 좌석 제한의 불합치에 대해 개선방안

검토 필요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고조사 과정 개선 필요

○ 12·29 여객기참사 사고의 명확한 사고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 사고기의 엔진 정비내역 및 부품 교체 등 정비 기록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교통소위 등에서 위원회의 소속 이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필요

【 모빌리티자동차국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율자동차 검사기준 마련 필요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적정 치료비 보상을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 개선 필요

○ 보험회사의 특정 견적 프로그램 사용 강요 등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 불공정 관행 개선 검토 필요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배터리 화재 안전관리 강화 필요

○ 비대면 카셰어링 관련 제3자 운전 및 명의도용 증가, 임차인 편중 규제로 플랫폼 책임 공백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국가 안보를 위해 자율주행 데이터의 무분별한 유출 방지책 마련 필요

○ 이륜차 전면번호판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효과 검증이 어려워 보이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 개선 필요

○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미수검 차량 및 리콜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전기차 BMS의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술수준을 강화하고, 전 차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자율주행차 대규모 실증을 위해 실증도시를 선정하여 도시전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실증 추진 필요

○ 리스 차량은 고장이 있어도 반품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불법 개조 유세차량을 방치하는 일시적 튜닝승인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시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를 대물보상까지 확대 검토 필요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적극적인 확대 및 혁신도시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지정 필요

○ 국토교통부 주도로 데이터 규제 합리화, E2E 안전사례 제도화, UNECE 규제 정합성 확보 필요

○ 한약사가 자동차보험 심사 체계 내에서 정당한 자격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필요

○ UAM 기체 개발 지연에 따른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기업 참여율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외국 손님 공항 불법 픽업 서비스 등 렌터카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필요

○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 허위매물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페달블랙박스 활성화를 위해 페달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 할인 상품 설계 지원 필요

○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적극 고려할 필요

○ 리콜 미이행 차량에 대한 이행률을 제고하고 리콜을 미이행한 차량이 중고차로 판매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 정비부품 조달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사후관리 이행 명령 외에 손해배상 등 의무화 방안 검토 필요

○ 종합검사원이 법정의무교육을 문제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추가 지정 등 환경 제공 필요

○ 친환경차 확대에 따라 친환경차에 요구되는 별도 정비시설 규정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 및 지원방안 필요

○ 수출 중고차에 대한 별도의 점검 및 검사제도를 포함한 중고차 수출 시장의 경쟁력 유지와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PM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증 체계 강화 필요

○ 품질인증부품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증체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8주 초과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재검토 필요

【 도로국 】

○ 경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로 농경지로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제2서해대교를 민자고속도로방식보다 국비 투입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천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사남~정동) 건설공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노후화된 국도 유지관리 대수선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임시운행제한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고속도로 상습 미납통행료의 효율적 회수를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규제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 4대 광역지자체의 전략 거점을 잇는 광역 연계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동서3축 지선(군산~익산~논산~금산~무주) 노선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변경)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 필요

○ 도로공사 소유 성토사면, 도로 유휴부지, 휴게소 주차장 등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여 필요

○ 창원과 부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동서축 노선인 창원 지하고속도로(서마산JCT-완암IC)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변경) 또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 필요

○ 고속도로 안전시설물 손괴 복구비용 징수체계 법제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및 복구비 단가 표준화·공개로 복구비 산정의 객관성 제고 필요

○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부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과 신기술 적용 검토 필요

○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대로 재추진 필요

○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 필요

○ 현광방지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ITS 구축 사업의 확대 필요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라 C-ITS 사업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국가간선도로망 남북6축의 남단을 합천에서 함안으로 연장하고, 의령지역 진출입로를 위한 의령IC 설치 필요

○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 시 턴키(일괄하도급) 계약 지양 필요

○ 예비정지선 도입을 통한 딜레마존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전관비리 근절 대책 필요

○ 강릉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관련, 희림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법」 위반, 업무과실 및 횡령, 배임 여부 등 강원도, 강릉시, 강릉에코파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지연된 사유 보고 및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평가준비서 제출 필요

○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 필요

○ 영일만 횡단대교의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주민 수용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적극 검토 필요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경력직 연봉 부적정 인상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

○ 도로 열선 공사시 표준 시방서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시험을 실시한 이후 공사하고 있으므로 일반국도와 고속도로에 설치된 열선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계양-강화 고속도로 종점부 접속에 대한 최적 안에 대하여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 진행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등과 수시 협의 필요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순찰 차량 교체와 함께 교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필요

○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서대전JCT-회덕JCT 확장사업 조속 추진 필요

○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시 실질적 원인제공자 대상 부과 등 현행 과태료

부과시스템 개선 필요

○ 지하고속도로 추진시 안전한 주행환경과 재정 문제를 고려하여 민자방식이 아닌 재정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관련하여 과도한 이자 지급 문제, 사회공헌사업 소홀 문제,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 필요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 필요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량 사고 관련 기존 교각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필요

○ 아산, 천안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 정체해소,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아산~천안 광역도로 건설계획) 등 구체적 추진계획 검토 필요

○ 타당성 재조사 결과 보류된 당진-아산 고속도로(3구간)의 재추진 및 2구간 내 IC 설치 검토 필요

○ 제도 도입 후 15년이 지났지만 단 한 건의 지정 사례도 없는 지선국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국도5호선 춘천-화천(1공구) 건설공사 관련, 터널 굴착 과정에서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추가 사업비를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공사 및 관련자에 대한 제재 조치 검토 필요

○ 장애인이 임차·대여를 한 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과속방지턱의 규정규격은 있으나 통제가 되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됨에 따라 차량 손상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용인을 가로지르는 남북측 도로가 부족하므로 용인 남부에 조성하는 반도체 산단을 잇는 남북측 도로망 확충 필요

○ 민자고속도로 부가통행료의 징수기준과 고지 · 납부방법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철도국 】

○ K-철도의 수출 추진 필요

○ 동대구~창원 고속화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검토 필요

○ 서해안 철도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필요

○ SRT 운행 확대를 위해 수서-평택 2복선화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 필요

○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평택~부발, 경강선 연장, 수도권 내륙선 사업과 동탄~청주공항 급행철도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 필요

○ 인천공항의 접근성 제고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대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필요

○ 코레일-SR 통합을 위한 통합 로드맵의 신속한 마련 필요

○ 코레일-SR 통합을 위한 6개월 로드맵(실행방안) 수립 및 실행 필요

○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필요

○ 용인시 반도체 산단 주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로 확충 및 철도 조성 계획 마련 필요

○ 코레일-SR 통합의 실익 검증과 고용안정 대책의 병행 추진 필요

○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 CTX-진해선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필요

○ 철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 확대, 수출 구조 실적 개선

및 시장 다변화 전략 마련 필요

○ 국가철도공단이 특정 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몰아준 배경과 해당 기업이 해당 제품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

○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서해선 소사역에 KTX 정차 검토 필요

○ 코레일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노후 고속열차 교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재정지원 노력 필요

○ 폐철도 유휴부지의 공공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생활인구 및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호남선 KTX 증편 필요

○ 납품지연이 심각한 철도차량 제작사와의 계약과정에서 드러난 제작 기술 평가·현장 실사·신용등급 평가·입찰제도 등의 문제점과 철도차량 납품 지연에 대한 관리·감독 실패, 철도차량 상습 납품 지연 제작사와 추가로 부실 계약한 과정, 선금 사용내역 미제출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점검 절차 부재, 당초 설계기준보다 중량 초과한 차량 납품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납품지연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광역철도 개찰구를 나간 후 15분 내 재승차할 때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 도입 필요

○ 해외 불법 사이트가 광고를 통해 승차권 암표 장사를 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차원의 조치 필요

○ 급증하는 철도 승차권 암표거래 등 부정판매 행위의 효율적 단속과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철도사업경찰대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전국 철도이용객의 혼선 해소와 편익 향상을 위해 오송역 역명을 청주오송역으로 개정 검토 필요

○ 동해선 KTX-이음 기장역 정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수색~광명 고속철도 관련 동작구청이 제안한 여의대방로~시흥대로를 경유

하는 대체 노선안에 대한 검토 및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 대책 필요

○ 경부고속선 대전북연결선 공사 관련 주민반대,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우려 및 한남대 학교시설 내 철도진입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건설공사 내 항타기 등 중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오송역 과주여유거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오송역 교량 확장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전주역 시설개량사업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26년 예산 150억원 증액 필요

○ 충북선 고속화사업 시 제천역 경유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제2경인선 철도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필요

○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 필요

○ 경기도 광주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GTX-D 노선 등 GTX 건설사업 추진 필요

○ 착공이 지연 중인 GTX-C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온양온천역 연장을 비롯한 노선 연장을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SRT 의정부 연장사업의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연결선로 선시공 검토 필요

○ 철도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교육 전문기관 설립 필요

○ 철도 내 배터리 화재사고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철도종사자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 필요

○ 종합검측차의 국산화와 영업열차 차상검측을 통한 상시 검측체계 마련 필요

○ 청도 열차사고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부실 문제의 조속히 개선 필요

○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접근 경보장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필요

○ 철도 건널목 사고에 대한 안전설비 강화 및 AI 감지센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오송역 누수문제의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한국철도공사의 출자역사에 대한 역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공유지 점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고속철도 차상신호장치(KTCS-2) 교체방식에 대하여 안정성과 효율성, 재정 절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추진방안 검토 필요

○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철도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에 대한 업무협조 처리 프로세스 개선 필요

○ 수해 방지를 위하여 내년도 서방천 신안철교 개량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필요

○ 경부선 1단계 광명-동대구 구간의 자갈궤도를 콘크리트 궤도로 개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 경인선 지하화 사업의 본래의 목적인 전구간 지하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인천시, 부천시,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

○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PSO)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수소열차 및 트램에 연료보조금 도입을 추진하고 트램 도입 시 혼용노선에

대한 경찰청과의 협의 필요

○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차량과 승강장에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에 대한 공통 설치 기준 마련 필요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신속 추진 필요

○ 기후위기·폭염에 대비하여 선로 설계기준 변경 필요

○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필요

○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 간 임금격차에 대한 감축목표와 단계별 실행계획이 포함된 구체적 방안 검토 필요

○ 코레일과 SR 간 교차운행 시범사업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통합 추진 필요

○ 철도차량 기술기준이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차량별, 지역별, 운영환경에 따른 유연한 기술기준의 적용가능성 검토 필요

○ 부산~김해 경전철의 국비 재정지원 검토 필요

○ 분당선 연장, 용인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탈선검지장치 오작동 판정 기준의 표준화 및 데이터 기록체계 마련 관련 연구용역 추진 로드맵과 예산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서울지하철 내 수유실 미설치 역사를 대상으로 단계별 확충 계획 마련 및 전 노선의 수유실 설치 현황 점검 필요

○ 부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노력 필요

○ 국가철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전관취업 실태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 효율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저상홈 구간을 고상홈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 공단의 직접 수행 필요성 및 지방공사 등 공동 수행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탈선감지장치 성능시험 및 도입 과정에서의 부정시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

○ 세종 행정수도 구축에 맞추어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 구축 계획 마련 필요

○ 대경선 예비차량 2대 추가 구입 시 국비 지원 필요성 검토 필요

○ 정차역 할인제 등 소요시간에 따른 합리적 운임체계 개선 필요

○ 보행로 관련 철도시설 기술기준 개정 검토 필요

○ 산하 공공기관에 보행로 차단 등 주민 편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내부 지침 마련 필요

○ 서해선 차량 연결기 고장 사고 관련 문제점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 한반도 U자형 철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군산과 목포를 연결하는 철도망 사업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필요

○ 위례과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 필요

○ 철도역사 내 승강기 사고 등 돌발 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한 지능형 승강기 안전시스템 도입 필요

○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방안 검토 필요

○ 공사가 부담하는 PSO 공익분담률(30%)을 하향 조정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을 출산장려 및 사회적 약자의 교통복지 확충에 사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철도 공공성 악화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 보조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GTX-C 사업 국비 지원 확대 노력 필요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 1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여전히 인력과 기능을 수도권에 잔류시키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한 조치 필요

○ 1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후속 관리를 위해서 사업 성과 추적 및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을 정주 여건이 마련된 구도심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 과정에서는 혁신도시 내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 필요

○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마련 시 혁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도 일정 비율 공공기관을 배정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되어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를 최우선적으로 검토 필요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부산시와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국비 지원 추진 필요

○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과 예산이 더 확대되도록 조치할 필요

○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및 3단계 사업,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옥천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포함 검토 필요

○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26~’30)‘ 검토 대상에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사업 포함 필요

○ 서대전광장 지하 환승주차장 및 지하 보행로를 포함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계획 ’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반영 필요

○ 교통카드 단말기 GPS 오류로 인한 버스요금 과부과 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청현마을~서울행 광역버스 혼잡구간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지하철 수유실 개선 필요

○ 부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 포함 검토 필요

○ 광역버스 운전직 인건비 권역별 격차를 줄일 필요

○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6~’30)‘에 ‘녹산-진해 광역철도’ 사업 반영 필요

○ 감액된 2층 전기버스 보조금을 인상하고 관련 보조금을 일원화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 G6009번(동탄2~잠실) 광역버스 혼잡구간 완화를 위한 대책 필요

○ 동탄1신도시~잠실역, 동탄2신도시의 신주거문화타운, 동탄~여의도 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 검토 필요

○ 트램 도입에 따라 혼용노선 운행과 수소트램 각종 제도마련 필요

○ 광주대촌~나주금천 광역도로 사업구간 변경 필요

【 감사관실 】

○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 해외 감사인대회 일정에 참여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므로 철저한 조사 필요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방안 마련 필요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5. 10. 13.(월) 10:43 ~ 2025. 10. 14.(화) 00:1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강주엽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5. 10. 29.(수) 10:12 ~ 23:34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강주엽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대법원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 필요

○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계획 마련 필요

○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의 예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 필요

○ 세종특별자치시 상가공실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 강화 및 충남서부·수도권 서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세종~아산 광역연결도로 건설에 대한 검토 필요

다 새만금개발청

(1) 감사개요

□ 1차 : 기관감사

○ 일　　시 : 2025. 10. 13.(월) 10:43 ~ 2025. 10. 14.(화) 00:11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의겸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 2차 : 종합감사

○ 일　　시 : 2025. 10. 29.(수) 10:12 ~ 23:34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의겸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기관장 배석

(2) 주요 감사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14.(화) 10:08 ~ 22:2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한준 등 1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감사내용

○ LH의 사업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맞춤형 주택공급사업 모델의 구축, 지불가능 주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 강화, 민간 기업의 참여 방법 개편,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경영평가 기준 개편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 검토 필요

○ LH의 사업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교차보전 구조, 현행 지역 인재 할당제, 공공임대의 민간 참여 제약 요건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 제한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 공공주택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우수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사실상의 전관업체가 LH의 전관업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LH 사업을 수주하는 현황과 관련하여, LH 개혁위원회에서 논의 필요

○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분양 혜택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당첨자 소득 기준 상향 등의 방안 협의 필요

○ LH의 재무건전성, 착공 대기 물량 및 전문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사업 직접 시행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필요

○ 9·7 대책(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공을 위해 LH의 재정 안정화 및 전문 인력 적기 보강 대책 마련 필요

○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심과 대책 마련 필요

○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국익 및 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사업 시행 필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 평가 개선, LH 내 추정분양가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정성 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추진 방안 마련 필요

○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신속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LH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확충 필요

○ 공사 자재용 철근의 무단 반출에 대한 적극적 조치 필요

○ 준공 이후의 빈번한 설계변경 및 현장별 상이한 준공 정산 시기 등 관련, 자체 체질 개선 및 시스템 개혁 방안 마련 필요

○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항목에 냉방설비 설치 포함 및 냉방설비 없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 가구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 우선 설치 필요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난방연료에 대한 공평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법률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 원활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충원 필요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주거복지사의 필수 역할을 고려하여 인력 증원 및 배치 범위 확대 필요

○ 조성원가 수준의 택지 공급 방안과 관련하여, LH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공공사업 수행 역량 저하 및 시세차익에 대한 투기적 수요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용인 하갈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중학교 통학 학생의 안전 확보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 고가차량 보유자의 공공임대주택 편법 입주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 공유 차량에 대해 지분 가액이 아닌 차량 전체가액을 자산으로 산정하도록 제도개선 및 고가차량 편법 보유 전수조사 실시 필요

○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불법 전대 및 숙박업 등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자에 대한 입주제한 기간 확대,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공사·하도급사 분쟁 등과 관련하여, 공공성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리·대응 필요

○ LH 사업 수주 감리업체에 대한 벌점의 단기 효력 및 불복 절차로 인한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벌점 제도의 법적 정비를 통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을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전대 문제 규제 필요

○ LH 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 등 장기·저리의 공적 금융 확대 논의 필요

○ LH의 재무 건전화를 위해 영구채·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대토·현물보상 활용 및 미매각용지 매각·개발 등 다각적인 재원 대책 검토 필요

○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보상가 산정 방식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시행 권한 등에 대한 제도 개편 검토 필요

○ LH의 주택 135만호 공급 직접 시행과 관련하여 안전 관리 인력 충원 및 기관장의 책임 증가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토지임대부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 가격 조절 등에 장점이 있는 제도로,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적정 임대료·수익 구조 설계 및 운용 기관인 LH의 구조 개혁 등의 면밀한 검토 필요

○ 모바일 오피스 구축 사업을 업무 역량 향상 기여도 및 비용 절감 등 구체적인 성과목표 및 실행방안 등과 연계하여 추진 필요

○ 층간소음 저감 방식 중 경제성이 있는 건식 난방 기술의 현장 적용 지연 상황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유 소명 및 구체적 적용 계획 마련 필요

○ LH가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단체를 후원한 정황 등과 관련하여, 민간 협력에 대한 외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절차 등 점검 필요

○ LH의 공공주택 건설 착공 지연 및 착공 물량 연말 밀어내기 관행 등을 해소함과 아울러, 민간자본 참여 등 다각도의 방안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정부 재정 의존도 완화 필요

○ 9·7 대책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정 및 자체 수익 창출 기능이 있는 공기업으로의 존속 방안 등 지속 가능한 LH의 기능 검토 필요

○ 공공임대주택 중 공가율이 높은 소형 평형 주택과 관련하여, 입주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하여 리모델링과 넓은 평형 주택의 공급 확대 등의 방안 강구 필요

○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소셜믹스)의 임대주택 식별이 가능한 상황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차별 방지를 위해 관급 자재 적용 예외 등의 방안 검토 필요

○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기준사업비 동결 및 기존 임대주택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 등과 관련하여, 기준사업비 개선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 재정·세제 지원 확대 필요

○ LH 든든전세주택(시중 전세가격의 90% 이내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높은 공가율과 관련하여, 전세가율 하향 조정 방안 검토 필요

○ LH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저조한 준공률 및 지연·취소 등 사업관리 체계의 문제와 수주실적 중심의 접근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상권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역할 재정립 필요

○ 반지하주택 매입 제도의 저조한 실적과 관련하여, 주택 건령 기준 등 매입가능 대상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 설계 기준 및 예측을 넘어서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주택 설계 기준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 및 비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아울러 배정 물량의 수도권 편중 문제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위험성이 높은 지하층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에 공급하는 반지하주택 매입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축 주택 매입 위주의 운용 방식 재검토 필요

○ 특약을 위반한 기업의 매입임대 약정 이행 요구에 대해 철저한 조치 및 제도 보완 필요

○ LH 공공주택 사업장에 스마트 우편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무인 택배함 공급 및 특정 업체의 공급 과다 점유 상황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 필요

○ 임대주택단지 내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유휴시설이 된 어린이집 등 주민 공동시설을 입주자 연령 구성 및 수요에 맞게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필요

○ 10년 이상 미매각된 학교용지를 포함하여 LH 보유 미매각 용지의 용도 변경 등 신속한 활용 방법 마련 필요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재원이 확보되는 경우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LH의 사업 참여 여부 검토 필요

○ LH의 징계 감경 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분명한 감경 기준 마련 필요

○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기대 수익률이 낮아 민간 우량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고, 우량 건설사가 참여하더라도 기대 품질에 못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희망자에게 정확한 설명 필요

○ 전관업체 수주 제한을 위한 근거 법률 개정 노력 및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주거복지사업 중 수선유지급여의 수요 대비 예산 부족, 수리 실적 저하 및 대기기간 장기화 등과 관련하여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 부도·파산 등의 위험이 있는 원청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방지를 위해, 일정한 경우 발주처가 원청의 동의 없이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비 지원단가 현실화, 신속한 인허가, 입주자 이주대책 등의 계획 수립 필요

○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이 제한된 업체가 LH 사업에 입찰이 가능한 상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등 검토 필요

○ 화성 진안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덕영대로의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교통대책 마련 필요

○ 공용 테라스하우스 공간을 최상층 특정 세대를 통해서만 출입 가능하도록 설계한 LH 주택 구조가 분쟁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사례 전수 점검 및 분쟁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신축 매입임대주택사업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성과평가를 통한 유형별 선별 확대 및 입주까지의 목표 기간 관리 등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사업승인 후 미착공 중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세밀한 원인 조사 실시 및 장기 미착공 지구에 대한 재구조화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LH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중국산 CCTV의 설치 현황 전수조사 및 교체 계획 수립 필요

○ 전세임대주택 수시 모집 일시 중단과 관련하여, 청년·신혼·다자녀가구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미매각용지 신축 매입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건설사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LH는 세금·비용 등 손실을 중복 부담하는 사업구조 여부 및 저조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사례 확인 필요

○ 역대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담당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는바, 사명감을 기반으로 공공주택사업 추진 필요

○ 안전등급 미달, 장기 하자, 주택 노후 등의 사유로 공급곤란주택으로 분류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유형화 및 유형별 관리 기준 수립 필요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아파트 바닥 구조 층간소음 차단 성능 심사 제도 등의 개선 필요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 실적은 저조한 반면, 수도권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매입 확약 제도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대 필요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 확대 및 지방의 재정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 필요

○ 소래IC 공사비 부담을 둘러싼 인천광역시와 LH 간 소송에서 인천광역시가 승소한바, 예산 수립 등 착실한 사업 추진 필요

○ 울산광역시 송정 지구 고가차벽공사사업 절감 예산을 활용하여 효문공단 인접 도로 구축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주택의 하자 저감 및 하자 발생시 신속 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주택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품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필요

○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제기 등 제재 회피를 통한 LH 사업 수주 방식에 대한 방지책 마련 필요

○ 약정형 신축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공사비 산정방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택지매각 중단에 따른 유동성 위기 및 부채비율 증가 가능성 관리를 위한 재무·사업구조 개편의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필요

○ 사이버 보안 취약성 심화 및 정보보호시스템 노후화 지적과 관련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호 보호 예산 긴축 기조 수정 필요

○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공정 계약 구조 문제의 대안으로서 적정임금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준비 필요

○ 현행 공급주택 공급 체계 점검 및 공공부문 주택공급 직접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구조 개혁 필요

○ 공공주택 입주대기자 명단 통합 관리를 통한 정확한 수요 예측 및 공실 주택 최소화 방안 등의 검토 필요

○ 주거급여 등 비핵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 시급한 업무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공주택단지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확대 필요

○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 완화 및 소득구간별 최소 입주자 선정 비율 개선 등 실질적인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소셜믹스) 실현 방안 마련 필요

○ 수선유지급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비롯하여 수급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LH의 공공주택사업 직접 시행에 따른 추가 자금 소요 및 미분양 리스크 등과 관련하여, LH의 역량 및 재무구조 검토 필요

○ 사전점검 시 하자 지적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입주민 안전 및 재무 안정을 위해 시공·감리 단계부터 전면 재점검 필요

○ LH의 재정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임대주택 악성 공가 증가 문제의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공사비 현실화, 주민참여 확보 및 LH의 재정안정 등 핵심 과제 해결 필요

○ 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바,

공급실적 제고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 필요

○ 경남 진주 혁신도시 NHF 10단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수계획 수립·이행 및 하자 현황 등을 고려한 분양가 산정 필요

○ 건축물 문틈 손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KS 인증규격품 사용 확대방안 마련 필요

○ 공공임대주택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및 고용 구조 개편 필요

○ LH 발주 현장 노동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위조 여부 전수조사 및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대책 마련 필요

○ LH 발주 현장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을 받는지 여부 실태조사 필요

○ 공공주택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과 관련하여, LH가 사업 총괄 주체로서 최종 책임을 지는 명확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및 품질 보증을 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 해결 대안 마련 필요

○ 광명시흥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인 서해안로 확장공사의 사업기간 단축 적극 추진 필요

○ LH의 공공주택사업 직접 시행 방안과 관련하여, 재정여건에 따른 수행역량 부족, 품질 저하 및 공공주택의 공공성 훼손 우려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토지보상 및 대지조성 등 선행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2025년의 착공 목표 달성 필요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간소화, 매입 범위 확대, 매입가격 기준 개선 등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한 역할 강화 필요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매입절차 진행 및 심의기준 조정 등 제도 개선 필요

○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의 조속한 착공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공가 발생 예방을 위해 입주자의 선호를 반영한 공급, 입주자격 완화를 비롯한 수요 발굴 및 공가율이 높은 유형의 활용방식 전환 등 제도 개선 필요

○ 쪽방촌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 및 법령·제도 개선 필요

○ 2020년 10월 도입 이후 단 한 곳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LH의 ‘안단테’ 브랜드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 마련 필요

○ LH의 공공주택사업 직접 시행 방안과 관련하여, 철저한 시공사 관리·감독 및 외부 감리에 대한 LH의 책임 명확화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LH의 책임 강화 필요

○ 공익사업 시행의 주요 지연 원인인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 필요

○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이율 인하 필요

○ 분양가가 부동산 시황에 따라 책정되는 정책으로 인하여 분양가의 변동폭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대신 퇴거를 희망하여도 양도세 부담 등으로 매각이 곤란한 임대단지의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정전사고에 대해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을 통해 사전예방 관리체계로 전환 필요

○ 취약계층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확충 및 설치 대상 단지 확대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전담 인력 증원 필요

○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을 고려하여, 고령자복지주택 내 요양시설 확대 필요

○ 공공임대주택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대형 평형 공급 및 하자 발생 예방 등을 통한 주택 품질 개선 필요

○ 정비사업의 수도권 편중과 관련하여, 지방 중소도시에 대해 주거 및 사회복지, 일자리 등을 통합하는 통합형 정비전략 수립 필요

○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 공공개발 책무 이행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추진 등 그린 주거복지 모델 수립 필요

○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행복주택 공실률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자격 유연화 필요

○ 지역사회의 실질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 등 주택관리 용역 제도 개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율 및 손실액 증가와 관련하여, 지역별 맞춤형 공급 전략 수립, 노후 단지 리모델링 확대 및 공가 관리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관리 강화 및 노후단지 리모델링 등 핵심 기능에 책임과 역할을 집중하기 위한 계획 마련 필요

○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시행사와의 상생 등을 고려하여, 위기 시행사에 대한 계약 조정 및 몰취계약금의 반환·감액 등 계약 관행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의 소극적 행사로 인해 후순위 피해자의 경매차익 회복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매입기준가 운용의 경직성 개선 필요

○ LH 발주사업 현장에서 무자격자가 감리 등 기술인 역할을 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사업장 전수조사 및 책임자 문책 필요

마 한국도로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16.(목) 10:08 ~ 19: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함진규 등 12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 주요 감사내용

○ 설계·시공업체 선정 및 특정공법 심의에 있어 전관기업 밀어주기 의심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낙하물 사고 감소를 위한 낙하물 신고포상제 운영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공사 추진 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 불식 필요

○ 직영휴게소와 임대휴게소 간의 가격 차이를 점검하고 직영휴게소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안전사고 발생 시 임원문책규정이 사문화된 규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 필요

○ 경영실적 평가에서 안전 및 재난관리, 윤리경영 분야의 저조한 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휴게소 입점업체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휴게소 운영사와 입점업체간 계약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 고속도로 청소와 관련하여 기관 목적에 맞게 도로보수 유지관리 업무수행 필요

○ 톨게이트 수납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관련 조정합의 등 조기 종결을 위한 적극 대응 필요

○ 통행료 미납 예방을 위한 징수절차 개선, 처벌 규정 강구,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휴게소 음식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곡류·육류 공동구매방식 적용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다봄CCTV, 레이더식 돌발상황 감지 시스템 감사원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전 직원의 청렴경영을 위한 자구노력 추진 필요

○ 고속도로변 칡넝쿨 방치로 인한 문제 개선 필요

○ 시간대나 기후 여건에 상관없이 차선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신기술 도입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고속도로 안전순찰차량 교체주기 개선 및 노후차량 교체 필요

○ 수도권본부 사옥매입 관련 비용 과다 및 대안 검토 미흡 등 국토교통부 감사지적에 대한 조치 필요

○ 유휴부지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AI 기술 도입 등 관리시스템 개선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필요

○ 신갈고속도로버스정류장 고성능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필요

○ 고속도로 내 졸음쉼터 및 화장실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도로 열선시공 관련 규정 준수 및 표준시방서 마련 필요

○ 노면색깔유도선과 도로표지 색상일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필요

○ 고속도로 오진출 차량의 기본 통행료 면제 및 짧은 요금소 간 인하 등 통행료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졸음쉼터 청소담당 인력(현장 지원직) 관련 유사 임금청구소송에 대한 조속한 해결 필요

○ 졸음쉼터 청소담당 인력 감소 관련 외주화를 지양하고 직영화 검토 필요
○ 과적차량 분리운송 확대를 위한 실질적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화주 및 운송사업자의 과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필요
○ 계양강화고속도로 종점부 접속도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 필요
○ 스마트톨링 사업이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노후 고속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정밀안전점검 및 포장 리모델링 사업 계획의 적극 추진 등 실효적 대책 마련 필요
○ 고속도로 인근 통로암거와 관련하여 교통량,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국비 지원기준 마련 필요
○ 한국도로공사 발주 연구용역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한 계약사무규칙 준수 여부 등 전수조사 필요
○ 명절 통행료 면제로 인한 도로공사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 스마트톨링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소 인력 조정 등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철저하게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주유소 보안용 CCTV를 화장실 모니터에 송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포트홀 문제 대응을 위하여 자동탐지장비 탐지율 개선 등 대안 마련 및 선제적인 보수 추진 필요
○ 후불하이패스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고객 마일리지제도 도입 검토 필요
○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방음터널 설치 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조속한 협의 필요
○ 고속도로 비탈면 점검 관련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점검계획 수립 및 적시 조치 필요

○ 휴게소 식품위생 관리 대책 마련 및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시 위생점검 결과 반영비율 상향 검토 필요

○ 고속도로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고속도로 편입 등 방안 강구 필요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시흥IC~고강IC) 전 구간 지하화 검토 필요

○ 에코델타시티에 IC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필요

○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동김해IC-진해신항만) 관련 조속한 보상 추진 필요

○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시스템 시범사업 개선 등 종합대책 마련 필요

○ 휴게소 종사원 근로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이 과거에 비해 후퇴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설계변경 최소화 및 설계변경 시 공기연장 적극 검토 필요

○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시 즉각적인 패널티 등 제도 개선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청소 소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화장실 관련 졸음쉼터 진입로 및 휴게소 점자블럭, 점자표지판 개선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창업매장 도입 취지에 맞도록 운영 개선 필요

○ 길사랑장학재단 임원에 대한 과도한 급여 문제 등 전반적인 운영 문제 개선 필요

○ 도로공사 RE100 참여를 위한 휴게소 주차장 태양광 발전 인프라 구축 및 유휴부지, 방음벽 등을 활용한 단계별 태양광 발전 확충계획 마련 필요

○ 휴게소 주차장·진입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요원 배치 및 데이터·AI

활용 시스템 구축 등 휴게소 안전·혼잡대책 마련 필요

○ 건설공사 발주처의 감독관이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률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건설현장 안전관리실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및 관리대책 강구 필요

○ 안전순찰원 마약사건 관련 근무 전 음주·마약 간이검사 의무화 검토 필요

○ 고속도로 도로표지판 내 상업시설 표기 관련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필요

○ 비상임이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 대전 지역 도로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대전 소재 기업 부재문제 개선 필요

○ 미결용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졸음쉼터 내 범죄예방대책 및 차양막 설치 검토 필요

○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 구간 확장사업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 필요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관련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관리감독, 평가체계 정비 등 검토 필요

○ 안전순찰원 업무상 피해 방지 대책 및 법적지위 보장 방안 마련 필요

○ 경인선 지하화공사 착공 전 상부도로 관리권을 인천시에 이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소래IC 비용분담 관련 관계기관(LH, 인천시 등) 협의 후 영동선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필요

○ 용인휴게소-안산휴게소 구간 내 적정 간격의 휴게소 설치 및 북수원 환승휴게소설치 관련 후속 대책 마련 필요

○ 도로 건설현장 안전 등을 위한 BIM 전담조직 운영 및 도입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지하고속도로 추진시 안전한 주행환경과 재정 문제를 고려하여 민자방식이 아닌 재정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고속도로 요금소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휴게소 종사원 고령화 및 시설 노후화 대비 운영체계 개선 필요

○ 민자휴게시설 사용료 관련 분쟁 및 휴게시설 대량 계약만료 예정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 및 충전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 강화 필요

○ 휴게시설 운영업체 태아산업 등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특혜 의혹에 대하여 조사 필요

○ 고속도로 법면 등 쓰레기 청소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과적 단속 추적시스템 후속이행 현황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시흥IC 정체개선을 위한 진출입로 확장 대책 마련 필요

○ 과적단속원들의 제한차량 단속을 위한 안전공간 기준 마련 및 제한차량 단속인원을 규정에 맞게 3인 1조 운영하도록 개선 필요

○ 고속도로 인근 산불 발생 대비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작업장 실시간 위치정보 안내 관련 실질적인 추진 방안 마련 필요

○ 교통·건설현장 CCTV 영상품질 표준화 및 관리기준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경기 북부 도로 중앙분리대 단부 구간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 관련 지침 적용 및 관리감독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고속도로 IC 설치 관련 국비 지원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 마련 필요

○ 영종·인천대교 독립채산제 적용 및 조기 무료화 대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협의 필요

○ 성과관리지표 내 청소 관련 지표 반영 필요

○ 상습정체구간 및 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시설물 파손사고 재발 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철저한 보수 등 조치 필요

○ 사고치사율이 높은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종합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상습교통사고지역 보수공사 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내부취업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등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재취업 심사도입 등 도로공사 퇴직자 관련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남북6축 연장과 함께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없는 의령에 IC 설치 검토 필요

○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 시 턴키(일괄하도급) 계약 지양 필요

○ 고속도로 시설물 손괴 복구비 미징수 문제 개선 필요

○ 휴게소 내 태양광 패널 추돌사고 감소대책 마련 필요

○ 고속도로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 저감 대책 마련 필요

바 한국철도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1.(화) 10:04 ~ 19:03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3층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정래 등 1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경전선 고속철도 운행 횟수 증편, 경전선 막차 운행시간 연장에 대한 검토 필요

○ 높은 당일 반환율 문제의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반환수수료 제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속히 개선 필요

○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등 코레일의 화물철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노란봉투법 대응 전담 TF 구성 필요

○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하여 작업자 실명 등록 의무화, 안전교육 이력 전산 대조 시스템 도입, 하청업체 인력 변경 실시간 보고 체계 등 추진 필요

○ 코레일-SR통합 과정에서 SR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일반선 자동살수장치를 내년 중점관리 개소 외 나머지 232개소까지 모두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 필요

○ KTCS-2 사업에 대한 청탁 의혹 등을 명백하게 밝힌 이후 추진 필요

○ 청도 열차사고와 같이 작업계획서 상 작업자가 교체되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열차접근경보앱에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CTC정보시스템을 공사와 연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 필요

○ 재생에너지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태양광 설비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선로 사이나 방음벽, 울타리 펜스 등의 태양광 패널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철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송에 나서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코레일테크 직원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주5일제 미시행역 및 신설역에 대한 인원 충원 요구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철도교통의 안전과 사고 예방, 사고 시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CCTV설치 기준지침 등을 개정하고, 선로 인근 CCTV의 추가 설치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원주역사, 신림역사 등 폐역사 개발 시 주민 의견수렴 후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추진 필요

○ 열차 내 CCTV 정보의 보관기간을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선 필요

○ 청도 열차사고로 돌아가신 유족과 부상자들의 처우 방안 마련 필요

○ RF방식의 열차접근경보앱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청도 열차사고지역과 같이 사유지 분쟁중인 9곳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KTX 열차운임과 관련하여 소요 시간 차이에 불구하고 동일한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KTX 운임체계 개선 필요

○ 다원시스 차량 관련 1차, 2차 계약 납품이 지연되고 중량 초과 등 부실 제작 차량이 납품된 상태에서 3차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제작 기술평가·현장 실사·신용등급 평가·입찰제도 등 부실계약 과정과 당초 설계기준보다 중량이 초과된 부실차량 납품 및 선금 사용내역 미점검에 따른 선금 목적 외 사용 발생 등의 부실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납품지연 예방·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방안 마련 필요

○ 납품지연이 심각한 철도차량 제작사와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납품지연 해소방안 마련 필요

○ 다원시스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납기지연에 대한 부정당업체 지정 검토 등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철도종사자 음주와 관련하여 음주측정시스템 문제, 솜방망이 처벌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탈선감지장치 오작동 해결을 위해 감지장치 기술 업그레이드 등 검토 필요

○ 광주역에서 익산역까지 가는 새마을호의 환승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향후 신규열차 도입 시 호남선, 광주역에 우선 투입 필요

○ 재생에너지를 통한 자체 발전 추진과 함께 서남권 재생에너지 사업과의 연계 등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SR통합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 행사하고 있는 자회사도 흡수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15분 재승차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서울지하철 1호선 천장 누수와 관련하여 매뉴얼 및 대응조치 등 철저하게 관리 필요

○ 외국인 국적별 부정승차 현황 등 통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열차 운행 시 정시율이 하락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 고객 대기선과 장애인 유도용 점자블록을 병행 운용함에 따라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최근 운영하고 있는 열차 대기선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창원역, 신창원역 등 방치되고 있는 폐역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열차 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열차 내 전기소화기, 질식소화표 배치 등 배터리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개봉역사 상업시설 임차계약 종료시 전차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필요

○ 기후위기에 대응한 서행운전 기준 등 재정비 필요

○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하여 철도 대비 보행로 미확보 구간 해소 필요

○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 추진방안 마련 필요

○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광명역 노동자를 서울역 트레블센터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부당전보 또는 불법파견 소지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

○ 주간보수작업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간보수작업 중단 및 4조 2교대 전환 등 제도 개선 필요

○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필요

○ 고속철도 자갈궤도를 콘크리트 궤도로 개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선로 위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의존한 안전 시스템에서 시스템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코레일과 SR 간 교차운행 시범사업보다 기관 통합이 효과적이라고 보이므로 신속한 기관 통합 추진 필요

○ 철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영업열차 자동검측시스템 확대 및 차단작업 시간 확보 필요

○ 열차와 작업자를 분리하기 위해 상례작업 전면 금지와 야간 차단작업 실시 등 차단작업 전환 계획 수립 필요

○ 상습적인 승차권 대량구매 이후 취소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철도 사고 시 안내체계 부실 및 시각적 안내 미흡한 상황에 대한 개선 필요

○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

○ KTX-1 대체차량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에 맞게 필요수량을 재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예매 시스템 서버 안정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 필요

○ 내부취업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급수 이상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고속철도 정시율 개선을 위하여 작업중지명령 해제 추진 필요

○ 철도노조 파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 기준인 기본급의 80% 개선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조속히 합의할 필요

○ 철도차량 제작계약의 납기 산정체계 개선 및 제3전문기관 검증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재생에너지를 열차로 수송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철도차량 도입사업 추진 시 조달청과 협의해 수주업체의 신용평가 기준 강화 필요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7.(월) 10:03 ~ 17:39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학재 등 1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 주요 감사내용

○ 질의서 절도 건에 대한 조치계획 및 파면에 준하는 징계 필요

○ 자회사 파업 관련 화장실 오물투척 및 업무방해 등에 대한 법적검토 및 공사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자회사 정규직 전환, 위탁용역비 증가에도 매년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자회사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공사 대안 마련 필요

○ 과거 정규직 전환 시 채용비리 의심자 93명 중 8명을 제외한 인력을 채용했는데, 상기 인력에 대한 고용 적정성 재검토 필요

○ 지방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 공항연계 교통지원사업 협의 필요

○ 임대료 인하를 통한 면세점 상생 및 국내 면세사업자 보호기준 마련 필요

○ 노조의 청사 불법점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필요

○ 자회사 파업으로 인한 여객 불편, 공항운영 차질,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예정에 따라 자회사의 교섭요구가 예상되는데, 인천공항에서는 TF 구성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 필요

○ 공사와 자회사 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 강구 필요

○ 공사-자회사 간 상생방안 마련 및 인력증원 등의 처우개선 검토 필요

○ 안전근로협의체에서 교대근무제 안건이 거부되었는데, 안전문제로 인식하고 자회사와 협의 필요

○ 자회사 산업재해 점검을 철저히 하여 차년도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영종대교 실시협약 관련 재협상 필요

○ 보안검색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인정한 1심 판결 취지를 확인하고, 공사 직접고용 이행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감독 필요

○ 공항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디젤 지상조업장비를 친환경으로 전환 필요

○ 인천-애틀란타 노선 위탁수하물원격검색제도(IRBS) 도입 관련 홍보 필요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민의힘 당직자 워크숍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발언의 진위 확인 필요

○ 중소기업 기술개발구매제도 관련 공사 귀책으로 개발제품 미구매 상황 발생 시 중소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공사가 해외사업장에서 맺는 입찰계약 시 국내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찰 시 자국 기업에 가산점 부여 방안 검토 필요

○ 공사 상주직원 출입증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 인천시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이행 미비에 대한 대안마련 및 조속한 납부 필요

○ 정부 협의를 거쳐 공항운영 전반에 BIM 등 선진 스마트 기술 접목 필요

○ 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인천시 등과 협의하여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 설립 검토 필요

○ 공항주차난, 다자녀가구 및 노약자 등 대상 교통, 친환경 경영 등을 고려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공항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여객에게 공항시설 할인권 제공 등의 방안 검토 필요

○ 공항 시설사용료 인상 전제조건으로 공항 안전강화 및 게이트 병목해소 등의 대책수립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 필요

○ 계엄 때 출근 내용, 법무부로부터의 연락 여부 등 계엄에 미관여했다는 입장 소명 필요

○ 공사/자회사 임원 선임 시 외부개입 원천 차단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양 공사의 K-UAM 사업의 중복 투자에 대해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검토 필요

○ 자회사 감독 및 견제를 위한 자회사 이사회의 외부인사 확대 및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필요

○ 부채 및 차입금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기부금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

○ 공사 경영실적 대비 사회공헌 부족, 특히 굿윌스토어 등 지역공헌 사업 확대 필요

○ 일부 항공사에서 카운터에서 발권 시 수수료 부과, 디지털 소외계층 등을 고려한 기본 서비스 유료화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인재개발원 국민의 힘 워크숍 참석 등 사장의 정치적 중립 준수 필요

○ 연예인 출입국 사진촬영 위한 광고물 부착 및 자리 선점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연예인 공항이용계획서 부실 또는 미제출, 동선 파악 불가, 출입국 혼잡 등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관리 대책 수립 필요

○ 공항 혼잡 시 처리기준에 따른 인력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점검 필요

○ 정부와 협의하여 상주직원들의 연예인 사진촬영으로 인한 혼잡 문제

가중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및 제재 규정 마련 필요

○ 연예인의 공항 혼잡 유발 시 혼잡유발부담금과 같은 제재수단이 필요하며, 공항이용계획서 미제출시 혼잡유발부담금 가산 필요

○ 인천공항에서 연예인 혼잡으로 발생한 경호인력 추가 배치 비용을 기획사에 부담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공시설인 공항을 연예기획사가 상업 및 홍보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방안 검토 필요

○ 제1여객터미널 주차대행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인력비 감축, 고용승계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K-airport 수출 활성화를 위해 철도, 방산, 건설 등 유관산업 연계 및 범정부-민간 협업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수출 전략 마련 필요

○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KDI 재검증 등 면밀한 검토 필요

○ 식물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 주변지역(강서, 송도 등) 중복투자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검토 필요

○ 불법 드론 이륙 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드론 운용자 적발 시스템 구축 필요

○ 인천국제공항의 데이터센터 타당성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공항의 폭발물 · 테러 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공항운영기관의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조류충돌 예방, 조류퇴치 수단, 조류유인시설 관련 규정 정비 등 항공안전 개선 방안 및 추진 계획 수립 필요

○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SAF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흑차, 불법 콜택시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흑차, 불법 콜택시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구성된 TF에 적극 협조 필요

○ 중국인 입국 급증 속 공항권 불법 유상운송(흑차) 확산과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공식주차대행의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범죄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공식주차대행의 명칭 개선과 함께 범죄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마약 휴대 입국 시 X-ray로 적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세청과 협의해서 대안 검토 필요

○ 공항 내 위해물품 반입 건수가 지속 증가 중으로, 이용객의 책임 의식 강화 방안 및 안보위해물품 반입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기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기부가액 선정 등 투명한 사후처리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

○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평가체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공항 에어사이드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주행 운행기반 조성 필요

○ 인천공항의 공항 내 위험물 적발사례 및 보안검색 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항공보안 국제협력체계 구축 필요

○ 공항 내 문화예술 작품 및 체험관 등 양질의 콘텐츠가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 수립 필요

○ 인천국제공항 랜드마크 개발 시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에 맞게 한국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 설치 필요

○ 중국 자본이 국내 면세시장 진출 시 관련 정보가 외국자본에 반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국내 면세사업자 보호기준 마련 필요

○ 스마트패스 안면인식 실패율(22%)이 높은데 실패원인 규명 및 개선대책 마련 필요

○ 현장 인력 배치를 통해 스마트패스 인식 불가 시 가급적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방안 고려 필요

○ 수하물 컨베이어벨트 고무에서 알갱이 및 벤지포렌 등 발암물질이 발생하나 분진측정이 어려우며, 그라인더 작업 시 화재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계획 수립 필요

○ 수하물 처리 자동화 시스템의 UPS 축전기 관리가 터미널마다 상이하고, 교체주기 도래 축전지도 존재하여 안전사고(화재)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수하물사업소 근무현장 추락이나 낙상에 대비한 안전 장비 설치 및 작업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안전시설물 개선 필요

○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하여 인천공항공사는 소음부담금, 시설관리자 부담금 부담주체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포함 필요

○ FBO(Fixed-Based Operator) 시장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에 FBO 시설 신설 유치 적극 검토 필요

○ 항공사의 스마트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성과(실제 이용률)가 아닌 시스템 설치 · 운영 대수에 따른 사용료 할인 제도 개선 필요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북도면 등)에 대한 지원, 사회공헌 활동 확대 필요

○ 제2터미널 확장구역 공사비 지급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이 34.4%이며, 환급률은 11.7%로 낮은 상황인데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환급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항공사와 협조 필요

○ 쿠웨이트 T4운영사업을 제외하면 해외사업 수익률 적자, 제대로 된 수익 구조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조직개편을 통해 해외사업처를 2개로 확대하였는데, 해외사업 수익 구조 분석 등 내실있는 사업 방안 강구 필요

○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사업 수주 관련하여 면밀한 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 필요

○ 입국장 내 면세점 인도장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설치를 검토하되,

실효성이 없고 공항운영에 장애가 된다면 신중하게 검토 필요

○ 로드블럭 등 보안시설에 대한 운용 상한을 명확히 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로드블럭 교체 필요

○ 기내 배터리 화재 사고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과 유독가스 차단, 폭발 및 화염을 차단하는 안전장비 도입 필요

○ 제2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운영실태(혼잡 등 문제점) 및 여객 증가·고용창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검토 필요

○ 인천국제공항 내 앱호출 택시 관련 전용 앱 개발, 플랫폼 택시 협의체 조성 등 운영계획 마련 필요

○ 자기부상열차 운영자를 인천시로 변경하거나,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이용객을 늘리는 방안 등 적자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인천공항 접근도로가 전부 유료로 운영되는데, 국민의 교통복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선 필요

○ 혐오·선동 시위에 대한 공사의 집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 필요, 매체 허위보도에 대한 언론 대응 체계 마련 필요

아 한국공항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7.(월) 10:03 ~ 17:39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정기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 주요 감사내용

○ 건설 중인 울릉공항 내 지정면세점 도입 필요

○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혼잡 완화조치를 위한 검색대 확대운영 필요

○ 김해공항 활주로 오착륙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공사 소관 공항에서도 캄보디아 취업사기 출국예방 안내조치 필요

○ 공사 소관 공항 내 약국 없는 공항에 안전상비의약품 배치 필요

○ 연예인 출국 혼잡 관련 매뉴얼 개선 및 관계기관 협조 강화 필요

○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설치 필요

○ 공항 내 드론탐지시스템을 확대하고, 민군공항의 경우 군과의 MOU를 통해 공동 매뉴얼 마련 필요

○ 공항의 폭발물 · 테러 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공항운영기관의 단계별 대응체계 법제화 필요

○ 현행 「항공보안법」은 탑승권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 보완 필요

○ 법무부 유인 심사대에 공항 지문확인시스템 등 신원확인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조류충돌 예방, 조류퇴치 수단, 조류유인시설 관련 규정 정비 등 항공안전 개선방안 및 추진 계획 수립 필요

○ 온라인면세점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용 앱 구축 등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자회사 계약금액 낙찰률 개선 필요

○ 청주공항 제2주차빌딩 및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충 필요

○ 대구공항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 시설투자 필요

○ 지상안전사고 및 보안사고 감소대책 마련 필요

○ 일회성 불법촬영 점검체계 개선 및 상시적으로 불법촬영 탐지·차단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 필요

○ 지방공항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등 지방공항의 적자원인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한국공항공사의 실탄, 공포탄 미적발 사례 등 항공보안 실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검색 인력의 교육·점검 및 자회사 감독 필요

○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SAF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공항 계류장 내 조업·운영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예방대책 마련 필요

○ BIM 기술을 활용한 공항시설 관리를 위해 지원강화 필요

○ 적자공항의 재무건전성 개선 및 지방공항의 안전시설 투자방안 마련 필요

○ 기내 반입금지 물품 기증 사후처리 투명성 제고 필요

○ 자회사 파업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 노력 필요

○ 계엄 때 출근 내용, 법무부로부터의 연락 여부 등 계엄에 미관여했다는 입장 소명 필요

○ 대구공항 국내선 이용객 야외탑승 불편사항 해소 필요

○ 한국공항공사의 지속적인 적자 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지방공항별 전기차 충전시설 단계적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

○ 항공기 내 배터리 화재사고 예방노력 필요

○ 국내선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페널티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연예인 출국혼잡 관련 매뉴얼 개선 및 관계기관 협조를 강화하고, 공항 이용계획서 부실 또는 미제출, 동선 파악 불가, 출입국 혼잡 등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관리 대책 수립 필요

○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자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 필요

○ 공항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디젤 지상조업장비를 친환경으로 전환 필요

○ 일부 항공사에서 카운터에서 발권 시 수수료 부과, 디지털 소외계층 등을 고려한 기본 서비스 유료화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중국인 입국 급증 속 공항권 불법 유상운송(흑차) 확산과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양 공사의 K-UAM 사업의 중복 투자에 대해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검토 필요

○ 무안공항 재개항 전까지 다른 공항 이동 버스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방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금 또는 보조금 제도 마련 필요

○ 무안공항 재개항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개항 지연 시 관련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한국공항공사 임대료 체납액 관리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필요

자 한국부동산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3.(목) 10:02 ~ 19:0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손태락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의 소요 기간 단축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정량적 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한계 문제와 관련하여, 존치 여부 및 개선방안 등 검토 필요

○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예치금의 효율적 집행 및 주택 공급대책으로의 활용 검토 등 체계적 정비·관리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마련 필요

○ 부동산 통계 조작(수정) 의혹 등과 관련하여, 쇄신 방안 모색 필요

○ 지역별 부동산 가격 초양극화 상황에 대한 적극적 역할 수행

○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기획조사 후속조치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사·조치 필요

○ 상가 임대동향조사의 광범위한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상가공실률 통계의

시장체감도 향상을 위해 조사 방법 개선 필요

○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신속한 정보 제공 기능 등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폐지 또는 기준 변경에 대해 신중한 결정 및 제도 보완 방안 검토 필요

○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후속조치 수립을 위하여 부동산 취득원인별 현황 추가 등 통계 개선 필요

○ 기관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의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대해 긴밀한 협력 필요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사업의 한계와 관련하여, 대안으로 논의 중인 통합분쟁조정위원회의 공사비 조정 기능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AI 기반 이상거래 선별 시스템의 고도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필요

○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공표주기 단축 검토 필요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분석 고도화 방안 검토 필요

○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매물 모니터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 주택 유형과 플랫폼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공시가격 정정에 따르는 불편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제고 필요

○ 청약 부적격자 당첨 방지 및 부정청약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도록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규정 개정 필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임대인)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실질적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외국인 부동산 보유 통계의 신속·정확한 공표 및 통계 항목 확대 등을 위하여 통계 생산·공표 기관 일원화 필요

차 주택도시보증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3.(목) 10:02 ~ 19:0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윤명규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수탁은행에서 공공임대주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위탁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 필요

○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재산 조사, 구상권 청구 등 제도개선 필요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시행사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보증금 체납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보증 기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기관 업무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등 든든전세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보증 신청 단계에서 외국인 정보 확인, 제3기관 보증금 일부 예치, 채무불이행한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방안에 대해 적극적 검토 필요

○ 시세보다 높은 전세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보증을 받고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사례에 대해 보증이행 거절 검토 필요

○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이 공동주택 재고 증가로 인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 재검토 필요

○ 임대 종료가 임박한 리츠 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한 청산 기준 마련 필요

○ 임대리츠 사업장의 추가 임차인 모집 기준이 없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내부 기준 제정 필요

○ 전세보증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적 기구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이자를 수취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무이자 대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인정감정평가 제도로 인해 평가금액이 종전 대비 저평가되어 보증이 가입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가입 절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미가입 사업자를 엄정 제재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검토 필요

○ 인정감정평가 제도와 강화된 임대보증 가입요건으로 인해 깡통전세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비아파트 수익분석방식 도입, 2단계 교차감정제 등 6대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검토 필요

○ 인정감정평가 제도 도입으로 인해 다수의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2025. 10. 2.에 시행한 제도 보완책의 효과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추가 개선책 검토 필요

○ 든든전세주택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위탁 운영 방식을 포함한 업무 전 과정에 대한 점검 필요

○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출국 금지 등 공적 제재 방안 마련 필요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대출 요건 완화로 인해 여유자금이 감소하고 예산 대비 과도하게 공자기금에 예탁한 사례가 있으므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방안 검토 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임대인의 연락 두절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지방에서 전세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리스크 진단, 맞춤형 보증 및 회수 관리 체계 구축 검토 필요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에 대한 분양보증이 급감하였으므로 기회의 균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증체계 점검 필요

○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건을 갖춘 경우 융자 및 이차보전 등 심사를 조속히 승인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신청에 비해 가입률 등이 현저히 저조하기에 가입률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입신청 서류 중 임차인이 직접 구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정부 행정망을 연계하여 관련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확보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든든전세주택 하자보수 및 임대인 정보공개 시스템 홍보 예산 집행액과 비교하여 직원 사택 예산이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택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에 적정한 예산 편성 필요

○ 동일 업체의 분양보증 사고 반복 및 연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특정 법인이 전세사기 주택을 낙찰받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송 기간에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악성 사례에 대해 재발 방지 방안 검토 필요

○ 경·공매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유찰되어 채권 회수율이 저조하므로 낙찰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 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 가입 전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가입 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천안두정 리츠 사기는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명의 위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과 리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검토 필요

○ 업무협약을 맺은 법무사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연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정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아파트가 아닌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 같은 비표준화 주택에 대한 특화된 평가 방식 마련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 업무협약을 맺은 수탁은행의 대출 거절 실태 점검 및 협약 미이행 시 해지 검토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필요

○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개요건 완화 등 검토 필요

○ 안심전세앱의 일부 시세 위험성 확인 불가, 로그인 불편, 시스템 불안정 등 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다각적 홍보 등 이용률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 안심전세앱의 평점 및 댓글 조작 정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임대보증 업무의 민간 은행 전가 및 과도한 소요 기간에 대한 개선 필요

○ 민간임대리츠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평가위원 선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필요

○ 고위험 주택 및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등 국민이 안심하고 임차할 수 있는 시장 조성 방안 마련 필요

○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악성임대인이 줄어들지 않고 회수율도 저조하므로 개선책 마련 필요

○ 지방 중소 건설사의 회생 신청으로 발생하는 중도금 무이자 약정 파기 등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 보증기준을 강화하면 보증실적이 감소하여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므로 보증 건수를 증대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의 보증 사각지대 해소와 전세난 완화를 위해 주택가격 산정 기준 개선 및 제도 보완 필요

○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PF특별보증 운영 시 기존 PF일반보증과 분리하여 별도의 한도와 계정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민의 세금으로 보증료를 보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보증료 자부담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에 정해진 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최초 임대인보증발급 은행과 갱신 은행 간 보증정보가 연동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

○ 금융기관 임직원이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불법대출을 실행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전세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검토 필요

○ 주택도시기금의 장기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다양화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대한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필요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전문 운용 인력 확보 필요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공기관이 내규를 대부분 공개하고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비공개 관행 개선 필요

○ 안심전세앱의 시세 제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방안과 한국부동산원에 시세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임차인의 의도하지 않은 사기계약 연루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 절차 및 구제방안 마련 필요

○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조기 개최 필요

○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매입형 실적 제고방안, 계약 미체결에 따른 공실 장기화에 대한 대책, 당첨 포기 또는 계약 포기자에 대한 페널티 방안 등에 대해 검토 필요

○ 미분양 CR리츠 활성화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해 추가 세제 혜택 등 보완 대책 마련 필요

○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주택도시기금 수요자대출 약정 위반 문제에 대해 점검 주기 단축, 시스템 실시간 연계 등 실효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금투자심의위원회가 중단 및 지연 없이 정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매물 심사를 요청하면 보증 기관이 위험 요소를 검토하여 '보증보험 가입 가능 매물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임대인을 상대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소구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2022다247378, 2025.6.12.)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한 대책방안 검토 필요

○ 주택도시기금 서민 정책대출의 재원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대출금 회수 절차를 즉각적이고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대출 규제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임직원 임차사택 지원 및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4. 8. 이후 5개 법인으로 이루어진 단일 컨소시엄으로 모든 임대·전세보증 평가를 일원화하였으나 독과점 구조, 기존 감정평가액 하락으로 임차인·임대인·건설사의 피해,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임대보증금 보증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회수율은 저조한 상황이므로 국민이 안심하고 임차할 수 있는 시장 조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성과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저조하므로 손실자산 관리계획, 회수 로드맵 및 손실 재발 방지책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임직원에 대한 주택융자 지원 제도에 대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선 계획 마련 필요

○ 녹색 및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2026년도에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노력 필요

카 한국교통안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16.(월) 10:08 ~ 19: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용식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 주요 감사내용

○ 경량의 4종 드론은 자격관리, 교육 및 기체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사생활 침해, 사고 요인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 대책 필요

○ 황색신호 변경 시 신호 위반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딜레마존 해결을 위해 예비정지선 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연구 필요

○ K-패스 카드 발급기관에 지방은행을 포함시켜 고령자 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동참하고, 참여율이 높은 지자체에 예산 배정을 높이는 인센티브 방식 도입 필요

○ 전기차 의무검사 시 BMS 정보 제공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일부 중국산 전기버스 등이 BMS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 대책 필요

○ 택시운영관리시스템(TIMS)를 통해 플랫폼 호출·배차·수수료 등 택시 영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및 이를 위한 국회의 법률안 개정에 적극 협조 필요

○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차 안전검사 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마련 필요

○ 궤도시설의 노후화, 안전사고 급증에도 불구 궤도업체의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 개선 대책 필요

○ BMS 기능 표준화 모델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공단의 자체적인 리콜조사 확대 및 시행률 향상 노력 필요

○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통보 시 운전자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PM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운전자격 확인, 보험문제 등 안전대책 필요

○ 사용후 배터리 활용 여부 및 사용기준 등 마련 필요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오류검증 안전검사 시스템 구축 필요

○ 자율주행 레벨3에 대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검사 기준 마련 필요

○ 리콜 대상 중대 결함의 범위 확대 및 자동차검사 시 리콜대상 차량 확인과 연계 필요

○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가 시행되는데, 배달경험이 있는 배달종사자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방안 제안

○ 고령 운전자 ·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이므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확대 등 고령자 교통사고 안전대책 강구 필요

○ 불법드론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드론식별장치 장착 의무화 단계적 도입 필요

○ 불법 또는 미인증 튜닝부품 제작 · 판매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튜닝부품 성능 · 품질 적합조사' 인프라 및 예산 확충 필요

○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환경친화도 평가제도가 타부처의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 또는 온실가스 배출기준 평가 등과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수소차 내압용기 전용검사소 및 검사 전문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 및 자동차검사 시 리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내실 있는 품질인증부품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문제점 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미인증 기계식주차장 사전 적발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비사업용 캠핑카에 대한 과도한 검사주기 완화 필요

○ 고령자 운전 문제는 면허증 반납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므로 노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 필요

○ 불법튜닝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단속인력 확대,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원도심 맞춤형 교통안전 진단을 위한 시행 근거 마련 및 해당 사업 개발 필요

○ 교통안전 취약지역의 점검사업 이후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 지원 확대 등 교통안전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 허위 비행경력증명서 제출 방지를 위한 증빙제도 개선 등 드론자격관리에 관한 근본 대책 필요

○ 닛산 ‘리프’ 전기자동차에 대한 리콜 조속 추진 필요

○ ‘자동차 검사예약 서비스’ 시스템의 데이터 개방으로 다양한 벤처기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

○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결함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필요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의무배치 및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데 공단은 정보망 운영에만 머물러 있으므로 지자체별 이행률 · 조치율을 정기 관리 및 공표하여 책임성 강화 필요

○ 선거유세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승인(공단)-등록(선관위)-단속(경찰 · 지자체) 간 정보연계체계 구축, 지자체 단속권

부여, 공단 내 단속 전담조직 신설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체계 가동 등의 조치 필요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용 대형차량(버스, 화물) 등에 AI기반 운전자 모니터링시스템(DMS) 보급 확대 필요

타 국가철도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1.(화) 10:04 ~ 19:03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3층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성해 등 8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제5차 국가철도망 관련 KTX대구~창원 구간 고속화 사업 및 진해신항과 가덕도 연결 노선 반영에 대해 적극 검토 필요

○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 필요

○ 오송역 누수 및 과주여유거리 확보 방안을 포함한 오송역 현대화 계획 수립 필요

○ 고속철도 자갈 궤도의 콘크리트 궤도 교체 계획 수립 필요

○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사업 신속 추진 필요

○ 호남선 KTX-청룡 정상운행을 위한 변전소 용량 증설 필요

○ 서방천 신안철교 개량사업 조속 추진 필요

○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 필요 및 자체 태양광 발전소 운영 등 RE100에 동참 노력 필요

○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하여 자회사가 아닌 공단의 직접 수행 가능성 및 지방공사 등의 공동사업시행자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부전~마산 복선전철 2026년 개통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추진 필요

○ 대전 조차장 철도 입체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철도공단의 재취업 관리체계 점검 필요

○ 수서~동탄 구간 SRT와 GTX-A 선로 공용에 따른 선로 용량 문제 해결 필요

○ 원주역사, 신림역사 등 폐역사 개발 시 주민 의견수렴 후 공공성 측면에서 개발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추진 필요

○ 폐침목 처리 용역 업체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 마련 필요

○ 남부내륙철도 적기 준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 KR스타트업라운지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만성적인 역사 누수 해결을 위한 발주, 시공, 감리, 준공처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신속 추진 필요

○ 기후위기·폭염에 대비하여 선로 설계기준 변경 필요

○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군산역 주차장 확대 및 주차면수 확대 필요

○ 첨단기술, 데이터 기반의 철도공단 자체 비탈면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철도공단 발주공사 계약방식의 변경에 따른 실적검증 체계 강화 등 사전 준비 철저 필요

○ 출자회사의 이해충돌 관련 출자구조 운영실태 점검 및 이해충돌 예방 대책 수립 등 재취업 관리체계 점검 필요

○ 서해선 KTX 소사역 정차를 감안한 시설개량 추진 필요

○ 경인선 노후 방음벽 시설개량 추진 필요

○ 보행통로, 대피공간 확보 등 작업자 안전환경 개선 필요

○ 동탄역 엘리베이터 추가 신설방안 검토 필요

○ 목포 등 철도차량 정비시설의 조속한 구축 필요

○ 건널목 입체화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지자체 분담비율 완화 검토 필요

○ 충북선 고속화사업 추진시 제천역 경유방안 검토 필요

○ 구(舊) 안동역사 부지 개발 지연으로 폐선부지 방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필요

○ 노후화된 철도시설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경제성 분석의 구조적 편향성 문제, 지역균형발전 평가 방식 개선 등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가철도공단이 특정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현실에 맞지 않는 선로유지 관리지침 개정 검토 필요

○ 일반철로 자동살수장치를 전 구간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철도 선로변 CCTV 확대 추진 시, 선로변 CCTV 영상 및 IoT 센서 정보를 통합 수용 가능한 통합 통신망 구축방안 마련 필요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3.(목) 10:02 ~ 19:0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곽진규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면세점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면세산업 하향 추세 및 내수 소비 침체 상황에서 상품 기획, 개발 등 마케팅 개선 노력을 통한 경영개선 계획 수립 필요

○ 항공우주박물관의 재무개선 노력 및 박물관 본연의 기능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면세 판매품목 확대 계획 재검토 및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예래휴양단지(휴양형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사업추진 계획 및 연도별 구체적 로드맵·재원 마련 필요

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3.(목) 10:02 ~ 19:0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정희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소관 R&D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대금 지급 필요

○ 기술인증 심사의 신뢰성 제고 및 신청인의 심사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국토교통 R&D 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권역별 일정 비율 예산 배정 및 지역 기관·기업 참여 가점제 확대 등 국가균형발전 방안 마련 필요

○ 골재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R&D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거 한국국토정보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3.(목) 10:02 ~ 19:0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어명소 등 7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지하 10m 이내 지하개발사업에 대한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및 지하정보 변동 갱신 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 지하공간통합지도가 지하 안전 관리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구축·갱신 정보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중국산 위성항법시스템(GNSS) 장비의 과다 보유 등으로 인한 중요 공간정보의 국외 유출 우려 등과 관련하여, GNSS 장비의 국산화 비율 제고 등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 퇴직을 앞둔 임직원의 교육 파견 지원 및 퇴직 임원의 사내 강의 실시 등과 관련하여 특혜 여부 소명 필요

○ 과학적 해양환경 관리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AI 기반의 업사이클링 연안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신사업 발굴·확장 필요

○ 지적공부의 오류 및 지역별 오류 비율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030년까지 한시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기한 내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 필요

○ 장애인 의무 고용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구매목표 이행 필요

너 국토안전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14.(화) 10:08 ~ 22:2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일환 등 9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감사내용

○ 2종 시설물에 대해 이력관리를 체계화하는 대책 마련 필요

○ 시설물 안전점검의 신뢰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 개선 필요

○ NC야구장 사고발생에 따라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점검체계 마련 필요

○ 안전점검 기준 및 결과평가, 평가 결과의 행정처분이 미흡함에 따라 안전점검 절차 및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

○ 하부침하가 발생한 유등교의 가설교량에 중고 복공판 관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관심 및 점검 필요

○ 백현동 옹벽 현장 시찰 및 안전조치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재정립' 및 '첨단기술 기반 점검체계 도입을 위한 대가기준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E등급 시설물 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재난관리기금의 이주지원 활용을 위한 조례 제·개정 지원 필요

○ 하자판정에 따른 하자보수 이행률과 등록률의 혼용 보고 및 하자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과 보완책 마련 필요성 질의

○ 아차사고 신고 접수에 따른 계도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대한 법적 권한 확보를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국토안전관리원과 유관기관이 공조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추락예방 안전가이드’에 외국어(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타이어) 추가 및 현장 활용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현장점검의 효율화 및 효과 강화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권한 법제화 필요

○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공동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단기적인 조치계획 마련 필요

○ GPR탐사장비 관련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국내 도입 및 지하안전관리 예산 증액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용 중인 GPR장비의 탐지 깊이가 2m에 불과하므로 고성능 GPR장비 및 지반침하 관측망 등 신규 장비 도입을 검토할 필요

○ 지반침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포함하여 국가가 예방·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상 공중이용시설에 도로를 포함할 필요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정보체계(JIS) 강화할 수 있는 법 · 제도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지정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성능검사 시험장 설치 필요

○ 사전과 사후로 구분되어 있는 바닥충격음 성능심사기관의 통합 또는 추가 등 방향성 결정, 새로 개발되는 완충제에 대한 인증 기준 마련,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화 시스템 구축, 성능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사업

주체의 보고 의무화 필요

○ 3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 및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바닥충격음 사후성능검사 확대 필요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 성과 분석 강화 필요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착공된 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 및 자동화 계측 등 착공후지하안전조사 표준매뉴얼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스마트안전장비 등 지원 확대 필요

○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 목적인 시설 · 지하안전관리보다 AI · ESG · 동반성장 등 부수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바, 본업 강화와 현장 실효성 확보를 우선할 필요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지정기관으로서 층간소음 사후점검제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 마련 필요

더 ㈜에스알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1.(화) 10:04 ~ 19:03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종국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반환수수료 제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필요

○ 외국인 부정승차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KTX 임차를 활용한 공급좌석 추가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직원 '가족할인쿠폰'의 내부 지침 관련 시스템 재정비 필요

○ 오송 비상대응 체계의 통합 운영 및 평택지제차량기지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청각장애인 보조장비(텔레코일 존) 설치를 검토할 필요

○ 공정한 예매 기회 보장을 위해 환불위약금 대폭 강화, 평시 1인당 구매 제한 규정의 신설 검토 필요

○ 부정승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부가운임 대폭 강화, 상습 납부 거부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열차 운행 시 정시율이 하락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 평택-오송 구간 병목현상 해소를 위하여 동탄발 SRT 운행을 검토할 필요

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3.(목) 10:02 ~ 19:0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한동민 원장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건설기계 사고 증가에 따른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종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체계를 보완할 필요

○ 건설기계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을 고려해 현행 안전교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안전교육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

○ 스마트 · 초대형 건설기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필요

○ 미수검 · 부적합 · 말소대상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

○ 건설기계 등록대수 대비 부족한 인력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인력 확충과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안전등급 저조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조직 개편 및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

○ 건설기계 장기 미수검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미수검 예방관리 체계 구축 필요

머 주택관리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14.(화) 10:08 ~ 22:2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방성민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교육원)

(2) 주요 감사내용

○ 현장 직원 보호 및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대책 필요

○ 주거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사 배치 최소 세대수 기준 완화, 세대수에 따른 추가배치 기준 신설 등 대책 마련 필요

버 코레일관광개발㈜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1.(화) 10:04 ~ 19:03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3층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백신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KTX 여객승무원 안전업무 실질화 및 지휘체계 개선 필요

○ 여행상품에 사회적 약자 할인제도 도입 검토 필요

○ 프리미엄 상품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여행상품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내부 인권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 필요

서 코레일로지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1.(화) 10:04 ~ 19:03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3층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한상덕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해당사항 없음

어 코레일네트웍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1.(화) 10:04 ~ 19:03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3층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전찬호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관공서 공휴일 관련 코레일네트웍스의 노사간 재협상을 통한 새로운 합의방안 마련 필요

○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 간 임금격차에 대한 감축목표와 단계별 실행계획이 포함된 구체적 방안 검토 필요

○ 공사와 자회사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4조2교대 시범도입 등 단계적 근무형태 전환 검토 필요

○ 4조2교대 전환을 위한 자구 노력과 노동조합과의 적극적 협의 필요

저 코레일유통㈜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1.(화) 10:04 ~ 19:03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3층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정현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2) 주요 감사내용

○ 해당사항 없음

처 코레일테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1.(화) 10:04 ~ 19:03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3층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류영수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2) 주요 감사내용

○ 환경미화 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잔여 사업소의 주5일제로의 조속한 전환 필요

○ 야간 격일 근무체계 개편(3조 2교대 전환)과 관련하여 실질임금 하락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필요

○ 성과급 지급 전에 퇴직한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휴일대체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 필요

○ 이직율을 낮추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커 항공안전기술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7.(월) 10:03 ~ 17:39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황호원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립항공박물관)

(2) 주요 감사내용

○ 임직원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결과 보고서를 30일 내 관련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에도 지연등록 사례가 있어 국외출장보고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사용되는 시험장비 중 일부 장비가 교정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측정장비의 관리 강화 필요

○ '드론 실증도시 사업' 내 드론배송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대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원사업을 개선하여 민간 주도의 자생적 발전모델 발굴·투자를 확대하고, 드론배송 외에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실증 추진 필요

터 새만금개발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3.(목) 10:02 ~ 19:0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나경균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2년 연속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50%)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2년 연속 안전관리 등급이 4등급으로 기관의 안전수준이 매우 취약하므로 안전강화대책 마련 필요

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3.(목) 10:02 ~ 19:0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이강훈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 주요 감사내용

○ 폴란드 사무소 개소 배경, 운영의 적정성 및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 질의

○ 직원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EIPP 사업 재검토 필요

○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입자본금 확충 및 정부 출자 방식 개선 필요

허 건설기술교육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14.(목) 10:08 ~ 22:29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권대철 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2) 주요 감사내용

○ 해당사항 없음

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3.(목) 10:02 ~ 19:05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정형교 등 6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기관 비정규직 비율 개선 및 정규직 인력 확보 노력 필요

○ 공간정보 분야의 AI·빅데이터 관련 사업 적극적 추진 필요

노 국립항공박물관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7.(월) 10:03 ~ 17:39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인천)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연진 등 4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2) 주요 감사내용

○ 명예퇴직자 신청 대상 및 자격에 있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 공무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립항공박물관 인사규정 제66조를 개정(국가공무원→공무원)할 필요

○ 유물 입수부터 등록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관리 필요, 인력 보강 또는 전문 용역 투입으로 미전산 구간을 우선 해소하는 방안 검토 필요

○ 3등급으로 분류된 유물은 추가적인 손상이 없도록 신속히 보존처리를 실시하는 등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실물전시 확대를 위해 제2수장고를 위한 부지확정과 예산확보를 조속히 추진하고, 실물중심 전시 확대를 위한 단기 대책 추진 필요

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16.(목) 10:08 ~ 19: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석봉준 등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 주요 감사내용

○ 경력직 채용 및 연봉인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의 부적절한 채용, 인사관리 및 연봉인상에 대해 엄정한 조치 필요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인사팀의 잘못이 있을 경우 엄정한 조치 필요

○ 신입직원 채용 시점별로 상여금(명절상여금 포함) 지급기준이 상이한 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보상방안 마련 필요

○ 스마트톨링 전면도입 대비 고용안정 · 직무전환 대책 마련 필요

○ 영업센터장 지원자격에 공공기관 25년 이상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특정 집단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16.(목) 10:08 ~ 19:43

○ 장　　소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오병삼 등 3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 주요 감사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기존 위원 임기 및 신규 위원 공모 관련 개선 필요

○ 자동차사고 피해자 중심의 공제조합 관리·감독 업무 기능 강화 필요

○ 자동차보험 분쟁조정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검토 필요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인적 구성 중 공제조합 추천 이사가 과도한 부분 개선할 필요

○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인상 등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공제조합의 보험 접수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개인형 이동장치 책임보험 의무가입 법적장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필요

모 경기도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0.(월) 10:03 ~ 16:15

○ 장　　소 : 경기도청 율곡홀

○ 출석요구 증인 : (기관증인) 김동연 등 48인

○ 특기사항 : 국토교통 제1반

(2) 주요 감사내용

○ 도봉산-옥정 광역철 전동차 납품 지연이 우려되므로 선금 사용 관리 및 잔고 증빙 확인 필요

○ 지속적인 대금 미지급 중인 다원시스에 대한 선급금 지급률(79.3%)의 적정성 및 지급 경위 확인 필요

○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검토 필요

○ 도시계획이 일몰되어 도시계획선이 사라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부족으로 도로 설치를 못하는 경우, 경기도의 재정 보조 검토 필요

○ 고양시처럼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한 도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 대한 조례 제정 권유 필요

○ 학생들의 장시간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재정 부담 필요

○ 창릉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전폭적인 지원 필요

○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후 A부지는 토지매매대금을 반환했는데도 소유권이 라이브시티에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절차 조속한 완료 필요

○ 고양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원형 그대로의 컬처밸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A부지 원상복구 대신 지중파일 재활용 방안 검토 필요

○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및 경기분도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행정 필요

○ 특별조정교부금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남양주 오피스텔 건축자재 라돈 방사선 검출에 대한 경기도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필요

○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수익금공동관리형으로의 전환에 따라 시군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재정 여건에 맞게 분담 비율 조정 검토 필요

○ 도로파손 예측 AI 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오류 발생 위험을 관리할 구체적 방안 검토 필요

○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 협력 필요

○ 극저신용대출이 대한민국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확산 및 제도 보완 필요

○ 경기패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대해 중앙정부에 제도 보완 건의 필요

○ 경기 기후보험 피해보상 청구 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경기도 내 시 간 운행 버스 노선 연장 시 발생하는 배차 간격 증가 문제 해결 필요

○ 출근시간 경기-서울 간 광역버스 증차 및 2층버스 도입 적극 검토 필요

○ 광역버스 GPS 오류에 따른 요금 과부과 문제 환불 방안 적극 홍보 필요

○ 대규모 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 강화 및 교통난 해결을 위해 용인 경전철 노선 연장 계획 적극 추진 필요

○ 경기동부지역(광주) 규제 합리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개선

로드맵 마련 등 노력 필요

○ 초월 물류단지 주변 차량정체, 차량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325호선 4차로 확장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 및 행정 지원 필요

○ 지방도 325호선의 초월구간을 국도 17호선으로 승격하는 방안 추진 필요

○ 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곤지암IC 방면 신월리~산이리 구간 반영 검토 필요

○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까지 최선의 노력 필요

○ 공공주택단지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확대 필요

○ 지반침하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통한 지반침하 등 예방에 도정 역량 집중 필요

○ ‘경기 프리미엄버스’ 연착륙을 위한 조정의 리더십 발휘 필요

○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내 빈집 활용 강화 필요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 필요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필요

○ 지반침하에 따른 보상 기준 명확화, 지반 탐사 장비 확보와 지하공간 고위험지도 제작 필요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근거 규정 및 전대 금지 규정 미비에 대한 법적 보완 필요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발굴 등 대책 마련 필요

○ GTX-C노선 정상화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 광역철도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필요

○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시, 반도체 산업단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기도와 GH 참여를 새정부에 적극 건의 필요

○ 인천공항 포화 대비를 위해 제7차 공항개발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필요

○ 지방 재정에 영향이 큰 정부의 거래세, 보유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 경기도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경기도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절대농지 해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상수원 기능을 상실한 유천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추진 SOC 사업, 산업단지 입지 사업 추진 시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지수 차등 적용 검토 필요

○ 안성의 축산냄새 저감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도 사업에 적극 반영 필요

○ 23년, 24년 국비지원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시정 필요

○ 경기도가 땅꺼짐 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중국인 부동산 거래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자금출처 및 실거래 조사 실시 필요

보 서울특별시

(1) 감사개요

○ 일　　시 : 2025. 10. 20.(월) 10:09 ~ 17:16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회의실

○ 출석요구 증인 : (기관증인) 오세훈 등 47인

○ 특기사항 : 국토교통 제2반

(2) 주요 감사내용

○ SH의 ㈜한강버스 자금 대여 사유 및 법적 근거 제시 필요

○ ㈜한강버스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대출 과정에서 선박 담보 등기 여부와 담보가치 대비 대출 규모 적정성 확인 필요

○ 서울시가 최근 20년간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추진한 사업 현황, 시금고·구금고 지정 현황 및 관리금액 확인 필요

○ 서울시가 최근 20년간 이랜드 및 ㈜이크루즈와 추진한 사업 현황 확인 필요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실태 점검 및 청년안심주택 건립과 운영에 대한 협약 이행 여부 관리·감독 필요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당초 설립 목적인 기업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 필요

○ 수도권 상생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경기도 버스의 서울 진입 노선 확대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협조 필요

○ 서울 진입 경기 버스 노선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일방적 통보 방식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 10.15 부동산 정책 관련 서울시와 정부의 의견 교환 과정 필요

○ 서울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 공급 확충 필요

○ 재임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그간 시장의 재산 증식에 대한 공직윤리 측면 적정 여부 설명 필요

○ 한강버스의 기후조건·수심 등 운항 적합성 검증, 배터리 화재 안전성·선체 진동·선박 품질검사 등 전반적인 안전대책 보완 및 구체적인 설명 필요

○ 한강버스의 폭염 시기 배터리 화재 안전성 성능 시험 및 화재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반지하 일몰제 정책 실적이 저조하여 반지하 매입 기준 및 예산 운용체계에 대한 점검·개선 필요

○ 용산정비창·용산역세권 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사업 착공 부진 등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보완 필요

○ 약자동행지수의 가중치 반영 방식, 누적 평가 방식 등에 문제가 있어 약자동행지수의 구조 개선 필요

○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이 저출생 대책으로 적정한지 검토 필요

○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체불 임금 및 지연이자 즉시 청산하는 조치 필요

○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 가격 안정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공급 확대 필요

○ 미리내집 정책 수혜자가 버팀목 전세 자금 정책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대출 한도 상향 및 국토부·서울시 정책 조율 필요

○ 한강버스 시범운항 중 발생한 문제 등 한강버스 사고 관련 안전 검증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조치 및 관리·감독 필요

○ 한강버스 시범운항 기간 고장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필요

○ 서울시가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최종 결정했고, 서울시의 행정력 또한

투입되었으므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

○ 재개발·재건축 정책 진행 시 과거 뉴타운·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의 갈등 사례 등 부작용을 성찰하며 추진 필요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과정에서 국토부와의 논의 필요

○ SH공사가 컴포트레터를 통해 한강버스 대출을 사실상 보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강버스 사업의 실질적 책임 주체 확인 필요

○ SH공사가 ㈜한강버스에 대한 상환권리를 금융기관 후순위로 잡은 것은 배임 소지 있어, 특혜 제공에 대한 해명 필요

○ 조타기 고장, 화장실 역류, 발전기 고장, 한강버스의 클러스터 미작동 등 잦은 고장,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대책 재검토 필요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한강버스의 승선명부 작성 제외에 대한 개선 조치 필요

○ 한강버스 사고 시 서울시 예인선(10t)으로 한강버스(169t) 예인이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출 및 개선 필요

○ 10.15 대책에 따른 모든 자치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타당 여부, LTV 축소로 주거 양극화 우려, 전월세 시장 불안, 규제 풍선효과에 따른 가격 왜곡 등에 대한 서울시 입장 표명 필요

○ 10.15 대책 등 중앙정부의 규제 중심 기조 속에서 정비사업의 속도와 공급 확보 및 실수요자 시장 진입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 필요

○ 정비구역 지정 취소되어 공급절벽 발생 중으로 서울시 차원의 해소 방안 필요

○ 관광객 수 증가 고려하여 서울시-강화 간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 지속 추진 의지 및 서울-강화 간 버스 도입 필요

○ 한강버스 비용 충당을 위한 수익 창출 방안 및 지속적인 안전점검 계획 필요

○ 기후동행카드의 막대한 손실금에 대한 대책 및 정부의 K패스 개편에 따른

기후동행카드 운영 방식 검토 필요

○ 배터리 열폭주 상황에서 선장의 즉각적 판단 어렵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 시 프로세스 개선 필요

○ 세계적 기업 제품에도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므로, 한강버스 배터리 화재 문제 꼼꼼한 점검 필요

○ 한강버스와 관련하여 저수심으로 인해 실제로 강 바닥면과 여유 공간 부족할 우려 있다는 점 고려 필요

○ 해도 작성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도 제작 필요

○ 부동산 매물 확대를 위해 거래세 낮추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6.27 대책으로 6억 이하 주택 실수요자 피해가 크므로, 국토부가 서울시와 협의하여 부동산 정책 재고 필요

○ 서울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은마아파트 폭파 철거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공급절벽 문제 해결 필요

○ 신속통합기획 착공률 제로 등 비판이 있으니 서울 집값은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자세 필요

○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잘 따르도록 서울시의 감독의무 충실 이행 필요

○ 능력 부족 및 실적이 없는 회사에 대한 한강버스 하도급의 적정성 확인 필요

○ 선박 계약 경과 및 홍보비 사전 집행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홍성태 한양대 교수 컴투스 감사 재직 시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관련 연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해명 필요

○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 교통 불편, 주민 반대 등을 볼 때 정책 추진 신중한 접근 필요

○ 한강버스, 서부간선도로, 토지거래허가제구역 해제 모두 민간의 반사

이익이 있다는 점 고려하고, 서부간선도로 관련 반사이익 발생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다원시스 5·8호선 298칸 전동차 계약 선금 588억 원의 불명확한 사용 내역 및 납품기한 관리 실패와 9호선 24칸 추가 계약 과정 중 제작 기술 평가·신용등급 평가·입찰제도 등의 문제점, 냉난방 배전반 열화사고 등 부실 제작에 대한 점검 및 감사원 감사와 선금 반환 청구 등 조치계획 필요

○ 지반침하 위험지도 대시민 공개 및 국토교통부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를 위해 협력 필요

○ 21년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 감소를 고려하여 주택 공급 정책 방향 수정 필요

○ 전동차 입찰방법 개선 관련 국가적 제도 개선 이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제한경쟁으로 보완하는 방법 검토 필요

○ 서울지하철 멈춤사고 관련 안전한 도시철도를 위해 제작 능력 검증된 업체와 계약 필요

○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세입자 이탈과 주거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추진 시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 필요

○ 특별사법경찰관 확대를 통한 단속보다 상생·협력 중심의 노점상 관리 정책 필요

○ 건설 노동자 숙련공 의무배치사업인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시범사업 중인데, 정식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 검토 필요

○ 영동지하차도 건설 현장 노동자 근무시간 및 재해 발생 건수 과다, 표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서울시 발주공사 관리·감독 철저 필요

○ 지하철 9호선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초기 진압 및 대피 유도 어려운 점

고려하여 적정인력 배치 필요

○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에도 실제 주택 공급 확대 추진 성과 미흡, 이해관계 조정 등 실현 가능성 검토를 통해 사업 속도 제고 필요

○ 현재 서울시는 지하지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국토부 연계 등을 통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싱크홀 안전지도) 공개 필요

○ 서남집단에너지의 SPC 전환은 당초 서울시 출자 규모 이행, SPC 전환 적정성에 대한 용역 결과 확인 후 판단 필요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부실 행정에 대한 감사 필요

○ 싱크홀 문제 관련 정보 시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고, 사고 발생 원인 및 관련 정보 상시 모니터링 및 활용 체계 구축으로 시민 안전 강화 필요

○ 상하수도 60%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예산을 빠르게 투입하여 상하수도로 인한 싱크홀 방지 필요

○ 싱크홀 문제 관련 정보 시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고, 사고 발생 원인 및 관련 정보 상시 모니터링 및 활용 체계 구축으로 시민 안전 강화 필요

○ 서울·지방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런 협업 지자체 확대 등 지방과의 동행 추진 필요

○ 한강버스 관련 안전 문제에 대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 필요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 국토교통부

【 기획조정실·운영지원과 】

○ 국토교통 R&D 사업 지원은 지방에 부족하고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AI 기반 재난 안전시스템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교통·도시 인프라에 적용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

○ 싱크홀 예방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므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신설 및 공간정보진흥과 인사교류 중단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 재취업 실태를 파악하고 사후 재취업 심사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 윤석열 정부 경호처 출신 인사들이 직무경험 연계성이 낮은 국토부 산하기관에 임명된 과정을 조사할 것

【 국토도시실 】

○ 하급자에 소위 갑질을 하여 경고 조치를 받고도 새만금개발공사 상임이사로 승진한 A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할 것

○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전략사업 지정 관련 재심의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

○ 연천·가평·옹진·강화군과 같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 개선을 검토할 것

○ 새만금 내 스마트그린산단을 RE100 산업단지로 지정할 것

○ 권역 간 연계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및 연계 사업을 추진할 것

○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검토할 것

○ 서울특별시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능지 검토할 것

○ 용산공원 내 (구)해병대사령부 본관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역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용산공원 임시개방 부지 내 복토 유실, 식생 훼손 등 환경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리·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용산공원 홍보 영상물 상당수가 낮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으므로 홍보효과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빈집 정비율이 5% 수준에 불과하므로 정비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할 것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전주기(발생-철거-활용) 관리, 생활인프라·인구데이터 연계 지역 맞춤형 활용체계 구축, 국가승인통계화 추진현황을 검토할 것

○ 빈집을 지역경제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

○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간 중복성을 고려하여 두 사업을 연계·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단열재 관련 규격 미달의 패널이 정상으로 인증받아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기금 설치 등 방치건축물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점검할 것

○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반건축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통사찰 내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지침 등 행정절차가 미비하고 조항상의 문제로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절차 안내 및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것

○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와 입법 및 실행계획이 유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에 전통시장 내 근린생활시설, 주거 전용 근린생활시설도 포함하는 등 폭넓게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등이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조속하게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필로티 공동주택 보완 사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 생활숙박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 산정과 기부채납 기준 등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기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미신고 생활숙박시설 분양자들에게 추가로 협의기간을 제공할 것

○ 건축물의 문에 손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와 관련하여 시중에 KS 인증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관계 청에 대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것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경질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열전도도 측정을 ‘장기열저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험성적서의 적합성 평가를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

○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해체계획서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도로·댐·항만·플랜트와 같은 건축물 이외에 대한 해체계획서

및 해체감리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건축분쟁조정 관련 피신청인의 상당수가 조정 참여를 거부하여 각하율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합하면서, 하나의 인증기관이 두 제도의 인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집광·채광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형(패시브) 기술을 인증평가에 반영할 것

○ 녹색건축 인증제도 관련, 저탄소 인증을 취득한 레미콘 업체의 제품이 실제 건설현장에 공급될 때에는 인증 취득 시의 배합과 다른 배합으로 납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대통령실 불법 증축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점검 및 행정부의 법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축안전모니터링 관련 자재의 적합률을 높이기 위해 부적합률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의 시료 채취량이 적고, 모니터링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반사항 해체에 대한 새로운 구조의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천장 등에 사용되는 건축재료를 불연재료로 적용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공장, 창고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환경 변화에 따라 재설정하고, 안전 선진국과 같이 불연 샌드위치 패널로 공장, 창고를 짓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허가권자 지정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고도화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요건이 법령 조건보다 강화되어 신진 건축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소수 업체가 독점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단열재의 강기성능을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대미 관세협상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할 것

○ LX의 수익 구조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저심도 지하개발사업에 대한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의무화 및 지하정보 변동 사항 제출 의무 관리 등에 대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

○ 중요 공간정보의 소실 등에 대비하여 시스템 이중화 및 복구 훈련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지반침하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완,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추후 실행계획 등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 토지적성평가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 및 자료관리권 약화 지적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

○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국가 안보 약화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에 대해 책임 있게 결정할 것

○ 목표달성률이 39%인 지적재조사사업의 2030년 완공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연차별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활용도 제고 및 지하시설물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 자연재해, 코로나, 국가시책 등의 사유로 최근 20년간 감면된 지적측량 수수료 연도별 총계와 전체 총합을 보고할 것

○ 지하안전 전담부서를 설립할 것

○ 지하시설물 탐사 정확도 제고와 지하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련 예산 확보 위해 노력할 것

○ 지하시설물 변동정보에 대한 갱신 의무 관리를 강화할 것

【 주택토지실 】

○ 원도심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에 준하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원·녹지의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이를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것

○ 부산 남구 대연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2023년 국토교통부의 합동점검 이후 시정조치에 대한 항목별 개선 및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

○ 국민이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된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을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인허가 후 장기간 미착공 사업부터 정상화하는 '착공 우선 로드랩'을 수립할 것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인허가 절차 합리화, 중복심의 통합,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규제 합리화 등을 검토할 것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기보다 문제점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적용 지역 한정, 부과 금액 조정 등을 검토할 것

○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준하는 파격적인 정책 지원과 다양한 원도심 정비사업 모델을 검토할 것

○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되,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여 매물 증가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실효세율이 OECD 수준보다 낮은 보유세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

○ 주택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을 복원하고, 부동산정책을 투기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

○ 정부가 주택공급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주고,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

○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제 지원,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2025.9.7.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 거주 실수요 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공급 확대책을 마련하고 현실적 목표치를 설정할 것

○ 국무총리 산하의 부동산위원회, 국토교통부를 개편한 주택도시부, 주택공급 실행기관으로 LH를 개혁하는 기구를 두는 조직 개편을 검토할 것

○ 주택 관련 금융, 재정, 건설 등을 전담하는 주택청 신설 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원가 보정, 품질 ·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 계수 보정, 중대재해 처벌 등 규제 적용상의 형평성 확보 및 책임 범위 명확화 등을 검토할 것

○ 고강도 대출 규제와 신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가 상승 및 전세의 월세화 가속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시장 및 임대차에 대한 충분한 감독을 위하여 시도, 시 · 군 · 구의 임대차 관련 행정 인력 및 조직을 확대할 것

○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

○ 재개발 ·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

○ 2025.10.15.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이 규제에서 제외되고 행정구역에 따라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철회할 것

○ 금리·원가 등 여건상 민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공이 주택공급 부담을 완충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세대수 증가 제한 완화,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동의 비율 하향 및 조합설립 동의의 허가 동의 간주 신설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조합의 청산 지연 등 비합리적 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공공관리제도 의무화,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한 자료공개 의무 부과 등을 검토할 것

○ 용적률 상향 시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엄격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이 적용되어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서울 지역 정비사업에서 1,0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심의 및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존 조합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진입장벽 강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새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 완화 및 조합사업의 불투명성과 과도한 지연, 시공 막바지 단계의 대규모 공사비 증액 요구 등 문제 해소를 위한 준법감시인 도입, 실적 보고 및 자료공개 구체화, 지방자치단체 감독 권한 강화 등을 검토할 것

○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비리를 고발한 공무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인 지정 및 포상을 적극 검토할 것

○ 신탁사기피해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 인정 요건 완화, 피해주택 매입 관련 디지털 플랫폼 통합, 실시간 지원 현황 공개 등을 검토할 것

○ 신탁사기피해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보완하고 임대차계약 및 전세보증보험 체결 과정의 신탁 물건 확인 및 수탁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할 것

○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상대로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요구하는 임대인에 대한 제재를 마련할 것

○ 소액임차인 판단기준과 최우선변제금 규모의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과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차등이 있어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개선 요청할 것

○ 전세사기 대응 인력 충원, 피해주택 신속 매입, 최저보장금 선 지원, 전세사기 배드뱅크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의 실효성 강화 등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할 것

○ 부동산 임대차 등기 의무화를 검토할 것

○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인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우대금리·비과세 요건 개선 및 서울 지역에서의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

○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내 노후화된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것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 조기 분양전환 도입 및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이후 일정 기간 지위를 유지할 것

○ 신규택지·신도시 택지계획 중 상가용지 조성 시 소비 행태 변화 등 고려 및 상가 공실에 대한 활용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하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난방연료에 대한 공평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법률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 공공주택 내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

○ 1인당 적정 주거면적, 통근시간 등 수요자 중심 지표에 근거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장기 미임대 문제를 해결할 것

○ 공공임대주택의 자생력 강화 및 다양한 소득계층을 아우르는 소셜믹스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완화할 것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주택공급 직접 시행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조직·인력을 재편할 것

○ 관계부처 합동 사업인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 3기 신도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할 것

○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시 삼보폐광산 공원 후보지를 포함할 것

○ 수선유지급여 항목에 에어컨을 포함하고, 에어컨이 없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에 에어컨을 우선 설치하는 등 주거약자에 대한 냉방 지원 대책 마련할 것

○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공공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

○ 범죄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제도의 경우 긴급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절차 단축 및 심사요건을 완화할 것

○ 예산상 문제에 따른 청년, 신혼, 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모집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전환, 매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기준을 마련할 것

○ 청년, 신혼부부 등 정책대출 대상자에 대한 주거사다리 유지를 위해 정책대출 축소를 재검토할 것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수도권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

○ 공공주택 예산 중 공공분양주택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실제 수요에 기반하여 균형 있게 편성할 것

○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 통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통계와 통합공공임대주택 통계에서 공무원임대주택 제외할 것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를 고려하지 않은 이주대책 및 입주대책을 개선할 것

○ 양질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사회주택) 구체적인 공급계획 수립과 활성화할 것

○ 공공임대주택 공실 증가에 따른 재정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공급전략 수립, 리모델링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리 강화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전세임대 등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하향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을 재조정할 것

○ 신혼희망타운이 일정 기간 미분양될 경우 무주택 및 신혼부부 등의 입주자격 제한을 완화할 것

○ 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급 시 전용 59㎡ 이상으로 의무 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

○ 최근 극단적 경쟁 구조,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청약 등으로 청약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현행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점수 등을 포함한 청약제도 전반에 대하여 근본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 주택도시기금의 장기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다양화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대한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을 검토할 것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전문 운용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개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동주택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규약 표준화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그 규모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방식의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공급대책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주택공급 기반 강화 등 정부 정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
○ 출산 장려 목적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수요 억제 중심의 대출 규제에 포함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로 인하여 주택시장 왜곡, 주택가격 폭등,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 양산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 방안을 검토할 것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결과 등록이 명확히 처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규제 완화 정책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미친 영향 및 외국인의 탈법적 부동산 거래 심사·통제 장치 등을 점검할 것
○ 국내 부동산 질서를 교란하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할 것
○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토지 취득 제한 및 실거주 요건 부여 등 부동산 취득에 관한 상호주의를 이행할 것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 반입·대출, 무자격 임대업 영위 등과 관련하여 내국인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저하 및 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세반영률 체계 구축 및 유형별 평가 다변화 등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보유세 정상화 등을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

○ 부동산 중개시장 내 지역회·친목회식 공동중개 배제행위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H에 적정 인력을 충원할 것

○ LH 개혁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

○ 9·7 대책(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입지 확보 등의 여건을 조성할 것

○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신속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LH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충할 것

○ 고가차량 보유자의 공공임대주택 편법 입주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 공유 차량에 대해 지분 가액이 아닌 차량 전체가액을 자산으로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가차량 편법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불법 전대 및 숙박업 등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자에 대한 입주제한 기간 확대,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9·7 대책의 주택 135만호 공급 목표 관련, LH의 유동성·부채 관리, 전문 인력 충원 및 LH 개혁위원회 재구성 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토지임대부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 가격 조절 등에 장점이 있는 제도로,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적정 임대료·수익 구조 설계 및 운용 기관인 LH의 구조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층간소음 저감 방식 중 경제성이 있는 건식 난방 기술의 현장 적용 지연 상황과 관련하여, LH에 대해 지휘·감독할 것

○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민간 공급 위축 상황에서 공공 주도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9·7 대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

○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평형별 지원 구조 개편 및 기존 소형 평형 주택 리모델링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장기화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지구 지정 전 사업성 검토 강화 및 여건 변화 시 지구 지정 해제 요건 확대 등 제도를 보완할 것

○ 장기간 14㎡로 유지되고 있는 「주거기본법」 상 최저주거기준과 관련하여,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실적인 기준을 검토할 것

○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체감 및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 착공과 아울러 준공 실적에 대해 가중 평가할 것

○ LH 공공주택사업의 공가율 증가 및 공사기간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공공만능식 공급대책을 경계하고 민간의 속도와 동력이 결합된 공급 방안을 검토할 것

○ 주거복지사업 중 수선유지급여의 수요 대비 예산 감소, 수리 실적 저하 및 대기기간 장기화 등과 관련하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도시기금이 공급자 금융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

○ 사업승인 후 미착공 중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세밀한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장기 미착공 지구에 대한 재구조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역대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담당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는바, 사명감을 기반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것

○ 공공주택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LH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

○ 공신력 있는 국가통계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 의견 등과 관련하여,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할 것

○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신설 방안과 관련하여, 수사권 남용 및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방지할 것

○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신속한 정보 제공 기능 등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폐지 또는 기준 변경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

○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후속조치 수립을 위하여 부동산 취득원인별 현황 추가 등 통계를 개선할 것

○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의 대산-당진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 취득·보유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조사·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절차를 준수하고 규제지역을 세분화할 것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거쳐야 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

○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의 부합 여부, 광범위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시장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주택 정책을 수립할 것

○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외국인의 상대적 수혜 여부를 확인할 것

○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논의와 관련하여, 우방국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외교적 분쟁 유발 가능성을 검토할 것

○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의 신속한 추진 대책을 강구할 것

○ 퇴직자 취업심사 제한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 및 인재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거래 신고조사와 관련하여, 의심 거래를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조치

결과 환류를 통해 조치를 실질적으로 완료할 것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설 감독기구를 마련할 것

○ 부정청약자 적발 후 신속한 사후조치 실시를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체계를 개선할 것

○ 공익사업 대토보상자의 실질적인 재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임대보증금 보증 기준 특례 적용 및 토지-건물 소유권 일원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주택 시장에서의 혐중론을 경계하고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를 보장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균형 잡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제도를 마련할 것

○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토지의 취득·양도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할 것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주택 매수인과 매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의 국적과 외국인 등록번호, 매수 용도에 대해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내역 공개 시 매도자·매수자의 외국인 여부 공개 방안을 검토할 것

【 건설정책국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동안전 대책이 건설업계를 위축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

○ 건설경기 위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것

○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되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

○ 지방자치단체가 지하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중앙 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노력할 것

○ 건설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안전장비 지급에 차별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건설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노력할 것

○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조사를 통한 공사비용 현실화에 노력할 것

○ 우즈베키스탄 ODA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 한남동 관저 공사 하도급 계약의 건설산업정보망 미등록에 대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

○ 건설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BIM 활성화를 위한 BIM 데이터 관리체계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안전을 위해 사업비, 공사기간, 입찰방식 등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노후화된 SOC 대개량을 위한 정부의 집중투자와 구조적 개선을 추진할 것

○ 기반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고, 국민안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E등급 시설물 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이주지원 활용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지원할 것

○ 건설현장 안전 전담조직 설치 ·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적정임금제의 실질적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

○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역 건설기업에 대한 우대 기준을 검토할 것

○ 협력사 외에 종합건설사 임직원도 필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상호협력평가 중 교육 실적 관련 평가 체계를 개선할 것

○ 건설현장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를 개선할 것

○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통한 숙련공 의무배치 사업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노동자 노후 보장을 위해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금액을 현실화할 것

○ 복합 유지보수공사에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발주자 직접 지급 효과 및 공사 대금 체불 방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용을 확대할 것

○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대한건설기계협회 위탁 운영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접수 ·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

○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주가조작 관련 연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 우크라이나 재건 6대 프로젝트의 성과가 부진한바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추가 사업 발굴할 것

○ 우리 기업의 해외 PM·CM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내부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건설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총괄할 단일 전담 조직을 마련할 것

○ 항타기 전도 사고와 관련하여, 중요 부품의 파손 · 수리 시 정밀 수시검사,

무면허 · 무자격자의 조종에 대한 규제 강화, 현장상황에 따른 전도방지 대책 및 리더 수직도 등 수시점검, 세부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 명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점검 및 현장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통합관리체계를 명시하도록 노력할 것

○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비용 전가와 공기 강요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과정에서 건설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민간 사업장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비 집행이 적정했는지 서류를 검토한 후 준공 허가를 내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착공된 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착공후지하안전조사 표준매뉴얼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공사 현장 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래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방안을 보고할 것

○ 지반탐사 차량 및 레이더 장비 확보 관련 현장의 건의사항 청취, 레이더 측정방식 표준 체계, 국산 차량형 장비 실증·성능평가·고도화 등 수입대체 목표치 설정 및 달성 로드맵 등 지반침하 탐사장비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FMS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기계 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불법 전대 규제 및 계약서 작성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노력할 것

○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등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NC야구장 사고발생에 따라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

○ 안전점검 기준 및 결과평가, 평가 결과의 행정처분이 미흡함에 따라 안전점검 절차 및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 아차사고 신고 접수에 따른 계도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대한 법적 권한 확보를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국토안전관리원과 유관기관이 공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폴란드 사무소 존치 여부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확인할 것

○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제기로 제재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 검토와 범부처 차원의 개선을 요청할 것

○ 파라과이 철도 사업 추진에 대하여 검토할 것

○ LH가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단체를 후원한 정황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

【 교통물류실 】

○ 노선 폐지가 우려되는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을 운수종사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긍정 검토하고, 포상금 규모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

○ 가맹택시 배회영업 등에 대한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

○ 택시 통합사업구역에서 증차물량 배분에 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

○ 교통혼잡 및 보행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승차구매점을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캠핑인구 증가로 주차장 차박관련 민원 및 캠핑카 불법 개조 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대형차량(버스, 화물) 등에 AI 기반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DMS) 보급을 확대할 것

○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을 위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지방자치단체 간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 중국인 입국 급증 속 공항권 불법 유상운송(흑차)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개인택시 면허 취득·양도 후 법인택시 재취업에 따른 차익거래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주40시간 월급제 개선 등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다른 지역 거주 장애인이 응급상황 발생 시 사전등록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선박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외버스 등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

○ 발달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조수석 탑승제한은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고, 조수석 탑승 제한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

○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이 과도하고 광역 이동도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교통수단 운행률을 높이고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전원을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것

○ 주차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KS인증과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의무배치 및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문제로 노후·고장 기계식주차장이 철거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교통유발부담금 본래 취지에 맞게 징수 부담금의 목적사업 집행 의무화 및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담금 체납 관리 및 지자체별 집행 용도 편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미사용면적 인정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할 것

○ 주요 공항 및 철도역사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코일존, 히어링루프 등을 설치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지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 인천국제공항 플랫폼 호출 택시의 승차방식 개선방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와의 충분히 협의할 것

○ 경기도 물류시설 증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검토할 것

○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물 미사용 기간에 대한 인정기준이 다르므로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현행법 위반한 불공정계약 사례가 다수 존재, 택배업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

○ 배달라이더 계약 시 약관 형태의 계약 등 불공정 계약구조의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쿠팡CLS의 근로환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살펴보고 택배 종사자를 보호할 것

○ 과도한 배달 미션제 금지 등 배달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서비스 평가 시행 및 인증심사 강화, 배달업 통계 체계 재정립할 것

○ 쿠팡CLS는 시장 점유율에 비해 점검 횟수가 적고, 지역별·업체별 점검 횟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택배사 불시 현장점검으로 해당 문제를 개선할 것

○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및 확인시스템 구축 등 배달종사자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파업 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투입 허용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배달업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필요, 구축 지연 시 계도 기간 부여 등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방안을 준비할 것

○ 택배사마다 송장 이름 표시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강화, 등록업무 협회 위탁 방안 및 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개선방안과 성과 분석을 위한 용역 계획에 대하여 설명할 것

○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관련하여 화물차 공급과 관련한 수급조절제 현황과 관련 조치내역,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

○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에 대한 신규허가와 증차가 허용되면서, 불법적인 화물차 신규 허가의 경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할 것

○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등 철저히 이행할 것

○ 택시, 버스, 화물차 운수종사자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

【 항공정책실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실 직속 TF(기획재정부 포함) 구성을 대통령실에 건의하고, 이에 따른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방위각시설 개선공사 지연에 대해 점검할 것

○ 현행 공항별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 소유권 및 운영권에 대한 종합 검토안을 마련할 것

○ 공항 내 위해물품 반입 건수가 지속 증가 중으로, 이용객의 책임 의식 강화 방안 및 안보위해 물품 반입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사후처리 관련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공항별 관제사 인력 부족 등 관제사 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정상화 관련 신속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것

○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지방공항 로컬라이저 공사 계획 관련 로드맵을 의원실에 보고할 것

○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하여, 사업 기간 및 예산변동이 있을 때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가덕도신공항 관련 작년 국정감사 시 지적된 ‘측풍난류 현상’으로 인한

결항 및 안전 위험성과 활주로 설계에 사용된 기상 데이터오류에 대해 대응할 것

○ 동서 방향으로 설계된 가덕도신공항의 활주로는 남북 방향인 가덕도의 우세풍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 안전에 치명적인 측풍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류가 있는 기상청의 자료에 근거한 설계에 대해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고시에서의 관제탑 위치 변경 및 연결유도로 편입 부지 명칭 변경 관련 협의 경과 및 내용을 제출할 것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의 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 횟수(TPDS) 및 기체손실 위험성 발생 예측연도 축소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 인천공항의 장거리 국제선 독점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공항의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및 검토를 실시할 것

○ 양 공사의 K-UAM 사업의 중복 투자에 대해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검토할 것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공사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운수권 배분 시 지방공항 취항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노선 축소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국적사 정비 역량 강화, 해외 외주 정비 국내 유턴 지원 등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한국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문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양

공항공사의 통합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할 것

○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고시, 공항 접근도로 및 공항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정부 TF 구성을 통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

○ ICAO 기준에 맞게 항공훈련기관(ATO) 과정 이수자, 관련 대학 졸업자에게 2년 추가 실무경험을 요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국내 현실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할 것

○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공항 주변 조류서식지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용역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것

○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발권 시 동일 예약번호인 타인의 개인정보가 열람되는데 이에 대해 조치할 것

○ 무안공항 폐쇄 기간 동안 광주-인천 간 임시 내항기 운항에 대해 검토할 것

○ 항공기 지연·결항 관련 승객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 일부 항공사에서 카운터에서 발권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 서비스 유료화가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감사원의 신공항 건설사업 수요 예측 오류, 안전성 지적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조류충돌 예방강화를 위해 탐지장비인 레이더·열화상카메라, 퇴치장비인 레이저·음파발생기 등의 신속한 도입을 검토할 것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가 급증한 부분에 대한 KDI 재검증 등 적정성 검토 및 향후 대책을 검토할 것

○ 현행 「항공보안법」은 탑승권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

○ 지문확인시스템 확대 도입 등 법무부와 협조하여 여권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확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공항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의 도입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인천공항의 소음대책 예산 현실화, 야간보호지역 신설 및 소음대책 지역 지정기준 완화, 도서지역 피해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항공보안법」 상 '항공보안사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항운영자 및 이용객에 대한 항공보안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 공항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율주행 법·제도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

○ 울릉공항의 활주로 연장 등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객실승무원 피로관리 등 안전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편 정보 불법 거래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조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

○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항공분야 전문성을 갖춘 분쟁조정기구 신설을 검토할 것

○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RBS) 활성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

○ 각 공항에 드론 탐지 레이더 장비를 조속히 구축하고 관제권 내 불법 드론비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공항 내 발생 범죄 및 보안 사건에 대한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공항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청주국제공항 주차시설 확충사업의 현실적인 규모와 속도감 있는 추진 등

조기준공을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 25년간 방치된 (구)김제공항부지에 대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 울릉공항의 시계비행 운영 방침에 대해 재검토할 것

○ EMAS 설치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행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공항 핵심 안전시설이므로 한국공항공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예인 출국 혼잡 관련 매뉴얼 개선 및 관계기관 협조를 강화하고, 공항 이용계획서 부실 또는 미제출, 동선 파악 불가, 출입국 혼잡 등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손실보상금 기준 등을 조속한 시일에 정리해 줄 것

○ 백령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조류 대체서식지 마련 등 조류충돌 대책을 검토할 것

○ 신공항 사업 추진 시 조류충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항공사 승무원 액체류 반입규정 특권 악용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이사회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 자회사 중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기업들의 이사회 실태를 조사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한민국 항공 위상에 맞도록 ICAO 파트2 상향 진출을 위해 부처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것

○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하여 인천공항공사는 소음부담금, 시설관리자부담금 부담주체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제4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수립 시 인천공항공사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조배터리 위탁수하물 검색 기술개발 방안 및 적발된 보조배터리 폐기·재활용 방안을 포함한 통합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

○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 도입 등 체계적인 조종사 피로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관제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 항공관제 인력산정 기준 정립, 관제사 인력충원, TF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

○ 공항경제권 조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을 위해 관련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항공안전법」 법령 개정을 통해 항공종사자 음주 처분기준을 강화할 것

○ 항공 MRO단지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흑차, 불법 콜택시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TF를 구성할 것

○ 양 공항공사가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수의계약 시 업체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APEC 기간 증원된 김해공항 CIQ 인력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 관세청과 협의할 것

○ 국내공항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

○ 장기 공석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조속히 임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

○ 양 공항공사가 공직자 윤리법을 준용한 내부취업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취업심사를 진행하도록 국토교통부가 관리 감독할 것

○ 양 공항공사의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 위탁근거를 마련할 것

○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이사회에 사외이사 선임 및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것

○ 조종인력 양성 체계 개선 관련 국토교통부의 취업보장형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구제책을 마련할 것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관리 담당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과 한국항공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

○ 항공일자리센터 예산을 활용하여 한국항공협회 일부 직원이 규정에 없는 과도한 수당을 받은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

○ 공공분야 드론 활용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

○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공항 주변지역 내 실질적인 농업시설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검토할 것

○ 민군 겸용공항 주민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위해요인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기내 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한 보조배터리 격리보관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항공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 소형항공운송사자 국내·국제선 좌석 제한의 불합치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고 조사결과 도출을 위해 유가족과 소통할 것

○ 12·29 여객기참사의 사고기 엔진 정비내역 및 부품 교체 등 정비 기록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항공기 정비·운항 전 과정의 안전성 강화할 것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의 이관시키도록 노력할 것

【 모빌리티자동차국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검사기준을 마련할 것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적정 치료비 보상을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 개선할 것

○ 보험회사의 특정 견적 프로그램 사용 강요 등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검토할 것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배터리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 비대면 카셰어링 관련 제3자 운전 및 명의도용 증가, 임차인 편중 규제로 플랫폼 책임 공백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 안보를 위해 자율주행 데이터의 무분별한 유출 방지책을 마련할 것

○ 이륜차 전면번호판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효과 검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미수검 차량 및 리콜 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기차 BMS의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술수준을 강화하고, 전 차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실증도시를 선정하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대규모 실증을 추진할 것

○ 리스 차량은 고장이 있어도 반품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 개조 유세차량을 방치하는 일시적 튜닝승인 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시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를 대물보상까지 확대 검토할 것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적극적인 확대 및 혁신도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지정을 통해 실증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 국토교통부 주도로 데이터 규제 합리화, E2E 안전사례 제도화, UNECE 규제 정합성 확보 등을 추진할 것

○ 한약사가 자동차보험 심사 체계 내에서 정당한 자격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

○ UAM 기체 개발 지연에 따른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기업 참여율 저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 손님 공항 불법 픽업 서비스 등 렌터카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및 처리할 것

○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 허위매물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페달블랙박스 활성화를 위해 페달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 할인 상품 설계를 지원할 것

○ 응급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립교통재활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검토할 것

○ 리콜 미이행 차량에 대한 이행률을 제고하고 리콜을 미이행한 차량이 중고차로 판매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 정비부품 조달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사후관리 이행 명령 외에 손해배상 등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종합검사원이 법정의무교육을 문제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환경을 제공할 것

○ 친환경차 확대에 따라 친환경차에 요구되는 별도 정비시설 규정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중고차 수출 시장의 경쟁력 유지와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PM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증 체계를 강화할 것

○ 품질인증부품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증체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8주 초과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

【 도로국 】

○ 경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로 농경지로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제2서해대교를 민자고속도로방식보다 국비 투입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사천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사남~정동) 건설공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노후화된 국도 유지관리 대수선 적극적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임시 운행제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

○ 고속도로 상습 미납통행료의 효율적 회수를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규제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4대 광역지자체의 전략 거점을 잇는 광역 연계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동서3축 지선(군산~익산~논산~금산~무주) 노선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변경)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것

○ 도로공사 소유 성토사면, 도로 유휴부지, 휴게소 주차장 등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 창원과 부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동서축 노선인 창원 지하고속도로(서마산

JCT-완암IC)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변경) 또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것

○ 고속도로 안전시설물 손괴 복구비용 징수체계 법제화를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복구비 단가 표준화·공개로 복구비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할 것

○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부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과 신기술 적용을 검토할 것

○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대로 재추진할 것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현광방지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ITS 구축 사업을 확대할 것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라 C-ITS 사업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가간선도로망 남북6축의 남단을 합천에서 함안으로 연장하고, 의령지역 진출입로를 위한 의령IC를 설치할 것

○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 시 턴키(일괄하도급) 계약을 지양할 것

○ 예비정지선 도입을 통한 딜레마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전관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강릉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관련, 희림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법」 위반, 업무과실 및 횡령, 배임 여부 등 강원도, 강릉시, 강릉에코파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것

○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사유를 보고하고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평가준비서 제출할 것

○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할 것

○ 영일만 횡단대교의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주민 수용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적극 검토할 것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경력직 연봉 부적정 인상에 대한 시정조치를 검토할 것

○ 도로 열선 공사시 표준 시방서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시험을 실시한 이후 공사하고 있으므로 일반국도와 고속도로에 설치된 열선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 계양-강화 고속도로 종점부 접속에 대한 최적 안에 대하여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 진행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등과 수시로 협의할 것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순찰 차량 교체와 함께 교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지도·감독할 것

○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서대전JCT-회덕JCT 확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시 실질적 원인제공자 대상 부과 등 현행 과태료 부과시스템을 개선할 것

○ 지하고속도로 추진시 안전한 주행환경과 재정 문제를 고려하여 민자방식이 아닌 재정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관련하여 과도한 이자 지급 문제, 사회공헌사업 소홀 문제,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것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수사를 의뢰할 것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량 사고 관련 기존 교각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아산, 천안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 정체해소,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아산~천안 광역도로 건설계획)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검토할 것

○ 타당성 재조사 결과 보류된 당진-아산 고속도로(3구간)의 재추진 및 2구간

내 IC 설치를 검토할 것

○ 제도 도입 후 15년이 지났지만 단 한 건의 지정 사례도 없는 지선국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국도5호선 춘천-화천(1공구) 건설공사 관련, 터널 굴착 과정에서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추가 사업비를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공사 및 관련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

○ 장애인이 임차·대여를 한 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할 것

○ 과속방지턱의 규정규격은 있으나 통제가 되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됨에 따라 차량 손상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용인을 가로지르는 남북측 도로가 부족하므로 용인 남부에 조성하는 반도체 산단을 잇는 남북측 도로망을 확충할 것

○ 민자고속도로 부가통행료의 징수기준과 고지·납부방법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국 】

○ K-철도의 수출을 적극 추진할 것

○ 동대구~창원 고속화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것

○ 서해안 철도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것

○ SRT 운행 확대를 위해 수서-평택 2복선화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것

○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평택~부발, 경강선 연장, 수도권 내륙선 사업 및 동탄~청주공항 급행철도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것

○ 인천공항의 접근성 제고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대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것

○ 코레일-SR 통합을 위한 통합 로드맵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 코레일-SR 통합을 위한 6개월 로드맵(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

○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것

○ 용인시 반도체 산단 주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철도 조성 계획을 마련할 것

○ 코레일-SR 통합 실익 검증과 고용안정 대책을 병행하여 마련할 것

○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 CTX-진해선 사업을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것

○ 철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 확대, 수출 구조 실적 개선 및 시장 다변화 전략을 마련할 것

○ 국가철도공단이 특정 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몰아준 배경과 해당 기업이 해당 제품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서해선 소사역에 KTX 정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코레일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노후 고속열차 교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폐철도 유휴부지의 공공시설 활용 등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생활인구 및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호남선 KTX 증편을 검토할 것

○ 납품지연이 심각한 철도차량 제작사와의 계약과정에서 드러난 제작 기술

평가·현장 실사·신용등급 평가·입찰제도 등의 문제점과 철도차량 납품 지연에 대한 관리·감독 실패, 철도차량 상습 납품 지연 제작사와 추가로 부실 계약한 과정, 선금 사용내역 미제출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점검 절차 부재, 당초 설계기준보다 중량 초과한 차량 납품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납품지연 예방·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광역철도 개찰구를 나간 후 15분 내 재승차할 때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

○ 해외 불법 사이트가 광고를 통해 승차권 암표 장사를 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것

○ 급증하는 철도 승차권 암표거래 등 부정판매 행위의 효율적 단속과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철도사업경찰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국 철도이용객의 혼선 해소와 편익 향상을 위해 오송역 역명을 청주오송역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동해선 KTX-이음 열차의 기장역 정차를 검토할 것

○ 수색~광명 고속철도 관련 동작구청이 제안한 여의대방로~시흥대로를 경유하는 대체 노선안에 대해 검토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부고속선 대전북연결선 공사 관련 주민반대,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의 우려와 한남대 학교시설 내 철도진입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건설공사 내 항타기 등 중장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오송역 과주여유거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오송역 교량 확장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전주역 시설개량사업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26년 예산 150억원을 증액할 것

○ 충북선 고속화사업 추진 시 제천역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제2경인선 철도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

○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노력할 것

○ 경기도 광주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GTX-D 노선 등 GTX 건설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

○ 착공이 지연 중인 GTX-C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온양온천역 연장을 비롯한 노선 연장을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SRT 의정부 연장사업의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연결선로 선시공을 검토할 것

○ 철도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 내 배터리 화재사고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종사자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강화할 것

○ 종합검측차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영업열차 차상검측을 통한 상시 검측 체계를 마련할 것

○ 청도 열차사고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부실에 대해 조속히 개선할 것

○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접근 경보장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철도 건널목 사고에 대한 안전설비를 강화하고 AI 감지센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오송역 누수문제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철도공사의 출자역사에 대한 역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지 점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

○ 고속철도 차상신호장치(KTCS-2) 교체방식에 대하여 안정성과 효율성, 재정 절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

○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철도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에 대한 업무협조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

○ 수해 방지를 위하여 내년도 서방천 신안철교 개량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 경부선 1단계 광명-동대구 구간 자갈궤도를 콘크리트 궤도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 경인선 지하화 사업의 본래의 목적인 전 구간 지하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인천시, 부천시, 서울시와 협의할 것

○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PSO)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소열차 및 트램에 연료보조금 도입을 추진하고 트램 도입 시 혼용 노선에 대하여 경찰청과의 협의할 것

○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차량과 승강장에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에 대한 공통 설치 기준을 마련할 것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 기후위기・폭염에 대비하여 선로 설계기준을 변경할 것

○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검토할 것

○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 간 임금격차에 대한 감축목표와 단계별 실행계획이 포함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것

○ 코레일과 SR 간 교차운행 시범사업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통합을 추진할 것

○ 철도차량 기술기준이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차량별, 지역별, 운영환경에 따른 유연한 기술기준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것

○ 부산～김해 경전철의 국비 재정지원을 검토할 것

○ 분당선 연장, 용인경전철 사업의 조속하게 추진할 것

○ 탈선검지장치 오작동 판정 기준의 표준화 및 데이터 기록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로드맵과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지하철 내 수유실 미설치 역사를 대상으로 단계별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전 노선의 수유실 설치 현황을 점검할 것

○ 국가철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전관취업 실태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효율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저상홈 구간을 고상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 공단의 직접 수행 필요성 및 지방공사 등 공동 수행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탈선감지장치 성능시험 및 도입 과정에서의 부정시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세종 행정수도 구축에 맞추어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 구축 계획을 마련할 것

○ 대경선 예비차량 2대 추가 구입 시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정차역 할인제 등 소요시간에 따른 합리적 운임체계를 개선할 것

○ 보행로 관련 철도시설 기술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것

○ 산하 공공기관에 보행로 차단 등 주민 편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내부 지침 마련을 검토할 것

○ 서해선 차량 연결기 고장 사고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한반도 U자형 철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군산과 목포를 연결하는 철도망

사업을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것

○ 위례과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

○ 철도역사 내 승강기 사고 등 돌발 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한 지능형 승강기 안전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것

○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사가 부담하는 PSO 공익분담률(30%)을 하향 조정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을 출산장려 및 사회적 약자의 교통복지 확충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철도 공공성 악화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 보조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GTX-C 사업 국비 지원 확대를 노력할 것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 1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여전히 인력과 기능을 수도권에 잔류시키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조치할 것

○ 1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후속 관리를 위해서 사업 성과 추적 및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을 정주 여건이 마련된 구도심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대해 검토할 것

○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 과정에서는 혁신도시 내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마련 시 혁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도 일정 비율 공공기관을 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되어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부산시와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 재정지원금에 대한 국비 재정지원 추진을 노력할 것

○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과 예산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

○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및 3단계 사업,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옥천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포함을 적극 검토할 것

○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26~’30)‘ 검토 대상에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사업을 포함할 것

○ 서대전광장 지하 환승주차장 및 지하 보행로를 포함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 교통카드 단말기 GPS 오류로 인한 버스요금 과부과 사항의 조치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 청현마을~서울행 광역버스 혼잡구간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지하철 수유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부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

○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 포함을 검토할 것

○ 광역버스 운전직 인건비 권역별 격차를 줄일 방안을 검토할 것

○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6~’30)‘에 ‘녹산-진해 광역철도’ 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 감액된 2층 전기버스 보조금을 인상하고 관련 보조금을 일원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것

○ G6009번(동탄2~잠실) 광역버스 혼잡구간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동탄1신도시~잠실역, 동탄2신도시의 신주거문화타운, 동탄~여의도 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검토할 것

○ 트램 도입에 따라 혼용노선 운행과 수소트램 각종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광주대촌~나주금천 광역도로의 사업구간 변경을 검토할 것

【 감사관실 】

○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 해외 감사인대회 일정에 참여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므로 철저히 조사할 것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대법원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것

○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계획을 마련할 것

○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의 예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

○ 세종특별자치시 상가공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 강화 및 충남서부·수도권 서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세종~아산 광역연결도로 건설에 대하여 검토할 것

다 새만금개발청

○ 해당사항 없음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 LH의 사업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맞춤형 주택공급사업 모델의 구축, 지불가능 주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 강화, 민간 기업의 참여 방법 개편,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경영평가 기준 개편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LH의 사업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교차보전 구조, 현행 지역 인재 할당제, 공공임대의 민간 참여 제약 요건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 제한사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공공주택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우수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사실상의 전관업체가 LH의 전관업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LH 사업을 수주하는 현황과 관련하여, LH 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

○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분양 혜택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당첨자 소득 기준 상향 등의 방안을 협의할 것

○ LH의 재무건전성, 착공 대기 물량 및 전문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사업 직접 시행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 9·7 대책(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공을 위해 LH의 재정 안정화 및 전문인력 적기 보강 대책을 마련할 것

○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국익 및 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것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 평가 개선, LH 내 추정분양가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정성 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신속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LH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충할 것

○ 공사 자재용 철근의 무단 반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 준공 이후의 빈번한 설계변경 및 현장별 상이한 준공 정산 시기 등 관련, 자체 체질을 개선하고 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

○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항목에 냉방설비 설치 포함하고, 냉방설비 없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 가구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를 우선 설치할 것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난방연료에 대한 공평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법률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

○ 원활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을 충원할 것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주거복지사의 필수 역할을 고려하여 인력을 증원하고 배치 범위를 확대할 것

○ 조성원가 수준의 택지 공급 방안과 관련하여, LH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공공사업 수행 역량 저하 및 시세차익에 대한 투기적 수요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것

○ 용인 하갈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중학교 통학 학생의 안전 확보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 고가차량 보유자의 공공임대주택 편법 입주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 공유 차량에 대해 지분 가액이 아닌 차량 전체가액을 자산으로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가차량 편법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불법 전대 및 숙박업 등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자에 대한 입주제한 기간 확대,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공사·하도급사 분쟁 등과 관련하여, 공공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대응할 것

○ LH 사업 수주 감리업체에 대한 벌점의 단기 효력 및 불복 절차로 인한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벌점 제도의 법적 정비를 통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을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전대 문제를 규제할 것

○ LH 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 등 장기·저리의 공적 금융 확대를 논의할 것

○ LH의 재무 건전화를 위해 영구채·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대토·현물보상 활용 및 미매각용지 매각·개발 등 다각적인 재원 대책을 검토할 것

○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보상가 산정 방식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시행 권한 등에 대해 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

○ LH의 주택 135만호 공급 직접 시행과 관련하여 안전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기관장의 책임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토지임대부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 가격 조절 등에 장점이 있는 제도로,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적정 임대료·수익 구조 설계 및 운용기관인 LH의 구조 개혁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

○ 모바일 오피스 구축 사업을 업무 역량 향상 기여도 및 비용 절감 등 구체적인 성과목표 및 실행방안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

○ 층간소음 저감 방식 중 경제성이 있는 건식 난방 기술의 현장 적용 지연 상황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유를 소명하고 구체적 적용 계획을 마련할 것

○ LH가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단체를 후원한 정황 등과 관련하여, 민간 협력에 대한 외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절차 등을 점검할 것

○ LH의 공공주택 건설 착공 지연 및 착공 물량 연말 밀어내기 관행 등을 해소하고, 민간자본 참여 등 다각도의 방안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정부

재정 의존도를 완화할 것

○ 9·7 대책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정하고, 자체 수익 창출 기능이 있는 공기업으로의 존속 방안 등 지속 가능한 LH의 기능을 검토할 것

○ 공공임대주택 중 공가율이 높은 소형 평형 주택과 관련하여, 입주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하여 리모델링과 넓은 평형 주택의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소셜믹스)의 임대주택 식별이 가능한 상황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차별 방지를 위해 관급 자재 적용 예외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기준사업비 동결 및 기존 임대주택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 등과 관련하여, 기준사업비 개선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할 것

○ LH 든든전세주택(시중 전세가격의 90% 이내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높은 공가율과 관련하여, 전세가율 하향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

○ LH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저조한 준공률 및 지연·취소 등 사업관리 체계의 문제와 수주실적 중심의 접근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상권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것

○ 반지하주택 매입 제도의 저조한 실적과 관련하여, 주택 건령 기준 등 매입가능 대상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

○ 설계 기준 및 예측을 넘어서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주택 설계 기준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 및 비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아울러 배정 물량의 수도권 편중 문제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위험성이 높은 지하층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에 공급하는 반지하주택 매입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축 주택 매입 위주의 운용 방식을 재검토할 것

○ 특약을 위반한 기업의 매입임대 약정 이행 요구에 대해 철저히 조치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

○ LH 공공주택 사업장에 스마트 우편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무인 택배함 공급 및 특정 업체의 공급 과다 점유 상황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것

○ 임대주택단지 내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유휴시설이 된 어린이집 등 주민 공동시설을 입주자 연령 구성 및 수요에 맞게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

○ 10년 이상 미매각된 학교용지를 포함하여 LH 보유 미매각 용지의 용도 변경 등 신속한 활용 방법을 마련할 것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재원이 확보되는 경우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LH의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

○ LH의 징계 감경 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분명한 감경 기준을 마련할 것

○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기대 수익률이 낮아 민간 우량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고, 우량 건설사가 참여하더라도 기대 품질에 못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희망자에게 정확히 설명할 것

○ 전관업체 수주 제한을 위한 근거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주거복지사업 중 수선유지급여의 수요 대비 예산 부족, 수리 실적 저하 및 대기기간 장기화 등과 관련하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도·파산 등의 위험이 있는 원청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방지를 위해, 일정한 경우 발주처가 원청의 동의 없이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비 지원단가 현실화, 신속한 인허가, 입주자 이주대책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

○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이 제한된 업체가 LH 사업에 입찰이 가능한 상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화성 진안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덕영대로의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

○ 공용 테라스하우스 공간을 최상층 특정 세대를 통해서만 출입 가능하도록 설계한 LH 주택 구조가 분쟁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사례를 전수 점검하고 분쟁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신축 매입임대주택사업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성과평가를 통한 유형별 선별 확대 및 입주까지의 목표 기간 관리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업승인 후 미착공 중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세밀한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장기 미착공 지구에 대한 재구조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LH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중국산 CCTV의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교체 계획을 수립할 것

○ 전세임대주택 수시 모집 일시 중단과 관련하여, 청년·신혼·다자녀가구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미매각용지 신축 매입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건설사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LH는 세금·비용 등 손실을 중복 부담하는 사업구조 여부 및 저조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사례를 확인할 것

○ 역대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담당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는바, 사명감을 기반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것

○ 안전등급 미달, 장기 하자, 주택 노후 등의 사유로 공급곤란주택으로 분류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관리 기준을 수립할 것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아파트 바닥 구조 층간소음 차단 성능 심사 제도 등을 개선할 것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 실적은 저조한 반면, 수도권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매입 확약 제도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확대할 것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 확대 및 지방의 재정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소래IC 공사비 부담을 둘러싼 인천광역시와 LH 간 소송에서 인천광역시가 승소한바, 예산 수립 등 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

○ 울산광역시 송정 지구 고가차벽공사사업 절감 예산을 활용하여 효문공단 인접 도로 구축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주택의 하자 저감 및 하자 발생시 신속 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주택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품질 관리를 위해 관리·감독할 것

○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제기 등 제재 회피를 통한 LH 사업 수주 방식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것

○ 약정형 신축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공사비 산정방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

○ 택지매각 중단에 따른 유동성 위기 및 부채비율 증가 가능성 관리를 위한 재무·사업구조 개편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 사이버 보안 취약성 심화 및 정보보호시스템 노후화 지적과 관련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호 보호 예산 긴축 기조를 수정할 것

○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공정 계약 구조 문제의 대안으로서 적정임금제 정착을 위해 제도적·정책적으로 준비할 것

○ 현행 공급주택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공공부문 주택공급 직접 시행을

위해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혁할 것

○ 공공주택 입주대기자 명단 통합 관리를 통한 정확한 수요 예측 및 공실 주택 최소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주거급여 등 비핵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 시급한 업무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주택단지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

○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 완화 및 소득구간별 최소 입주자 선정 비율 개선 등 실질적인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소셜믹스) 실현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선유지급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비롯하여 수급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LH의 공공주택사업 직접 시행에 따른 추가 자금 소요 및 미분양 리스크 등과 관련하여, LH의 역량 및 재무구조를 검토할 것

○ 사전점검 시 하자 지적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입주민 안전 및 재무 안정을 위해 시공·감리 단계부터 전면 재점검할 것

○ LH의 재정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임대주택 악성 공가 증가 문제의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공사비 현실화, 주민참여 확보 및 LH의 재정안정 등 핵심 과제를 해결할 것

○ 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바, 공급실적 제고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남 진주 혁신도시 NHF 10단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하자 현황 등을 고려한 분양가를 산정할 것

○ 건축물 문틈 손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KS 인증규격품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고 고용

구조를 개편할 것

○ LH 발주 현장 노동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위조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대책을 마련할 것

○ LH 발주 현장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을 받는지 여부를 실태조사할 것

○ 공공주택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과 관련하여, LH가 사업 총괄 주체로서 최종 책임을 지는 명확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고 품질 보증을 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 해결 대안을 마련할 것

○ 광명시흥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인 서해안로 확장공사의 사업기간 단축을 적극 추진할 것

○ LH의 공공주택사업 직접 시행 방안과 관련하여, 재정여건에 따른 수행역량 부족, 품질 저하 및 공공주택의 공공성 훼손 우려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토지보상 및 대지조성 등 선행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2025년의 착공 목표를 달성할 것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간소화, 매입 범위 확대, 매입가격 기준 개선 등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것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심의기준 조정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을 조속히 착공할 것

○ 공공임대주택의 공가 발생 예방을 위해 입주자의 선호를 반영한 공급, 입주자격 완화를 비롯한 수요 발굴 및 공가율이 높은 유형의 활용방식 전환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쪽방촌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하고 법령·제도를 개선할 것

○ 2020년 10월 도입 이후 단 한 곳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LH의 ‘안단테’

브랜드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

○ LH의 공공주택사업 직접 시행 방안과 관련하여, 철저한 시공사 관리·감독 및 외부 감리에 대한 LH의 책임 명확화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LH의 책임을 강화할 것

○ 공익사업 시행의 주요 지연 원인인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것

○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이율을 인하할 것

○ 분양가가 부동산 시황에 따라 책정되는 정책으로 인하여 분양가의 변동폭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대신 퇴거를 희망하여도 양도세 부담 등으로 매각이 곤란한 임대단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의 정전사고에 대해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을 통해 사전예방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

○ 취약계층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충하고 설치 대상 단지를 확대할 것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전담 인력을 증원할 것

○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을 고려하여, 고령자복지주택 내 요양시설을 확대할 것

○ 공공임대주택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대형 평형 공급 및 하자 발생 예방 등을 통해 주택 품질을 개선할 것

○ 정비사업의 수도권 편중과 관련하여, 지방 중소도시에 대해 주거 및 사회복지, 일자리 등을 통합하는 통합형 정비전략을 수립할 것

○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 공공개발 책무를 이행할 것

○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

델링 추진 등 그린 주거복지 모델을 수립할 것

○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행복주택 공실률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유연화할 것

○ 지역사회의 실질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 등 주택관리 용역 제도를 개선할 것

○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율 및 손실액 증가와 관련하여, 지역별 맞춤형 공급 전략 수립, 노후 단지 리모델링 확대 및 공가 관리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관리 강화 및 노후단지 리모델링 등 핵심 기능에 책임과 역할을 집중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시행사와의 상생 등을 고려하여, 위기 시행사에 대한 계약 조정 및 몰취계약금의 반환·감액 등 계약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의 소극적 행사로 인해 후순위 피해자의 경매차익 회복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매입기준가 운용의 경직성을 개선할 것

○ LH 발주사업 현장에서 무자격자가 감리 등 기술인 역할을 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

마 한국도로공사

○ 설계·시공업체 선정 및 특정공법 심의에 있어 전관기업 밀어주기 의심이 없도록 관리할 것

○ 낙하물 사고 감소를 위한 낙하물 신고포상제 운영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공사 추진 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를 불식시킬 것

○ 직영휴게소와 임대휴게소 간의 가격 차이를 점검하고 직영휴게소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안전사고 발생 시 임원문책규정이 사문화된 규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

○ 경영실적 평가에서 안전 및 재난관리, 윤리경영 분야의 저조한 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입점업체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휴게소 운영사와 입점업체간 계약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청소와 관련하여 기관 목적에 맞게 도로보수 유지관리 업무을 수행할 것

○ 톨게이트 수납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관련 조정합의 등 조기 종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통행료 미납 예방을 위한 징수절차 개선, 처벌 규정 강구, 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음식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곡류·육류 공동구매방식 적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다봄CCTV, 레이더식 돌발상황 감지 시스템 관련 감사원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전 직원의 청렴경영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것

○ 고속도로변 칡넝쿨 방치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것

○ 시간대나 기후 여건에 상관없이 차선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신기술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안전순찰차량 교체주기 개선 및 노후차량 교체를 추진할 것
○ 수도권본부 사옥매입 관련 비용 과다 및 대안 검토 미흡 등 국토교통부 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유휴부지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AI 기술 도입 등 관리시스템 개선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 신갈고속도로버스정류장 고성능 CCTV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할 것
○ 고속도로 내 졸음쉼터 및 화장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도로 열선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표준시방서를 마련할 것
○ 노면색깔유도선과 도로표지 색상일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고속도로 오진출 차량의 기본 통행료 면제 및 짧은 요금소 간 인하 등 통행료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것
○ 졸음쉼터 청소담당 인력(현장 지원직) 관련 유사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조속히 해결할 것
○ 졸음쉼터 청소담당 인력 감소 관련 외주화를 지양하고 직영화를 검토할 것
○ 과적차량 분리운송 확대를 위한 실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화주 및 운송사업자의 과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계양강화고속도로 종점부 접속도로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스마트톨링 사업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
○ 노후 고속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정밀안전점검 및 포장 리모델링 사업 계획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인근 통로암거와 관련하여 교통량,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

해서 국비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

○ 한국도로공사 발주 연구용역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하여 계약사무규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

○ 명절 통행료 면제로 인한 도로공사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할 것

○ 스마트톨링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소 인력 조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

○ 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철저하게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주유소 보안용 CCTV를 화장실 모니터에 송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포트홀 문제 대응을 위하여 자동탐지장비 탐지율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보수를 추진할 것

○ 후불하이패스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고객 마일리지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방음터널 설치 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조속하게 협의를 완료할 것

○ 고속도로 비탈면 점검 관련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적시에 조치할 것

○ 휴게소 식품위생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시 위생점검 결과 반영비율 상향을 검토할 것

○ 고속도로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고속도로 편입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시흥IC~고강IC) 전 구간 지하화를 검토할 것

○ 에코델타시티에 IC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동김해IC-진해신항만) 관련 조속히 보상을 추진

할 것

○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시스템 시범사업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종사원 근로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이 과거에 비해 후퇴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설계변경 최소화 및 설계변경 시 공기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

○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시 즉각적인 패널티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청소 소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화장실 관련 졸음쉼터 진입로 및 휴게소 점자블럭, 점자표지판을 개선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창업매장 도입 취지에 맞도록 개선할 것

○ 길사랑장학재단 임원에 대한 과도한 급여 문제 등 전반적인 운영 문제를 개선할 것

○ 도로공사의 RE100 참여를 위해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휴부지, 방음벽 등 활용한 단계별 태양광 발전 확충계획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주차장·진입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요원 배치 및 데이터·AI 활용 시스템 구축 등 휴게소 안전·혼잡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공사 발주처의 감독관이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건설현장 안전관리실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및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

○ 안전순찰원 마약사건 관련 근무 전 음주·마약 간이검사 의무화를 검토할 것

○ 고속도로 도로표지판 내 상업시설 표기 관련 진상조사 실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도로공사 비상임이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

○ 대전 지역 도로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대전 소재 기업이 부재한 문제를 개선할 것

○ 미결용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졸음쉼터 내 범죄예방대책 및 차양막 설치방안을 검토할 것

○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 구간 확장사업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관련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관리감독 및 평가체계 정비를 검토할 것

○ 안전순찰원 업무상 피해 방지 대책 및 법적지위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인선 지하화공사 착공 전 상부도로 관리권을 인천시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소래IC 비용분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LH, 인천시 등) 협의 후 영동선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

○ 용인휴게소-안산휴게소 구간에서 적정 간격의 휴게소 설치 및 북수원 환승휴게소 설치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

○ 도로 건설현장 안전 등을 위한 BIM 전담조직 운영 및 도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지하고속도로 추진시 안전한 주행환경과 재정 문제를 고려하여 민자 방식이 아닌 재정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속도로 요금소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휴게소 종사원 고령화 및 시설 노후화 대비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

○ 민자휴게시설 사용료 관련 분쟁 및 휴게시설 대량 계약만료 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 및 충전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 휴게시설 운영업체 태아산업 등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특혜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것

○ 고속도로 법면 등에 대한 쓰레기 청소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과적 단속 추적시스템 후속이행 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시흥IC 정체개선을 위한 진출입로 확장 대책을 마련할 것

○ 과적단속원들의 제한차량 단속을 위한 안전공간 기준을 마련하고 제한차량 단속인원을 규정에 맞게 3인 1조로 운영하도록 개선할 것

○ 고속도로 인근 산불 발생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작업장 실시간 위치정보 안내와 관련된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교통·건설현장 CCTV 영상품질 표준화 및 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경기 북부 도로 중앙분리대 단부 구간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 관련 지침 적용 및 관리감독에 대해 실태조사할 것

○ 고속도로 IC 설치 관련 국비 지원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

○ 영종·인천대교 독립채산제 적용 및 조기 무료화 대안에 대하여 국토부와 협의할 것

○ 성과관리지표 내 청소 관련 지표를 반영할 것

○ 상습정체구간 및 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시설물 파손사고 재발 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철저한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사고치사율이 높은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상습교통사고지역에서의 보수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

○ 내부취업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등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재취업

심사도입 등 도로공사 퇴직자 관련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남북6축 연장과 함께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없는 의령에 IC 설치를 검토할 것

○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 시 턴키(일괄하도급) 계약을 지양할 것

○ 고속도로 시설물 손괴 복구비 미징수 문제를 개선할 것

○ 휴게소 내 태양광 패널 추돌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바 한국철도공사

○ 경전선 고속철도 운행 횟수 증편, 경전선 막차 운행시간 연장에 대해 검토할 것

○ 높은 당일 반환율 문제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반환수수료 제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

○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등 코레일의 화물철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노란봉투법 대응 전담 TF를 구성할 것

○ 청도사고와 관련하여 작업자 실명 등록 의무화, 안전교육 이력 전산 대조 시스템 도입, 하청업체 인력 변경 실시간 보고 체계 등의 추진을 검토할 것

○ 코레일-SR통합 과정에서 SR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일반선 자동살수장치를 내년 중점관리 개소 외 나머지 232개소까지 모두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

○ KTCS-2 사업에 대해 청탁 의혹 등을 명백하게 밝힌 이후 추진할 것

○ 청도 열차사고와 같이 작업계획서상 작업자가 교체되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열차접근경보앱에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철도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CTC정보시스템을 공사와 연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재생에너지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태양광 설비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선로 사이나 방음벽, 울타리 펜스 등의 태양광 패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송에 나서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코레일테크 직원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주5일제 미시행역 및 신설역에 대한 인원 충원 요구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철도교통의 안전과 사고 예방, 사고 시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CCTV설치 기준지침 등을 개정하고, 선로 인근 CCTV의 추가 설치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원주역사, 신림역사 등 폐역사 개발 시 주민 의견수렴 후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추진할 것

○ 열차 내 CCTV 정보의 보관기간을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선할 것

○ 청도 열차사고로 돌아가신 유족과 부상자들의 처우 방안을 마련할 것

○ RF방식의 열차접근경보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청도 열차사고지역과 같이 사유지 분쟁중인 9곳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KTX 열차운임과 관련하여 소요 시간 차이에 불구하고 동일한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KTX 운임체계를 개선할 것

○ 다원시스 차량 관련 1차, 2차 계약 납품이 지연되고 중량 초과 등 부실 제작 차량이 납품된 상태에서 3차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제작 기술평가·현장 실사·신용등급 평가·입찰제도 등 부실계약 과정과 당초 설계기준보다 중량이 초과된 부실차량 납품 및 선금 사용내역 미점검에 따른 선금 목적 외 사용 발생 등의 부실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 납품지연 예방·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납품지연이 심각한 철도차량 제작사와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납품지연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다원시스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납기지연에 대한 부정당업체 지정 검토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종사자 음주와 관련하여 음주측정시스템 문제, 솜방망이 처벌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 탈선감지장치 오작동 해결을 위해 감지장치 기술 업그레이드 등을 검토할 것

○ 광주역에서 익산역까지 가는 새마을호의 환승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향후 신규열차 도입 시 호남선, 광주역에 우선 투입을 검토할 것

○ 재생에너지를 통한 자체 발전 추진과 함께 서남권 재생에너지 사업과의 연계 등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SR통합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 행사하고 있는 자회사도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5분 재승차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서울지하철 1호선 천장 누수와 관련하여 매뉴얼 및 대응조치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

○ 외국인 국적별 부정승차 현황 등 통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열차 운행 시 정시율이 하락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고객 대기선과 장애인 유도용 점자블록을 병행 운용함에 따라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최근 운영하고 있는 열차 대기선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창원역, 신창원역 등 방치되고 있는 폐역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열차 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열차 내 전기소화기, 질식소화표 배치 등 배터리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개봉역사 상업시설 임차계약 종료시 전차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
○ 기후위기에 대응한 서행운전 기준 등을 재정비할 것
○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 대비 보행로 미확보 구간을 해소할 것
○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광명역 노동자를 서울역 트레블센터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부당전보 또는 불법파견 소지가 없었는지 살펴볼 것
○ 주간보수작업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간보수작업 중단 및 4조 2교대 전환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속철도 자갈궤도를 콘크리트 궤도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선로 위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의존한 안전 시스템에서 시스템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코레일과 SR 간 교차운행 시범사업보다 기관 통합이 효과적이라고 보이므로 신속한 기관 통합을 추진할 것
○ 철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영업열차 자동검측시스템 확대 및 차단작업 시간 확보를 검토할 것
○ 열차와 작업자를 분리하기 위해 상례작업을 전면 금지하고 야간 차단작업 실시 등 차단작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 상습적인 승차권 대량구매 이후 취소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철도 사고 시 안내체계 및 시각적 안내가 미흡한 상황을 개선할 것
○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
○ KTX-1 대체차량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에 맞게

필요수량을 재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예매 시스템 서버 안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

○ 내부취업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급수 이상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고속철도 정시율 개선을 위하여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추진할 것

○ 철도노조 파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 기준인 기본급의 80% 개선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조속히 합의할 것

○ 철도차량 제작계약의 납기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제3전문기관 검증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재생에너지를 열차로 수송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철도차량 도입사업 추진 시 조달청과 협의해 수주업체의 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할 것

○ 철도차량 납기지연 방지를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입찰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질의서 절도 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파면에 준하는 징계조치를 할 것

○ 자회사 파업 관련 화장실 오물투척 및 업무방해 등에 대한 법적검토 및 공사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자회사 정규직 전환, 위탁용역비 향상에도 매년 파업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 채용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할 것

○ 임대료 인하를 통한 면세점 상생 방안 및 국내 면세사업자 보호기준을 마련할 것

○ 지방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 공항연계 교통지원사업을 협의할 것

○ 자회사 파업으로 인한 여객 불편, 공항운영 차질,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노란봉투법 시행예정에 따라 자회사의 교섭 요구가 예상되는데, 인천공항에서는 TF 구성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

○ 공사와 자회사 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강구할 것

○ 공사-자회사 간 상생방안 마련 및 인력증원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안전근로협의체에서 교대근무제 안건이 거부되었는데, 안전문제로 인식하고 자회사와 협의할 것

○ 자회사 산업재해 점검을 철저히 하여 차년도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과거 정규직 전환 시 채용비리 의심자 93명 중 8명을 제외한 인력을 채용했는데, 상기 인력에 대한 고용 적정성 재검토할 것

○ 보안검색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인정한 1심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공사 직접고용 이행 등의 대책 마련할 것

○ 공항공사의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노조의 청사 불법점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 인천-애틀란타 노선 위탁수하물원격검색제도(IRBS) 도입 관련 홍보를 강화할 것

○ 중소기업 기술개발구매제도 관련 공사 귀책으로 개발제품 미구매 상황 발생 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민의힘 당직자 워크숍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발언의 진위를 확인할 것

○ 공사가 해외사업장에서 맺는 입찰계약 시 국내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찰 시 자국 기업 가산점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사 상주직원 출입증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시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이행이 미비하므로 개발이익금을 조속히 납부할 것

○ 정부 협의를 거쳐 BIM 기반 전국 공항 토지 및 시설물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운영 방안을 수립할 것

○ 공항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율주행 법 · 제도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

○ 자회사 파업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인천시 등과 협의하여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 설립을 검토할 것

○ 공항주차난, 다자녀가구 및 노약자 등 대상 교통, 친환경 경영 등을 고려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항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여객에게 공항시설 할인권 제공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공항 시설사용료 인상 전제조건으로 공항 안전강화 및 게이트 병목해소 등의 대책수립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할 것

○ 계엄 때 출근 내용, 법무부로부터의 연락 여부 등 계엄에 미관여했다는 입장을 소명할 것

○ 공사/자회사 임원 선임 시 외부개입 원천 차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자회사 감독 및 견제를 위해 이사회에 외부인사 확대 및 노동자대표 참여를 검토할 것

○ 부채 및 차입금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기부금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것

○ 공사 경영실적 대비 사회공헌 부족, 특히 굿윌스토어 등 지역공헌 사업을 확대할 것

○ 일부 항공사에서 카운터에서 발권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 서비스 유료화가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인재개발원 국민의힘 워크숍 참석 등 공기업 사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

○ 연예인 출입국 사진촬영 위한 광고물 부착 및 자리 선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연예인 공항이용계획서 부실 또는 미제출, 동선 파악 불가, 출입국 혼잡 등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관리 대책 수립할 것

○ 공항혼잡 시 처리기준에 따른 인력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관련 점검을 강화할 것

○ 정부와 협의하여 상주직원들의 연예인 사진촬영으로 인한 혼잡 문제 가중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

○ 연예인의 공항 혼잡 유발 시 혼잡유발부담금과 같은 페널티가 필요하며, 공항이용계획서 미제출시 혼잡유발부담금 가산할 것

○ 인천공항에서 연예인 혼잡으로 발생한 경호인력 추가 배치 비용을 기획사에 부담하는 방안 검토할 것

○ 공공시설인 공항을 연예 기획사가 상업 및 홍보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방안 및 재발방지 로드맵을 검토할 것

○ 제1여객터미널 주차대행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인력비 감축, 고용승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K-airport 수출 활성화를 위해 철도, 방산, 건설 등 유관산업 연계 및 범정부-민간 협업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수출 전략 마련할 것

○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KDI 재검증 등 면밀히 검토할 것

○ 식물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 주변지역(강서, 송도 등) 중복투자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검토할 것

○ 불법 드론 이륙 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드론 운용자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공항의 폭발물 · 테러 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공항운영기관의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할 것

○ 조류충돌 예방, 조류퇴치 수단, 조류유인시설 관련 규정 정비 등 항공안전 개선 방안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

○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SAF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흑차, 불법 콜택시 등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흑차, 불법 콜택시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구성된 TF에 적극 협조할 것

○ 중국인 입국 급증 속 공항권 불법 유상운송(흑차) 확산과 근절 대책 마련할 것

○ 공식주차대행의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식주차대행의 명칭 개선과 함께 범죄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마약 휴대 입국 시 X-ray로 적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세청과 협의해서 대안을 검토할 것

○ 공항 내 위해물품 반입 건수가 지속 증가 중으로, 이용객의 책임 의식 강화 방안 및 안보위해물품 반입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기부가액 선정 등 투명한 사후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것

○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평가체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항 에어사이드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주행 운행기반을 조성할 것

○ 양 공사의 K-UAM 사업의 중복 투자에 대해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

○ 공항 내 위험물 적발사례 및 보안검색 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교류 체계 미비, 우수한 인천공항 보안수준이 알려질 수 있도록 국제교류 체계를 구축할 것

○ 공항 내 문화예술 작품 및 체험관 등 양질의 콘텐츠가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 수립할 것

○ 인천국제공항 랜드마크 개발 시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에 맞게 한국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중국 자본이 국내 면세시장 진출 시 관련 정보가 외국자본에 반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국내 면세사업자 보호기준을 마련할 것

○ 스마트패스 안면인식 실패율(22%)이 높은데 실패원인을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장 인력 배치를 통해 스마트패스 인식 불가 시 가급적 현장에서 신원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

○ 수하물 컨베이어벨트 고무에서 알갱이 및 벤지포렌 등 발암물질이 발생하나 분진측정이 어려우며 그라인더 작업 시 화재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 수하물 처리 자동화 시스템의 UPS 축전기 관리가 터미널마다 상이하고, 교체주기 도래 축전지도 존재하여 안전사고(화재)의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수하물사업소 근무현장 추락이나 낙상에 대비한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시설물을 개선할 것

○ 공항 내 앱호출 택시 관련 앱 개발, 플랫폼 택시 협의체 조성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

○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하여 인천공항공사는 소음부담금, 시설관리자 부담금 부담주체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제4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수립 시 인천공항공사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FBO(Fixed-Based Operator) 시장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에 FBO 시설 신설 유치를 적극 검토할 것

○ 항공사의 스마트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성과(실제 이용률)가 아닌 시스템 설치 · 운영 대수에 따른 사용료 할인 제도를 개선할 것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북도면 등)에 대한 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것

○ 인천공항 접근도로가 전부 유료로 운영되는데, 국민의 교통복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영종대교 실시협약 관련 재협상을 추진할 것

○ 항공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필요 시 국회와 협력할 것

○ 제2터미널 확장구역 공사비 지급 지연에 대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이 34.4%이며, 환급률은 11.7%로 낮은 상황인데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환급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항공사와 협조할 것

○ 쿠웨이트 T4운영사업을 제외하면 해외사업 수익률 적자, 제대로 된 수익 구조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조직개편을 통해 해외사업처를 2개로 확대하였는데, 해외사업 수익 구조 분석 등 내실있는 사업 방안을 강구할 것

○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사업 수주 관련하여 면밀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것

○ 입국장 내 면세점 인도장 설치에 대한 객관적 · 종합적 분석을 실시할 것

○ 인천국제공항의 데이터센터 타당성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

○ 로드블럭 등 보안시설에 대한 운용 상한을 명확히 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로드블럭을 교체할 것

○ 기내 배터리 화재 사고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과 유독가스 차단, 폭발 및 화염을 차단하는 안전장비를 도입할 것

○ 제2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운영실태(혼잡 등 문제점) 및 여객 증가·고용창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것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적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혐오 · 선동 시위에 대해 공사가 집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 매체 허위보도에 대한 언론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아 한국공항공사

○ 건설 중인 울릉공항 내 지정면세점 도입을 검토할 것

○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검색대 확대 운영을 검토할 것

○ 김해공항 활주로 오착륙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BIM 기술을 활용한 공항시설 관리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

○ 공사 소관 공항에서도 캄보디아 취업사기 출국예방 안내조치를 할 것

○ 공사 소관 공항 내 약국 없는 공항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배치할 것

○ 공항 내 드론탐지시스템을 확대하고, 민군공항의 경우 군과의 MOU를 통해 공동 매뉴얼을 마련할 것

○ 탑승권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 지방공항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등 지방공항의 적자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

○ 온라인면세점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용 앱 구축 등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

○ 자회사 계약금액 낙찰률을 개선할 것

○ 청주공항 제2주차빌딩 및 국제선 여객터미널을 확충할 것

○ 대구공항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설투자를 실시할 것

○ 연예인 출국 혼잡 관련 매뉴얼 개선 및 관계기관 협조를 강화하고, 공항이용계획서 부실 또는 미제출, 동선 파악 불가, 출입국 혼잡 등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 지상안전사고 및 보안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 일회성 불법촬영 점검체계를 개선하고 상시적으로 불법촬영을 탐지·차단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

○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 계류장 내 조업·운영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SAF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대구공항 국내선 이용객 야외탑승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

○ 한국공항공사의 지속적인 적자 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통합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계엄 때 출근 내용, 법무부로부터의 연락 여부 등 계엄에 미관여했다는 입장을 소명할 것

○ 조류충돌 예방, 조류퇴치 수단, 조류유인시설 관련 규정 정비 등 항공안전 개선 방안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

○ 지문확인시스템 확대 도입 등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여권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확인 강화 방안을 제안할 것

○ 적자공항의 재무건전성 개선 및 지방공항의 안전시설 투자방안을 마련할 것

○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기부가액 선정 등 투명한 사후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것

○ 지방공항별 전기차 충전시설 단계적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지방공항의 지상조업장비 전동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

○ 공항공사의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공항공사의 실탄, 공포탄 미적발 사례 등 항공보안 실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검색 인력의 교육·점검 및 자회사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일부 항공사에서 카운터에서 발권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 서비스 유료화가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 기내 배터리 화재 사고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과 유독가스 차단, 폭발 및 화염을 차단하는 안전장비를 도입할 것

○ 중국인 입국 급증 속 공항권 불법 유상운송(흑차) 확산과 근절 대책 마련할 것

○ 공항의 폭발물·테러 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공항운영기관의 단계별 대응체계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양 공사의 K-UAM 사업의 중복 투자에 대해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

○ 국내선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페널티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무안공항 재개항 전까지 다른 공항 이동 버스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방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금 또는 보조금 제도를 강구할 것

○ 무안공항 재개항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개항 지연 시 관련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실시할 것

○ 한국공항공사 임대료 체납액 관리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자 한국부동산원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의 소요 기간 단축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정량적 기준 설정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현행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한계 문제와 관련하여, 존치 여부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예치금의 효율적 집행 및 주택 공급대책으로의 활용 검토 등 체계적 정비·관리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 부동산 통계 조작(수정) 의혹 등과 관련하여, 쇄신 방안을 모색할 것

○ 지역별 부동산 가격 초양극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

○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기획조사 후속조치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조치할 것

○ 상가 임대동향조사의 광범위한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상가공실률 통계의 시장체감도 향상을 위해 조사 방법을 개선할 것

○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신속한 정보 제공 기능 등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폐지 또는 기준 변경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

○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후속조치 수립을 위하여 부동산 취득원인별 현황 추가 등 통계를 개선할 것

○ 기관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의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것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사업의 한계와 관련하여, 대안으로 논의 중인 통합분쟁조정위원회의 공사비 조정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AI 기반 이상거래 선별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할 것

○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공표주기 단축을 검토할 것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분석 고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매물 모니터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 주택 유형과 플랫폼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공시가격 정정에 따르는 불편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 청약 부적격자 당첨 방지 및 부정청약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도록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규정을 개정할 것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임대인)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실질적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 부동산 보유 통계의 신속·정확한 공표 및 통계 항목 확대 등을 위하여 통계 생산·공표 기관을 일원화할 것

차 주택도시보증공사

○ 수탁은행에서 공공임대주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위탁운영 현황에 대하여 점검할 것

○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재산 조사, 구상권 청구 등 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시행사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보증금 체납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보증 기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기관 업무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등 든든전세 사업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보증 신청 단계에서 외국인 정보 확인, 제3기관 보증금 일부 예치, 채무불이행한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시세보다 높은 전세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보증을 받고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사례에 대해 보증이행 거절을 검토할 것

○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이 공동주택 재고 증가로 인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재검토할 것

○ 임대 종료가 임박한 리츠 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청산 기준을 마련할 것

○ 임대리츠 사업장의 추가 임차인 모집 기준이 없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내부 기준 제정을 검토할 것

○ 전세보증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적 기구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이자를 수취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무이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인정감정평가 제도로 인해 평가금액이 종전 대비 저평가되어 보증이 가입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가입 절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미가입 사업자를 엄정 제재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

○ 인정감정평가 제도와 강화된 임대보증 가입요건으로 인해 깡통전세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비아파트 수익분석방식 도입, 2단계 교차감정제 등 6대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

○ 인정감정평가 제도 도입으로 인해 다수의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2025. 10. 2.에 시행한 제도 보완책의 효과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추가 개선책을 검토할 것

○ 든든전세주택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위탁 운영 방식을 포함한 업무 전 과정에 대하여 점검할 것

○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출국 금지 등 공적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대출 요건 완화로 인해 여유자금이 감소하고 예산 대비 과도하게 공자기금에 예탁한 사례가 있으므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임대인의 연락 두절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지방에서 전세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리스크 진단, 맞춤형 보증 및 회수 관리 체계 구축을 검토할 것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에 대한 분양보증이 급감하였으므로 기회의 균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증체계를 점검할 것

○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건을 갖춘 경우 융자 및 이차보전 등 심사를 조속히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신청에 비해 가입률 등이 현저히 저조하기에 가입률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입신청 서류 중 임차인이 직접 구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정부 행정망을 연계하여

관련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든든전세주택 하자보수 및 임대인 정보공개 시스템 홍보 예산 집행액과 비교하여 직원 사택 예산이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택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

○ 동일 업체의 분양보증 사고 반복 및 연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특정 법인이 전세사기 주택을 낙찰받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송 기간에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악성 사례에 대해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것

○ 경·공매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유찰되어 채권 회수율이 저조하므로 낙찰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 가입 전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가입 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천안두정 리츠 사기는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명의 위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과 리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할 것

○ 업무협약을 맺은 법무사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연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정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아파트가 아닌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 같은 비표준화 주택에 대한 특화된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 업무협약을 맺은 수탁은행의 대출 거절 실태 점검 및 협약 미이행 시 해지 검토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할 것

○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개요건 완화 등을 검토할 것

○ 안심전세앱의 일부 시세 위험성 확인 불가, 로그인 불편, 시스템 불안정 등 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다각적 홍보 등 이용률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 안심전세앱의 평점 및 댓글 조작 정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임대보증 업무의 민간 은행 전가 및 과도한 소요 기간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민간임대리츠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평가위원 선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고위험 주택 및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등 국민이 안심하고 임차할 수 있는 시장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

○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악성임대인이 줄어들지 않고 회수율도 저조하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지방 중소 건설사의 회생 신청으로 발생하는 중도금 무이자 약정 파기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보증기준을 강화하면 보증실적이 감소하여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므로 보증 건수를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의 보증 사각지대 해소와 전세난 완화를 위해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

○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PF특별보증 운영 시 기존 PF일반보증과 분리하여 별도의 한도와 계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의 세금으로 보증료를 보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보증료 자부담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에 정해진 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최초 임대인보증발급 은행과 갱신 은행 간 보증정보가 연동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 금융기관 임직원이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불법대출을 실행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전세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검토할 것

○ 주택도시기금의 장기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다양화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대한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을 검토할 것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전문 운용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공기관이 내규를 대부분 공개하고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비공개 관행을 개선할 것

○ 안심전세앱의 시세 제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방안과 한국부동산원에 시세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임차인의 의도하지 않은 사기계약 연루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 절차 및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조기 개최를 검토할 것

○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매입형 실적 제고방안, 계약 미체결에 따른 공실 장기화에 대한 대책, 당첨 포기 또는 계약 포기자에 대한 페널티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미분양 CR리츠 활성화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해 추가 세제 혜택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주택도시기금 수요자대출 약정 위반 문제에 대해

점검 주기 단축, 시스템 실시간 연계 등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금투자심의위원회가 중단 및 지연 없이 정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매물 심사를 요청하면 보증 기관이 위험 요소를 검토하여 '보증보험 가입 가능 매물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임대인을 상대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소구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2022다247378, 2025.6.12.)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한 대책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도시기금 서민 정책대출의 재원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대출금 회수 절차를 즉각적이고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출 규제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임직원 임차사택 지원 및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4. 8. 이후 5개 법인으로 이루어진 단일 컨소시엄으로 모든 임대·전세보증 평가를 일원화하였으나 독과점 구조, 기존 감정평가액 하락으로 임차인·임대인·건설사의 피해,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임대보증금 보증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회수율은 저조한 상황이므로 국민이 안심하고 임차할 수 있는 시장 조성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성과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저조하므로 손실자산 관리계획, 회수 로드맵 및 손실 재발 방지책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임직원에 대한 주택융자 지원 제도에 대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녹색 및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2026년도에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카 한국교통안전공단

○ 경량의 4종 드론은 자격관리, 교육 및 기체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사생활 침해, 사고 요인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

○ 황색신호 변경 시 신호 위반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딜레마존 해결을 위해 예비정지선 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을 연구할 것

○ 전기차 의무검사 시 BMS 정보 제공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일부 중국산 전기버스 등이 BMS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택시운영관리시스템(TIMS)를 통해 플랫폼 호출·배차·수수료 등 택시 영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및 이를 위한 국회의 법률안 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

○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차 안전검사 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전기차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 표준화 모델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단 주관 리콜조사 확대 및 시행률을 향상시킬 것

○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통보 시 운전자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PM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운전자격 확인, 보험문제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용후 배터리 활용 여부 및 사용기준 등을 마련할 것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류검증 안전검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자율주행 레벨3에 대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검사 기준을 마련할 것

○ 리콜 대상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검사 시 리콜대상 차량 확인과 연계되도록 할 것

○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가 시행되는데, 배달경험이 있는 배달종사자들이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령 운전자 ·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이므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확대 등 고령자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 불법드론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드론식별장치 장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

○ 불법 또는 미인증 튜닝부품 제작 · 판매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튜닝부품 성능 · 품질 적합조사' 인프라 및 예산을 확충할 것

○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환경친화도 평가제도가 타 부처의 에너지소비효율 평가나 온실가스 배출기준 평가 등과 중복되므로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

○ 수소차 내압용기 전용검사소 및 검사 전문인력 부족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 및 자동차검사 시 리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내실 있는 품질인증부품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미인증 기계식주차장 사전 적발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비사업용 캠핑카에 대한 과도한 검사주기를 완화할 것

○ 고령자 운전 문제는 면허증 반납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므로 노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튜닝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단속인력 확대,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원도심 맞춤형 교통안전 진단을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개발할 것

○ 교통안전 취약지역의 점검사업 이후 후속 조치 이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통안전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 허위 비행경력증명서 제출 방지를 위한 증빙제도 개선 등 드론자격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닛산 '리프' 자동차에 대한 리콜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자동차 검사예약 서비스' 시스템의 데이터 개방으로 다양한 벤처기업 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

○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결함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의무배치 및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이행률 · 조치율 정기 관리 및 공표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선거유세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승인(공단)-등록(선관위)-단속(경찰 · 지자체) 간 정보연계체계 구축, 지자체 단속권 부여, 공단 내 단속 전담조직 신설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체계 가동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용 대형차량(버스, 화물) 등에 AI기반 운전자 모니터링시스템(DMS) 보급을 확대할 것

타 국가철도공단

○ 제5차 국가철도망 관련 KTX대구~창원 구간 고속화 사업 및 진해신항과 가덕도 연결 노선 사업 반영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

○ 오송역 누수 및 과주여유거리 확보 방안을 포함한 오송역 현대화 계획을 수립할 것

○ 고속철도 자갈 궤도의 콘크리트 궤도 교체 계획을 수립할 것

○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 호남선 KTX-청룡 정상운행을 위한 변전소 용량 증설을 검토할 것

○ 서방천 신안철교 개량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 필요 및 자체 태양광 발전소 운영 등 RE100에 동참하는 노력할 것

○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하여 자회사가 아닌 공단의 직접 수행 가능성 및 지방공사 등의 공동 사업시행자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부전~마산 복선전철 2026년 개통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

○ 대전 조차장철도 입체화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

○ 철도공단의 재취업 관리체계를 점검할 것

○ 수서~동탄 구간 SRT와 GTX-A 선로 공용에 따른 선로 용량 문제를 해결할 것

○ 원주역사, 신림역사 등 폐역사 개발 시 주민 의견수렴 후 공공성 측면에서 개발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추진할 것

○ 남부내륙철도 적기 준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KR스타트업라운지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만성적인 역사 누수 해결을 위한 발주, 시공, 감리, 준공처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 기후위기·폭염에 대비하여 선로 설계기준의 변경을 검토할 것

○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

○ 군산역 주차장 확대 및 주차면수 확대를 검토할 것

○ 첨단기술, 데이터 기반의 철도공단 자체의 비탈면 관리체계 구축을 검토할 것

○ 철도공단 발주공사 계약방식의 변경에 따른 실적검증 체계 강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출자회사의 이해충돌 관련 출자구조 운영실태 점검 및 이해충돌 예방 대책 수립 등 재취업 관리체계를 점검할 것

○ 서해선 KTX 소사역 정차를 감안한 시설개량을 추진할 것

○ 경인선 노후 방음벽의 시설개량 추진을 검토할 것

○ 보행통로, 대피공간 확보 등 작업자 안전환경을 개선할 것

○ 동탄역 엘리베이터의 추가 신설방안을 검토할 것

○ 목포 등 차량 정비시설을 조속히 구축할 것

○ 건널목 입체화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지자체 분담비율 완화방안을 검토할 것

○ 충북선 고속화사업 추진시 제천역 경유방안을 검토할 것

○ 구(舊) 안동역사 부지 개발 지연으로 폐선부지 방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 노후화된 철도시설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

○ 경제성 분석의 구조적 편향성 문제, 지역균형발전 평가 방식 개선 등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철도공단이 특정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실에 맞지 않는 선로유지 관리지침의 개정을 검토할 것

○ 일반철로 자동살수장치를 전 구간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 철도 선로변 CCTV 확대 추진 시, 선로변 CCTV 영상 및 IoT 센서 정보를 통합 수용이 가능한 통합 통신망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면세점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면세산업 하향 추세 및 내수 소비 침체 상황에서 상품 기획, 개발 등 마케팅 개선 노력을 통한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

○ 항공우주박물관의 재무개선 노력 및 박물관 본연의 기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면세 판매품목 확대 계획 재검토 및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예래휴양단지(휴양형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사업추진 계획 및 연도별 구체적 로드맵·재원을 마련할 것

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소관 R&D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할 것

○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

○ 기술인증 심사의 신뢰성 제고 및 신청인의 심사부담 완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국토교통 R&D 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권역별 일정 비율 예산 배정 및 지역 기관·기업 참여 가점제 확대 등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

○ 골재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R&D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거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하 10m 이내 지하개발사업에 대한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하고 지하정보 변동 갱신 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지하공간통합지도가 지하 안전 관리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구축·갱신 정보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중국산 위성항법시스템(GNSS) 장비의 과다 보유 등으로 인한 중요 공간정보의 국외 유출 우려 등과 관련하여, GNSS 장비의 국산화 비율 제고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퇴직을 앞둔 임직원의 교육 파견 지원 및 퇴직 임원의 사내 강의 실시 등과 관련하여 특혜 여부를 소명할 것

○ 과학적 해양환경 관리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AI 기반의 업사이클링 연안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신사업을 발굴·확장할 것

○ 지적공부의 오류 및 지역별 오류 비율 불균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30년까지 한시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기한 내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

○ 장애인 의무 고용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구매목표를 이행할 것

너 국토안전관리원

○ 2종 시설물에 대해 이력관리를 체계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설물 안전점검의 신뢰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NC야구장 사고발생에 따라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

○ 안전점검 기준 및 결과평가, 평가 결과의 행정처분이 미흡함에 따라 안전점검 절차 및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 하부침하가 발생한 유등교의 가설교량에 중고 복공판 관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관심을 가지고 점검할 것

○ 백현동 옹벽 현장을 시찰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재정립' 및 '첨단기술 기반의 점검체계 도입을 위한 대가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E등급 시설물 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이주지원 활용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지원할 것

○ 하자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부실 등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아차사고 신고 접수에 따른 계도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대한 법적 권한 확보를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국토안전관리원과 유관기관이 공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추락예방 안전가이드'에 외국어(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타이어)를 추가하고 현장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장점검의 효율화 및 효과 강화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권한을 법제화할 것

○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공동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단기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 GPR탐사장비 관련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국내 도입 및 지하안전관리 예산 증액 방안을 마련할 것

○ 현 관리원에서 사용 중인 GPR장비의 탐지 깊이가 2m에 불과함에 따라 고성능 GPR장비 및 지반침하 관측망 등 신규 장비 도입을 고려하여 마련할 것

○ 국토안전관리원에 고성능 GPR장비 및 지반침하 관측망 등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반침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포함하여 국가가 예방·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상 공중이용시설에 도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정보체계(JIS) 강화할 수 있는 법 · 제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지정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성능검사 시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전과 사후로 구분되어 있는 바닥충격음 성능심사기관의 통합 또는 추가 등 방향성 결정, 새로 개발되는 완충제에 대한 인증 기준 마련,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화 시스템 구축, 성능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의 보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3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 및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바닥충격음 사후성능검사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 성과 분석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착공된 공사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화 계측 등 착공후지하안전조사 표준매뉴얼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스마트안전장비 등 지원을 확대할 것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지정기관으로서 층간소음 사후점검제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

더 ㈜에스알

○ 반환수수료 제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외국인 부정승차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KTX 임차를 활용한 공급좌석의 추가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직원 '가족할인쿠폰'의 내부 지침과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

○ 오송 비상대응 체계의 통합 운영 및 평택지제차량기지 추진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청각장애인 보조장비(텔레코일 존) 설치를 검토할 것

○ 공정한 예매 기회 보장을 위해 환불위약금 대폭 강화, 평시 1인당 구매 제한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할 것

○ 부정승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부가운임 대폭 강화, 상습 납부 거부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열차 운행 시 정시율이 하락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평택-오송 구간 병목현상 해소를 위하여 동탄발 SRT 운행을 검토할 것

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건설기계 사고 증가에 따른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종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체계를 보완할 것

○ 건설기계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을 고려해 현행 안전교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안전교육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것

○ 스마트 · 초대형 건설기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것

○ 미수검 · 부적합 · 말소대상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강화할 것

○ 건설기계 등록대수 대비 부족한 인력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인력 확충과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

○ 안전등급 저조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조직 개편 및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

○ 건설기계 장기 미수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수검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머 주택관리공단㈜

○ 현장 직원 보호 및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주거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사 배치 최소 세대수 기준 완화, 세대수에 따른 추가배치 기준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할 것

버 코레일관광개발㈜

○ KTX 여객승무원 안전업무 실질화 및 지휘체계를 개선할 것

○ 여행상품에 사회적 약자 할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

○ 프리미엄 상품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여행상품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내부 인권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서 코레일로지스㈜

○ 해당사항 없음

어 코레일네트웍스㈜

○ 관공서 공휴일 관련 코레일네트웍스 노사간 재협상을 통한 새로운 합의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 간 임금격차에 대한 감축목표와 단계별 실행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사와 자회사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4조2교대 시범도입 등 단계적 근무형태의 전환을 검토할 것

○ 4조2교대 전환을 위한 자구 노력과 함께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저 코레일유통㈜

○ 해당사항 없음

처 **코레일테크㈜**

○ 환경미화 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잔여 사업소에 대해서도 주 5일제로 조속히 전환할 것

○ 야간 격일 근무체계 개편(3조 2교대 전환)과 관련하여 실질임금 하락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

○ 성과급 지급 전에 퇴직한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휴일대체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할 것

○ 이직율을 낮추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커 항공안전기술원

○ 임직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결과 보고서의 기한 내 시스템 등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사용되는 시험장비 중 교정 유효기간이 경과된 측정장비에 대한 교정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것

○ ‘드론 실증도시 사업’ 내 드론배송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대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원사업을 개선하여 민간 주도의 자생적 발전모델 발굴·투자를 확대하고 드론배송 외에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것

터 새만금개발공사

○ 2년 연속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50%)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년 연속 안전관리 등급이 4등급으로 기관의 안전수준이 매우 취약하므로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할 것

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폴란드 사무소 존치 여부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보고할 것

○ 직원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EIPP 사업을 재검토할 것

○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입자본금 확충 및 정부 출자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허 건설기술교육원

○ 해당사항 없음

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기관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고 정규직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공간정보 분야의 AI·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노 국립항공박물관

○ 명예퇴직자 신청 대상 및 자격에 있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 공무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립항공박물관 인사규정 제66조를 개정(국가공무원→공무원)할 것

○ 유물 입수부터 등록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관리가 시스템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 인력 보강 또는 전문 용역 투입으로 미전산 구간을 우선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3등급으로 분류된 유물은 추가적인 손상이 없도록 신속히 보존처리를 실시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실물전시 확대를 위해 제2수장고를 위한 부지확정과 예산확보를 조속히 추진하고, 실물중심 전시 확대를 위한 단기 대책 추진상황을 의원실에 보고할 것

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경력직 채용 및 연봉인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의 부적절한 채용, 인사관리 및 연봉인상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인사팀의 잘못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

○ 신입직원 채용 시점별로 상여금(명절상여금 포함) 지급기준이 상이한 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 스마트톨링 전면도입 대비 고용안정 · 직무전환 대책을 마련할 것

○ 영업센터장 지원자격에 공공기관 25년 이상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특정 집단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기존 위원 임기 및 신규 위원 공모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사고 피해자 중심의 공제조합 관리·감독 업무 기능 강화할 것

○ 자동차보험 분쟁조정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인적 구성 중 공제조합 추천 이사가 과도한 부분을 개선할 것

○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인상 등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공제조합의 보험 접수거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개인형 이동장치 책임보험 의무가입 법적장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모 경기도

○ 도봉산-옥정 광역철 전동차 납품 지연이 우려되므로 선금 사용 관리 및 잔고 증빙 확인할 것

○ 지속적인 대금 미지급 중인 다원시스에 대한 선급금 지급률(79.3%)의 적정성 및 지급 경위 확인할 것

○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검토할 것

○ 도시계획이 일몰되어 도시계획선이 사라진 지역에 지자체에서 재정부족으로 도로 설치를 못하는 경우, 경기도의 재정 보조 검토할 것

○ 고양시처럼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한 도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 대해 조례 제정을 권유할 것

○ 학생들의 장시간 통학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검토할 것

○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경기도가 재정을 부담할 것

○ 창릉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후 A부지는 토지매매대금을 반환했는데도 소유권이 라이브시티에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

○ 고양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원형 그대로의 컬처밸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A부지 원상복구 대신 지중파일 재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및 경기분도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행정을 할 것

○ 특별조정교부금 철저히 집행 관리 할 것

○ 남양주 오피스텔 건축자재 라돈 방사선 검출에 대한 경기도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수익금공동관리형으로의 전환에 따라 시군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재정 여건에 맞게 분담 비율 조정 검토할 것

○ 도로파손 예측 AI 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오류 발생 위험을 관리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것

○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 협력할 것

○ 극저신용대출이 대한민국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확산 및 제도보완할 것

○ 경기패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대해 중앙정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할 것

○ 경기 기후보험 피해보상 청구 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 경기도 내 시 간 운행 버스 노선 연장 시 발생하는 배차 간격 증가 문제를 해결할 것

○ 출근시간 경기-서울 간 광역버스 증차 및 2층버스 도입 적극 검토할 것

○ 광역버스 GPS 오류에 따른 요금 과부과 문제 환불 방안 적극 홍보할 것

○ 대규모 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 강화 및 교통난 해결을 위해 용인 경전철 노선 연장 계획 적극 추진할 것

○ 경기동부지역(광주) 규제 합리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개선 로드맵 마련 등 노력할 것

○ 초월 물류단지 주변 차량정체, 차량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325호선 4차로 확장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 및 행정 지원할 것

○ 지방도 325호선의 초월구간을 국도 17호선으로 승격하는 방안 추진할 것

○ 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곤지암IC 방면 신월리~산이리 구간 반영을 검토할 것

○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공공주택단지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확대할 것

○ 지반침하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통한 지반침하 등 예방에

도정 역량 집중할 것

○ ‘경기 프리미엄버스’ 연착륙을 위한 조정의 리더십 발휘할 것

○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내 빈집 활용 강화할 것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할 것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

○ 지반침하에 따른 보상 기준 명확화, 지반 탐사 장비 확보와 지하공간 고위험지도 제작할 것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근거 규정 및 전대 금지 규정 미비에 대한 법적 보완을 추진할 것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발굴 등 대책 마련할 것

○ GTX-C노선 정상화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 광역철도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노력할 것

○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시, 반도체 산업단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기도와 GH 참여를 새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 인천공항 포화 대비를 위해 제7차 공항개발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지방 재정에 영향이 큰 정부의 거래세, 보유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것

○ 경기도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경기도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절대농지 해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상수원 기능을 상실한 유천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추진 SOC 사업, 산업단지 입지 사업 추진 시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지수 차등 적용 검토할 것

○ 안성의 축산냄새 저감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

○ 23년, 24년 국비지원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것

○ 경기도가 땅꺼짐 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할 것

○ 중국인 부동산 거래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자금출처 및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것

보 서울특별시

○ SH의 ㈜한강버스 자금 대여 사유 및 법적 근거 제시할 것

○ ㈜한강버스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대출 과정에서 선박 담보 등기 여부와 담보가치 대비 대출 규모 적정성 확인할 것

○ 서울시가 최근 20년간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추진한 사업 현황, 시금고·구금고 지정 현황 및 관리금액 확인할 것

○ 서울시가 최근 20년간 이랜드 및 ㈜이크루즈와 추진한 사업 현황 확인할 것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점검 및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것

○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당초 설립 목적인 기업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할 것

○ 수도권 상생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경기도 버스의 서울 진입 노선 확대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 협조할 것

○ 서울 진입 경기 버스 노선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일방적 통보 방식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할 것

○ 10.15 부동산 정책 관련 서울시와 정부의 의견 교환 과정 마련할 것

○ 서울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충할 것

○ 9년 재임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그간 시장의 재산 증식에 대한 공직윤리 측면 적정 여부 설명할 것

○ 한강버스의 기후조건·수심 등 운항 적합성 검증, 배터리 화재 안전성·선체 진동·선박 품질검사 등 전반적인 안전대책 보완 등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 한강버스의 폭염 시기 배터리 화재 안전성 성능 시험 및 화재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관련 자료 제출할 것

○ 반지하 일몰제 정책 실적이 저조하여 반지하 매입 기준 및 예산 운용체계에

대한 점검·개선할 것

○ 용산정비창·용산역세권 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사업 착공 부진 등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 보완할 것

○ 약자동행지수의 가중치 반영 방식, 누적 평가 방식 등에 문제가 있어 약자동행지수의 구조 개선할 것

○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이 저출생 대책으로 적정한지 검토할 것

○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체불 임금 및 지연이자 즉시 청산하는 조치를 취할 것

○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 가격 안정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공급 확대할 것

○ 미리내집 정책 수혜자가 버팀목 전세 자금 정책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대출 한도 상향 및 국토부·서울시 정책 조율할 것

○ 한강버스 시범운항 중 발생한 문제 등 한강버스 사고 관련 안전 검증에 대해 서울시가 철저한 조치 및 관리·감독할 것

○ 한강버스 시범운항 기간 고장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할 것

○ 서울시가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최종 결정했고, 서울시의 행정력 또한 투입되었으므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 보일 것

○ 재개발·재건축 정책 진행 시 과거 뉴타운·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의 갈등 사례 등 부작용을 성찰하며 추진할 것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과정에서 국토부와 사전 논의할 것

○ SH공사가 컴포트레터를 통해 한강버스 대출을 사실상 보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강버스 사업의 실질적 책임 주체 확인할 것

○ SH공사가 ㈜한강버스에 대한 상환권리를 금융기관 후순위로 잡은 것은 배임 소지 있어, 특혜 제공에 대한 해명할 것

○ 조타기 고장, 화장실 역류, 발전기 고장, 한강버스의 클러스터 미작동 등 잦은 고장,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대책 재검토할 것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한강버스의 승선명부 작성 제외에 대해 개선 조치할 것

○ 한강버스 사고 시 서울시 예인선(10t)으로 한강버스(169t) 예인이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출 및 개선할 것

○ 10.15 대책에 따른 모든 자치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타당 여부, LTV 축소로 주거 양극화 우려, 전월세 시장 불안, 규제 풍선효과에 따른 가격 왜곡 등에 대해 서울시 입장 표명할 것

○ 10.15 대책 등 중앙정부의 규제 중심 기조 속에서 정비사업의 속도와 공급 확보 및 실수요자 시장 진입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할 것

○ 정비구역 지정 취소되어 공급절벽 발생 중으로 서울시 차원의 해소 방안 마련할 것

○ 관광객 수 증가 고려하여 서울시-강화 간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 지속 추진 의지 확인 및 서울-강화 간 버스 도입할 것

○ 한강버스 비용 충당을 위한 수익 창출 방안 및 지속적인 안전점검 계획 마련할 것

○ 기후동행카드의 막대한 손실금에 대한 대책 및 정부의 K패스 개편에 따른 기후동행카드 운영 방식 검토할 것

○ 배터리 열폭주 상황에서 선장의 즉각적 판단 어렵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 시 프로세스 개선할 것

○ 세계적 기업 제품에도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므로, 한강버스 배터리 화재 문제 꼼꼼히 점검할 것

○ 한강버스와 관련하여 저수심으로 인해 실제로 강 바닥면과 여유 공간 부족할 우려 있다는 점 고려할 것

○ 해도 작성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도 제작할 것

○ 부동산 매물 확대를 위해 거래세 낮추는 방안 검토할 것

○ 6.27 대책으로 6억 이하 주택 실수요자 피해가 크므로, 국토부가 서울시와 협의하여 부동산 정책을 재고할 것

○ 서울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은마아파트 폭파 철거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공급절벽 문제 해결할 것

○ 신속통합기획 착공률 제로 등 비판이 있으니 서울 집값은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자세 보일 것

○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잘 따르도록 서울시의 감독의무 충실 이행할 것

○ 능력 부족 및 실적이 없는 회사에 대한 한강버스 하도급의 적정성 확인할 것

○ 선박 계약 경과 및 홍보비 사전 집행에 대한 적정성 검토할 것

○ 홍성태 한양대 교수 컴투스 감사 재직 시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관련 연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해명할 것

○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 교통 불편, 주민 반대 등을 볼 때 정책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

○ 한강버스, 서부간선도로,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해제 모두 민간의 반사이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서부간선도로 관련 반사이익 발생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할 것

○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다원시스 5·8호선 298칸 전동차 계약 선금 588억 원의 불명확한 사용내역 및 납품기한 관리 실패와 9호선 24칸 추가 계약 과정 중 제작 기술평가·신용등급 평가·입찰제도 등의 문제점, 냉난방 배전반 열화사고 등 부실 제작에 대한 점검 및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선금 반환 청구 등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 지반침하 위험지도 대시민 공개 및 국토부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를 위해 협력할 것

○ 21년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 감소를 고려하여 주택 공급 정책 방향 수정할 것

○ 전동차 입찰방법 개선 관련 국가적 제도 개선 이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제한경쟁으로 보완하는 방법 검토할 것

○ 서울지하철 멈춤사고 관련 안전한 도시철도를 위해 제작 능력 검증된 업체와 계약할 것

○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세입자 이탈과 주거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추진 시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할 것

○ 특별사법경찰관 확대를 통한 단속보다 상생·협력 중심의 노점상 관리 정책 마련할 것

○ 건설 노동자 숙련공 의무배치사업인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시범사업 중인데, 정식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 검토할 것

○ 영동지하차도 건설 현장 노동자 근무시간 및 재해 발생 건수 과다, 표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서울시 발주공사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 지하철 9호선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초기 진압 및 대피 유도 어려운 점 고려하여 적정인력 배치할 것

○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에도 실제 주택 공급 확대 추진 성과 미흡, 이해관계 조정 등 실현 가능성 검토를 통해 사업 속도 제고할 것

○ 현재 서울시는 지하지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국토부 연계 등을 통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싱크홀 안전지도) 공개할 것

○ 서남집단에너지의 SPC 전환은 당초 서울시 출자 규모 이행, SPC 전환 적정성에 대한 용역 결과 확인 후 판단할 것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부실 행정에 대해 감사할 것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행정 소홀과 관리 미흡에 따른 관계자를 징계할 것

○ 싱크홀 문제 관련 정보 시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고, 사고 발생 원인 및 관련 정보 상시 모니터링 및 활용 체계 구축으로 시민 안전 강화할 것

○ 상하수도 60%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예산을 빠르게 투입하여 상하수도로 인한 싱크홀 방지할 것

○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다중인파밀집 지역 등을 비롯한 위험지역에 차량용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를 설치하고, 위험지역 판단기준 및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 등을 고도화하기 위한 절차 및 매뉴얼 수립할 것

○ 서울·지방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런 협업 지자체 확대 등 지방과의 동행 추진할 것

○ 한강버스 관련 안전 문제에 대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할 것

5. 증인 및 참고인

가 기관증인

(1) 기관증인 총괄

수 감 기 관	기관장	기관장 등 (인)	비 고
국토교통부	김윤덕	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강주엽	4	공석 1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5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11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12	
한국철도공사	(공 석)	14	공석 1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11	
한국공항공사	(공 석)	8	공석 1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8	
주택도시보증공사	(공 석)	5	공석 2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6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 석)	4	공석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정희	6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7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9	
㈜에스알	이종국	6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동민	5	
주택관리공단	방성민	4	공석 1
코레일관광개발㈜	권백신	4	
코레일로지스㈜	한상덕	3	
코레일네트웍스㈜	전찬호	4	
코레일유통㈜	박정현	4	공석 1
코레일테크㈜	류영수	4	
항공안전기술원	황호원	5	공석 1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6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김복환	6	
건설기술교육원	권대철	5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정형교	6	
국립항공박물관	박연진	4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석봉준	1	공석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하대성	5	
경기도	김동연	50	
서울특별시	오세훈	47	

(2) 기관별 기관증인 현황

1. 국토교통부 (50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장관	장관(정무직)	김 윤 덕
2	제1차관	차관(정무직)	이 상 경
3	제2차관	차관(정무직)	강 희 업
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차관급(정무직)	김 용 석
5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문 성 요
6	국토도시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상 주
7	주택토지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규 철
8	교통물류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엄 정 희
9	항공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주 종 완
10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홍 목
1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수 상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상 문
13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지 홍
14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 석 환
15	건설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남 영 우
16	도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우 제
17	철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윤 진 환
18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석 기
19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상 일
20	비상안전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경 진
21	국토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지 연
22	도시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우 진
23	건축정책관(직무대리)	부이사관	문 석 준
24	국토정보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정 수
25	주택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헌 정
26	주거복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기 봉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27	토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준 형
28	기술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태 병
29	종합교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채 교
30	물류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근 오
31	항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영 국
32	항공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 경 수
33	공항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홍 락
34	철도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의 경
35	공공주택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배 성
36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정 희
37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한 성 수
38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신 윤 근
39	12.29 여객기참사피해자 지원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방 현 하
4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재 순
4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장 순 재
4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영 한
43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동 민
44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방 윤 석
45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 경 호
4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전 형 필
47	서울지방항공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권 혁 진
48	부산지방항공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진 철
49	국토지리정보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 우 석
50	항공교통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장 동 철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청 장	차관급(정무직)	강 주 엽
2	차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공 석)
3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상 옥
4	도시계획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효 정
5	시설사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 형 욱

3. 새만금개발청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청 장	차관급(정무직)	김 의 겸
2	차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 홍 남
3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인 권
4	개발전략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성 호
5	개발사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남 궁 재 용

4. 한국토지주택공사 (1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이 한 준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이 범 래
3	부사장	상임이사	이 상 욱
4	주거복지본부장	상임이사	조 경 숙
5	국토도시본부장	상임이사	박 동 선
6	공공주택본부장	상임이사	오 주 헌
7	지역균형본부장	1급	강 오 순
8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	1급	이 상 조
9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김 재 경
10	토지주택연구원장	1급	정 창 무
11	기획조정실장	1급	이 준 호

5. 한국도로공사 (12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함 진 규
2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	이 승 호
3	경영부사장(기획본부장 겸)	상임이사	이 상 재
4	기술부사장(도로본부장 겸)	상임이사	박 건 태
5	교통본부장	상임이사	곽 현 준
6	건설본부장	상임이사	윤 한 수
7	신사업본부장	상임이사	박 중 규
8	관리본부장	1급	이 용 양
9	고객사업본부장	1급	옥 병 석
10	디지털본부장	1급	류 종 득
11	도로교통연구원장	1급	조 남 민
12	기획처장	1급	김 경 중

6. 한국철도공사 (14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 장 (직무대행: 부사장)	상임이사	(공 석)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권 세 호
3	부사장	상임이사	정 정 래
4	안전기술총괄본부장	상임이사	홍 승 표
5	기획조정본부장	상임이사	이 민 철
6	여객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차 성 열
7	전기본부장	상임이사	이 성 형
8	안전본부장	기술1급	장 봉 춘
9	인재경영본부장	사무1급	권 영 주
10	디지털융합본부장	사무1급	윤 재 훈
11	광역철도본부장	사무1급	최 은 주
12	물류사업본부장	사무1급	김 양 숙
13	신성장사업본부장	사무1급	원 형 민
14	차량본부장	기술1급	이 기 철
15	시설본부장	기술1급	김 군 수

7. 인천국제공항공사 (1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이 학 재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장 종 현
3	부사장	상임이사	김 범 호
4	경영본부장	1급	신 가 균
5	운영본부장	상임이사	김 창 규
6	인프라본부장	상임이사	배 영 민
7	운항본부장	1급	우 성 태
8	신사업본부장	1급	이 상 용
9	항공보안단장	1급	조 우 호
10	건설사업단장	1급	김 동 철
11	기획조정실장	2급	양 화 열

8. 한국공항공사 (8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상임이사	(공 석)
2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민 병 삼
3	부사장	상임이사	이 정 기
4	전략기획본부장	상임이사	박 재 희
5	운영본부장	상임이사	손 종 하
6	건설기술본부장	상임이사	윤 영 진
7	안전보안본부장	1급	김 복 근
8	글로컬사업본부장	1급	허 주 희
9	기획조정실장	1급	김 세 훈

9. 한국부동산원 (8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손 태 락
2	감사	상임감사	권 순 일
3	부원장 겸 혁신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유 은 철
4	공시통계본부장	상임이사	김 세 형
5	시장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이 재 명
6	산업지원본부장	상임이사	김 남 성
7	부동산연구원장	1급	김 근 용
8	기획조정실장	1급	이 정 환

10. 주택도시보증공사 (5인, 공석 2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직무대행: 자산관리본부장)	대표이사	(공 석)
2	상근감사위원	상임이사	홍 지 만
3	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자산관리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4	자산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윤 명 규
5	금융사업본부장	관리1급	이 철 완
6	기금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최 종 원
7	기획조정실장	관리2급	김 용 한

11. 한국교통안전공단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이사장	정 용 식
2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김 웅 영
3	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장	상임이사	민 승 기
4	자동차검사본부장	상임이사	오 태 석
5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상임이사	박 선 영
6	기획조정실장	관리1급	박 상 호

12. 국가철도공단 (8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이사장	이 성 해
2	감사	상임감사	유 병 호
3	부이사장	상임이사	임 종 일
4	기획본부장	이사대우	김 공 수
5	시설본부장	상임이사	최 원 일
6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이 현 철
7	SE본부장	상임이사	김 윤 양
8	건설본부장 직무대리	처장	우 기 하

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인, 공석 2)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이사장	이사장	(공 석)
2	감사	상임감사	권 택 용
3	경영기획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4	미래투자본부장	상임이사	곽 진 규
5	산업육성본부장	상임이사	구 병 욱
6	기획조정실장	1급	서 승 모

1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김 정 희
2	부원장	연구위원	권 진 섭
3	국토본부장	수석연구원	박 래 상
4	모빌리티본부장	수석연구원	정 시 교
5	산업진흥본부장	수석연구원	김 성 종
6	기획조정실장	선임연구원	김 종 욱

15. 한국국토정보공사 (7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어 명 소
2	감사	상임감사	이 태 용
3	부사장 겸 기획혁신본부장	상임이사	이 주 화
4	기획혁신본부장	상임이사	고 재 학
5	공간정보본부장	상임이사	심 병 섭
6	경영지원본부장	상임이사	윤 한 필
7	기획조정실장	1급	박 한 진

16. 국토안전관리원 (9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김 일 환
2	재난안전본부장	상임이사	김 태 형
3	경영본부장	상임이사	김 규 선
4	건축시설본부장	상임이사	김 춘 수
5	건설안전본부장	1급	권 철 환
6	기반시설본부장	1급	권 혁 기
7	국토안전기술연구원장	1급	오 종 식
8	국토안전교육원장	1급	문 동 현
9	기획조정실장	2급	박 성 우

17. 주식회사 에스알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종 국
2	감사	상임감사	박 진 이
3	부사장	상임이사	심 영 주
4	전략기획본부장	상임이사	황 현 주
5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정 연 성
6	안전본부장	상임이사	강 병 진

18.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 장	상임이사	한 동 민
2	경영혁신본부장	상임이사	허 대 윤
3	기술품질본부장	상임이사	류 제 택
4	검사품질처장	2급	유 원 종
5	기획혁신처장(직무대리)	4급	윤 국 현

19. 주택관리공단㈜ (4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 장	상임이사	방 성 민
2	감 사	상임감사	유 동 학
3	기획이사	상임이사	(공 석)
4	주거복지이사	상임이사	이 채 우
5	기획전략실장	1급	김 기 호

20. 코레일관광개발㈜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권 백 신
2	승무본부장	상임이사	이 우 현
3	관광레저본부장	상임이사	이 동 규
4	경영관리실장	1급	이 진 호

21. 코레일로지스㈜ (3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한상덕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이용준
3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김범열

22. 코레일네트웍스㈜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전찬호
2	신사업개발본부장	상임이사	김선우
3	역무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임종업
4	전략기획실장	1급	김지하

23. 코레일유통㈜ (4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박정현
2	경영관리본부장 (직무대리: 유통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3	유통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안상덕
4	다원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임일남
5	전략기획본부장	1급	권정택

24. 코레일테크㈜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대표이사	상임이사	류영수
2	경영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신주환
3	기술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김만겸
4	환경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정태균

25. 항공안전기술원 (5인, 공석 1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 장	상임이사	황 호 원
2	기획경영본부장	2급	임 재 현
3	항공안전본부장	2급	채 성 희
4	항공인증본부장	2급	최 용 훈
5	미래항공본부장	1급	강 창 봉
6	기획전략실장	-	(공 석)

26. 새만금개발공사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 장	상임이사	나 경 균
2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김 주 호
3	개발본부장	상임이사	선 기 운
4	사업지원본부장	1등급	백 재 현
5	지속성장본부장	1등급	유 경 식
6	기획조정실장	2등급	김 경 일

27.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	상임이사	김 복 환
2	감사	상임감사	허 태 수
3	전략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이 상 욱
4	사업개발본부장	상임이사	원 병 철
5	투자관리본부장	상임이사	정 기 철
6	기획조정실장	1급	임 흥 섭

28. 건설기술교육원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권 대 철
2	경영지원본부장	본부장	김 우 현
3	교육혁신본부장	본부장	심 민 섭
4	능력개발본부장	본부장	최 상 호
5	경영기획실장	2급	김 용 식

29. 공간정보품질관리원 (6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정 형 교
2	부원장	상임이사	이 미 숙
3	기획전략본부장	2급	이 기 원
4	공공측량심사본부장	1급	신 상 호
5	기본측량검증본부장	2급	정 의 훈
6	기획조정실장	3급	정 병 주

30. 국립항공박물관 (4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관 장	관 장	박 연 진
2	전략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최 수 관
3	학예연구본부장	상임이사	남 성 운
4	기획조정실장	책임급	남 윤 두

31.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1인, 공석 2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사장직무대행	1급	석 봉 준
2	부사장	상임이사	(공 석)
3	본부장	상임이사	(공 석)

3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5인)

- 신문요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원장	상임이사	하 대 성
2	부원장	특1급	김 성 완
3	피해지원본부장	1급	박 옥 근
4	공제감독본부장	1급	신 세 계
5	기획조정부장	2급	백 재 환

33. 경기도(50인)

- 신문요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관한 사항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도지사	정무직	김 동 연
2	행정1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성 중
3	행정2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대 순
4	경제부지사	지방별정직1급상당	고 영 인
5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소방감	최 용 철
6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허 승 범
7	안전관리실장	지방이사관	이 종 돈
8	도시주택실장	지방이사관	손 임 성
9	균형발전기획실장	지방이사관	김 상 수
10	경제실장	지방이사관	정 두 석
11	대변인	지방부이사관	강 민 석
12	홍보기획관	지방부이사관	김 원 명
13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소방준감	강 대 훈
14	경기도서관장	지방부이사관	윤 명 희
15	정책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정 종 국
16	도시개발국장	지방부이사관	이 은 선
17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조 병 래
18	복지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훈
19	보건건강국장	지방부이사관	유 영 철
20	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부이사관	박 래 혁
21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방부이사관	박 종 민
22	미래평생교육국장	지방부이사관	오 광 석
23	여성가족국장	지방부이사관	윤 영 미
24	비상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이 순 구
25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방부이사관	조 장 석
26	평화협력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태 현
27	노동국장	지방부이사관	홍 성 호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28	이민사회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원 규
29	건설국장	지방부이사관	강 성 습
30	교통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광 덕
31	철도항만물류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기 범
32	축산동물복지국장	지방부이사관	이 강 영
33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방부이사관	허 순
34	경제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성 기 철
35	AI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기 병
36	국제협력국장	지방부이사관	박 근 균
37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방부이사관	차 성 수
38	미래성장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박 노 극
39	사회혁신경제국장	지방부이사관	공 정 식
40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지방관리관	김 능 식
41	농업기술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성 제 훈
42	인재개발원장	지방부이사관	김 재 훈
43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보건연구관	이 명 진
44	수자원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윤 덕 희
45	건설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차 경 환
46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지방정무직	강 경 량
47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지방정무직	이 상 로
48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지방정무직	김 정 연
49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지방정무직	이 경 자
50	감사위원장	지방부이사관	안 상 섭

34. 서울특별시 (47인)

- 신문요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1	시장	지방정무직	오 세 훈
2	행정1부시장	정무직	김 태 균
3	행정2부시장	정무직	김 성 보
4	정무부시장	지방정무직	김 병 민
5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상 훈
6	경제실장	지방관리관	주 용 태
7	복지실장	지방관리관	윤 종 장
8	교통실장	지방관리관	여 장 권
9	재난안전실장	지방관리관	한 병 용
10	주택실장	지방관리관	최 진 석
11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지방이사관	마 채 숙
12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홍 영 근
13	자치경찰위원장	지방정무직	이 용 표
14	시의회사무처장	임기제지방관리관	김 용 석
15	대변인	임기제지방이사관	이 민 경
16	홍보기획관	지방이사관	민 수 홍
17	감사위원장	지방이사관	박 재 용
18	기후환경본부장	지방이사관	권 민
19	문화본부장	지방이사관	김 태 희
20	도시공간본부장	지방이사관	조 남 준
21	균형발전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김 창 규
22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방이사관	안 대 희
23	서울아리수본부장	지방관리관	이 회 승
24	미래한강본부장	지방이사관	박 진 영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25	관광체육국장	지방이사관	구 종 원
26	평생교육국장	지방이사관	정 진 우
27	시민건강국장	지방이사관	이 동 률
28	민생노동국장	지방이사관	이 해 선
29	디지털도시국장	지방이사관	강 옥 현
30	행정국장	지방이사관	곽 종 빈
31	재무국장	지방부이사관	이 상 훈
32	민생사법경찰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현 중
33	정원도시국장	지방이사관	이 수 연
34	물순환안전국장	지방부이사관	정 성 국
35	글로벌도시정책관	지방부이사관	김 수 덕
36	비상기획관	임기제지방이사관	김 명 오
37	미래청년기획관	임기제지방부이사관	김 철 희
38	미래공간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임 창 수
39	디자인정책관	임기제지방부이사관	최 인 규
40	건설기술정책관	지방이사관	김 승 원
41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지방정무직	김 원 환
42	서울교통공사 사장	상임이사	백 호
43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한 국 영
4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상임이사	문 영 표
4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상임이사	황 상 하
46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상임이사	황 보 연
47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권 완 택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1) 일반증인 및 참고인 현황

출석일	출석 기관 (출석 장소)	성명	구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 (감정사항)	출석 여부	비고 (불출석 사유)
10.13. (월)	국토 교통부 등 (국회)	이봉관	증인	서희건설 회장	주택공급, 건설정책 등 구조적 문제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불출석	건강상의 이유
		김원철	증인	서희건설 대표	주택공급, 건설정책 등 구조적 문제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출석	
		한만희	증인	해외건설협회 협회장	해외 ODA 사업 관련	출석	
		이상화	증인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 관련 진상규명	출석	
		류긍선	증인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택시영업 독과점, 갑질 등 및 대통령실 특혜 의혹 배회운행 부당청구 등	출석	
		김보현	증인	대우건설 대표	건설사고 증가 등	출석	
		이한우	증인	현대건설 대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일방 파기 문제 및 윤석열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	출석	
		조태제	증인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	건설사고 증가 등	출석	

출석일	출석 기관 (출석 장소)	성명	구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 (감정사항)	출석 여부	비고 (불출석 사유)
		주우정	증인	현대 엔지니어링 대표	건설사고 증가 등	출석	
		송치영	증인	포스코이앤씨 사장	건설사고 증가 등	출석	
		김호덕	참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 부산 이사장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등 부당 수수료 부과	출석	
		김준언	참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 대전 이사장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등 부당 수수료 부과	출석	
		이철빈	참고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 등	출석	
		양치승	참고인	바디 스페이스 대표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중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대책요구 사항 청취	출석	
		김유진	참고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여객기 참사 관련	출석	
10.20.(월)	서울특별시(서울)	양치승	참고인	바디 스페이스 대표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중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대책요구 사항 청취	출석	

출석일	출석기관(출석장소)	성명	구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감정사항)	출석여부	비고(불출석사유)
10.21.(화)	한국철도공사 등(대전)	박선순	증인	㈜다원시스 대표	철도차량 제작 및 납품지연, 열차 납품 관련	출석	
		김정훈	증인	현대로템 본부장	철도차량 입찰 담합, 대기업 갑질 등	출석	
10.23.(목)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국회)	정충진	증인	법무법인 열린 대표	전세사기 물건 경매 관련	출석	
10.29.(수)	국토교통부 등(국회)	조욱래	증인	㈜DSDL 회장	서대전광장 지하개발 관련	불출석	국외출장
		박종혁	증인	인천대교 주식회사 대표	민자대교 수익 관련	출석	
		방종구	증인	신공항 하이웨이 대표	민자대교 수익 관련	출석	
		남동일	증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에 대해 부정적 영향 우려	출석	
		한승구	증인	대한건설협회 회장	건설안전 관련	출석	
		여성찬	증인	DL건설 대표	건설사고 증가 등	출석	
		김이배	증인	제주항공 대표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관련	출석	
		이승열	증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관련	출석	

출석일	출석 기관 (출석 장소)	성명	구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 (감정사항)	출석 여부	비고 (불출석 사유)
		김수현	증인	경동 엔지니어링 상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경위에 대하여 질의	출석	
		김정훈	증인	SK 에코플랜트 부사장	부산-마산 복선전철 피난갱 설치 문제 관련	출석	
		김유진	참고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관련	출석	
		정두회	참고인	대한 토목학회 부·울·경지회 위원	부산-마산 복선전철 피난갱 설치 문제 관련	출석	

(2)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요지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10.13.(월)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	- 서희건설 사옥 11층을 건진법사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용인 보평지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임원 비리에 대한 질의 및 화성 남양지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서희건설이 6.58% 토지 보유를 통해 시공권을 요구하는 것이 조합 사업을 사실상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협회장	- 우즈베키스탄 ODA 사업에 대하여 수원국이 원하지 않는 사업의 우수과제 선정 관련 의혹 질의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났는지에 대한 질의 -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하여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관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 이용 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공정한지, 배회영업 등의 운임에 대해 수수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법에 따라 운영할 것인지, 현재 배회영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중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배회영업에 수수료 미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1년동안 성과가 없는 이유, 배회영업에 수수로 징수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지에 대해 질의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 사망사고 발생 현장 외에 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한 이유, 공사 중단 이후 일반 근로자 및 건설사의 피해 등에 대한 질의 -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입장, 회사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 및 건의사항 등 질의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서 현대건설이 1차~2차(72개월), 3차(84개월)의 공사기간을 알고도 참여한 뒤, 기본설계 단계에서 108개월의 공사기간을 주장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 - 기본설계 기간 동안 필수적인 해상 지반시추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의 지연을 초래한 현대건설이 국책사업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 -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일방 파기로 발생한 국가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 국민 신뢰 훼손 등에 대해 현대건설의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와 대표의 공식적인 사과 의사 여부에 대한 질의 -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포기와 기본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국가적 손실과 신뢰 훼손에 대한 현대건설의 책임과 법적 의무에 대한 질의 - 디앤아이걸설과의 건설공사 유보금 관련 분쟁조정 과정에 대한 검토와 협력사들이 불리한 조치를 당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경영 필요성 지적 - 한남동 관저 공사 하도급계약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미등록 및 영빈관 공사 계약 약속 의혹 관련 질의 - 파인그라스 정원의 수직 콘크리트 흄관 시공과 철거 과정 등 공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 - 한남동 관저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공사비 지급 제안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조사할 의사가 있는지와 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질의 -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입장, 회사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 및 건의사항 등 질의
	조태제 HDC 현대산업 개발 대표	-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입장, 회사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 및 건의사항 등 질의
	주우정 현대 엔지니어링 대표	-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입장, 회사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 및 건의사항 등 질의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 광주광역시-포스코이앤씨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관련 중재심판과 별도의 협의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중대 인명사고로 인해 대통령이 면허 취소를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내부 분위기와 경영진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 - 사망사고 발생 현장 외에 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한 이유, 공사 중단 이후 일반 근로자 및 건설사의 피해 등에 대한 질의 -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입장, 회사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 및 건의사항 등 질의 - 구미 괴평·송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23년 7월 인허가 완료 후 2년간 착공되지 않은 이유와 PF 대출이 만기되는 상황에서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하면 그 다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질의
	김호덕 전국개인 택시운송 조합 부산 이사장	-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 대기영업 등에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질의
	김준언 전국개인 택시운송 조합 대전 이사장	-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 이용 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공정한지, 배회영업 등에 수수료 징수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 질의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	- 전세사기 피해 회복의 편차 문제와 LH 매입 최소 보장, 피해주택의 관리 방안 및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양치승 바디 스페이스 대표	- 기부채납 민자시설에서 운영기간 만료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계약 무효·보증금 미반환·형사고발까지 당하는 문제 등에 대한 질의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 국토교통부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로컬라이저 둔덕 설계 문제, 엔진 문제 등에 대해 관련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 - 유가족대표로서 요청사항, 유가족 입장에 대한 질의
10.20. (월)	양치승 바디 스페이스 대표	- 기부채납 공공시설에서 관리권 이관 시점을 미고지해서 발생한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등의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피해와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질의
10.21. (화)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	- 1차, 2차 납품 지연 중임에도 3차 사업에 입찰하는 것이 법령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한 이유 및 현재 생산 중인지 여부, 향후 납품계획에 대한 질의 - 신사업에 투자하는 전동차 제작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
	김정훈 현대로템 본부장	- 신호제어장치 분야에 진출할 경우 중소기업과의 상생하여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의
10.23. (목)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	- 특정 법인이 전세사기 주택을 낙찰받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송 기간에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의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10.29.(수)	박종혁 인천대교 주식회사 대표	- 영종도, 송도, 청라를 연결하는 3개의 도로가 서로 잘 협업해서 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
	방종구 신공항 하이웨이 대표	- 영종대교, 인천대교, 제3연륙교 중 하나는 무료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질의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제주·김포 등 7개 노선에 대하여 2019년 공급석의 90%를 유지하는 내용의 시정조치가 슬롯 부족과 공항시설 한계로 인해 이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그 부담이 대구-제주 등 지방 노선과 지역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의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제주공항 관련 시정조치가 슬롯 포화 등 항공 운영의 현실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사실상 이행이 어려우므로, 시정조치의 유예·완화 등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 - 철도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시 현대로템에만 특별하게 100% 감면을 한 이유에 대한 질의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현실화 및 적극 협조 필요성 지적 - 건설업계 전체의 안전규칙 준수 및 실질적 이행 노력 병행 필요성에 대하여 건설업계를 대표한 입장 질의
	여성찬 DL건설 대표	- 인덕원~동탄선 서천역 부근 항타기 전도 사고 관련 안전관리 부실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성 지적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 사고기체 이륙 전에 해당 사고기체를 정비한 시간이 28분밖에 되지 않는지, 2024년 엔진 관련 부품이 여덟 차례 교체된 이력, 2018년 제주항공 여객기 전원시스템 문제로 블랙박스 기록 소실 여부 및 이에 대한 대책 미비 등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질의 - 제주항공 대표로서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장 질의 - 블레이드 엔진에 대해 2만 시간 이내로 사용하라는 서비스 불리틴을 고려할 때, 사고기종에서 항공기부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승열 항공철도 사고조사 위원회 조사단장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현행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될 경우 조사인력 및 조사결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중간 결과보고서 발표 시기에 대한 질의 -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결정이 제작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유가족과 충분한 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해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되더라도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과정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김수현 경동 엔지니어링 상무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꿔오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

출석일	대상	질의요지
	김정훈 SK 에코플랜트 부사장	-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이 99% 진행된 상태에서 5년 이상 지체된 원인, 1·2번 피난갱 미시공을 둘러싼 안전·예산·소송 회피 논란, 새로운 건설 설계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의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BTL)에서 피난갱 시공 방식을 둘러싼 원안, 격벽형 대안 등에 대한 질의 -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인 오션플랜트의 지분 대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행위가 경상남도 고성군의 지역경제, 산업생태계와 그간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상생 노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한 질의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가족대표로서 요청사항, 유가족 입장에 대한 질의
	정두회 대한 토목학회 부·울·경 지회 위원	- 부전-마산 복선전철 피난갱을 당초 계획대로 시공할 경우, 낙동강 하구 연약지반·대심도 굴착 공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확률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참 고 자 료

1.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가 소관기관

대상기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	○	○	○	○	○	○	○	○	○	○	○	○	○	○	○	○
새만금개발청													○	○	○	○	○	○	○	○	○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수자원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도로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철도공사(구 철도청)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철도공단 (구 한국철도시설공단, 구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공항공사 (구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구 교통안전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안전관리원 (구 한국시설안전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에스알																		○	○	○	○	○	○	○	○
한국부동산원 (구 한국감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도시보증공사 (구 대한주택보증)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	○	○	○	×	○	○	○	○	○	○	○	○	○	○	○	○	○	○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대한지적공사)	◇							○	×	×	○	○	○	○	○	○	○	○	○	○	○	○	○	○	○
주택관리공단(주)														○	○	○	○	○	○	○	○	○	○	○	○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	○	○	○	○	○	-	-	-	-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	○	○	○	○	○	○
(주)워터웨이플러스														○	○	○	○	-	-	-	-	-	-	-	-
코레일관광개발(주)														○	○	○	○	○	○	○	○	○	○	○	○
코레일로지스(주)														○	○	○	○	○	○	○	○	○	○	○	○
코레일네트웍스(주)														○	○	○	○	○	○	○	○	○	○	○	○
코레일유통(주)														○	○	○	○	○	○	○	○	○	○	○	○
코레일테크(주)														○	○	○	○	○	○	○	○	○	○	○	○
항공안전기술원 (구 항공안전기술센터)														○	○	○	○	○	○	○	○	○	○	○	○
새만금개발공사																			○	○	○	○	○	○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	○	○	○	○	○
건설기술교육원																					○	○	○	○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	○	○	○
국립항공박물관																					○	○	○	○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	○	○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 타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로 이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020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

나 소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기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지방국토관리청	서 울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익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	×	×	×	×	×	×	×	×	×	×	ㅊ	×	×	×	×	×	×
경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충청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충청남도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라남도		x (미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상남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국정감사 실시(○ -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 국정감사 미실시, △ 서면감사 실시, ※ 배석